

발 간 등 록 번 호

11-1611000-001451-14

#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

## 2011~2020



대한민국정부

## 대통령공고 제224호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2011~2020)을  
국토기본법 제12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에 공고한다.

대 통 령 이 명 박

2011년 1월 27일

국 무 총 리	김 황 식
국무위원 국토해양부장관	정 종 환

# 차 례

## 제1편 계획 수립의 배경

제1장 계획 수립의 배경 및 필요성 .....	1
1. 계획 수립의 배경 .....	1
2. 계획의 법적 근거와 범위 .....	2
제2장 국토의 여건과 전망 .....	4
1. 국토의 현황 .....	4
2. 여건변화 전망 .....	10
3. 국토의 현안문제 및 과제 .....	15

## 제2편 계획의 기본방향

제1장 계획의 비전과 목표 .....	23
1. 계획의 비전 .....	23
2. 국토형성의 기본목표 .....	24
3. 국토공간 형성 방향 .....	25
제2장 6대 추진전략 .....	28

## 제3편 전략별 추진계획

제1장 국토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역특화 및 광역적 협력 강화 .....	35
1. 현황과 문제점 .....	35
2. 여건변화 전망 .....	37
3. 추진과제 .....	40

제2장 자연친화적이고 안전한 국토공간 조성 .....	57
1. 현황과 문제점 .....	57
2. 여건변화 전망 .....	59
3. 추진과제 .....	61
제3장 쾌적하고 문화적인 도시·주거환경 조성 .....	76
1. 현황과 문제점 .....	76
2. 여건변화 전망 .....	79
3. 추진과제 .....	82
제4장 녹색교통·국토정보 통합네트워크 구축 .....	93
1. 현황과 문제점 .....	93
2. 여건변화 전망 .....	96
3. 추진과제 .....	99
제5장 세계로 열린 신성장 해양국토 기반 구축 .....	116
1. 현황과 문제점 .....	116
2. 여건변화 전망 .....	117
3. 추진과제 .....	118
제6장 초국경적 국토경영 기반 구축 .....	124
1. 현황과 문제점 .....	124
2. 여건변화 전망 .....	125
3. 추진과제 .....	126

## 제4편 집행 및 관리

1. 현황과 문제점 .....	135
2. 여건변화 전망 .....	139
3. 추진과제 .....	141

## 제5편 권역별 발전방향

제1장 수도권 .....	147
제2장 충청권 .....	152
제3장 호남권 .....	156
제4장 대경권 .....	161
제5장 동남권 .....	165
제6장 강원권 .....	169
제7장 제주권 .....	173

## [ 부 록 ]

부록 1. 2020년의 국토지표 .....	181
부록 2.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2006 ~ 2020)과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2011 ~ 2020)의 비교 .....	182

# 표 차 례

<표 I-1> 우리 국토의 현황 .....	4
<표 I-2> 출산율 추이 .....	6
<표 I-3> 도시화 추세 .....	6
<표 I-4> 외국인 직접투자 및 경상수지 .....	6
<표 I-5> 용도지역 지정 현황(2009년) .....	7
<표 I-6> 지목별 토지이용 현황 .....	8
<표 I-7> 도로 현황(2009년) .....	9
<표 I-8> 철도 복선화율 및 전철화율 비교 .....	9
<표 I-9> 공항 수송 현황(2009년) .....	9
<표 I-10> 국토기반시설 현황(2009년) .....	11
<표 I-11> 세계 주요 국가의 성장률과 명목 GDP 추이 .....	14
<표 I-12> 동북아 주요 국가의 외국인 투자유치 잠재력 및 성과지수 .....	16
<표 III-1> 지역별 인구분담 비중 .....	3
<표 III-2> 초광역개발권의 개발방향 .....	4
<표 III-3> 세종시 이전기관 .....	8
<표 III-4> 혁신도시 및 기업도시 개발방향 .....	9
<표 III-5> 강·산·해 통합 국토관리네트워크 구축 .....	16
<표 III-6> 4대강 살리기의 유역별 핵심사업 .....	19
<표 III-7> 전국 도시 중심시가지 인구 변화 유형 .....	16
<표 III-8> 노인부부 가구 및 1인 가구 변화 추이 .....	17
<표 III-9> 우리나라 도시규모별 인구 감소 현황(2001~2005년) .....	197
<표 III-10> 생활권 범위별 문화시설 설치 기준(예시) .....	168
<표 III-11> 교통부문 우리나라 국가경쟁력 순위 .....	19

<표 III-12> 광역경제권별 거점항만 및 주요 기능 .....	10
<표 III-13> 해양산업클러스터 개발 유형 .....	19
<표 IV-1> 민간투자에 따른 재정부담 규모 전망 .....	13
<표 IV-2> 민선 이후 지자체 및 중앙-지방간 분쟁 발생 추이 .....	10

## 그림차례

<그림 I-1> 고령인구(65세 이상 인구) 비율 변화 추이 .....	5
<그림 I-2> 산업별 국내총생산 비중 변화 추이 .....	7
<그림 I-3> 연도별 자연재해 피해 현황 .....	1
<그림 I-4> 외국의 광역경제권 사례 .....	2
<그림 I-5> 총인구의 감소 및 고령사회 진입 .....	2
<그림 II-1> 계획의 기본 틀 .....	3
<그림 II-2> 유라시아-태평양의 전략적 요충지 .....	5
<그림 II-3> 국토 형성의 기본골격 .....	7
<그림 III-1> 광역경제권 30대 선도프로젝트 .....	9
<그림 III-2> 개방형 초광역개발축 .....	2
<그림 III-3> 도시권 육성 전략 .....	4
<그림 III-4>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및 지역전략산업 .....	5
<그림 III-5> 문화관광권역 및 관광벨트 .....	5
<그림 III-6> 최근 10년(1997~2006년)간 자연재해 및 인적재해 발생 추이 .....	85
<그림 III-7> 강·산·해 통합 국토관리네트워크 개념도 .....	9
<그림 III-8> 국토녹색길 개념도 .....	6
<그림 III-9> 3G 선순환형 녹색국토를 위한 패러다임 전환 .....	7
<그림 III-10> 녹색성장시대의 성장동력산업 .....	7
<그림 III-11> 하천문화 창출 개념도 .....	9
<그림 III-12> 통합방재시스템 구축 모형 .....	3
<그림 III-13> 단계별 그린홈 보급계획 .....	9
<그림 III-14> 기술융합시대의 국토정보시장 범위 .....	9
<그림 III-15>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	10



<그림 III-16> 간선도로망 구축계획 .....	12
<그림 III-17> 연계교통을 통한 Intermodalism 구현 .....	103
<그림 III-18> 대중교통과 자전거 연계성 제고 개념도 .....	15
<그림 III-19> 첨단 녹색교통수단 개발 .....	16
<그림 III-20> 스마트 하이웨이 개념도 .....	17
<그림 III-21> 복합환승센터 유형 .....	17
<그림 III-22> 포트 비즈니스 밸리 개념 및 구축 사례(안) .....	11
<그림 III-23> 남북교류·접경벨트 종합관리계획(안) .....	16
<그림 III-24> 아시안 하이웨이 .....	18
<그림 III-25> 철도의 동북아 및 유라시아 확장 구상 .....	19
<그림 III-26> 유라시아·태평양 시대의 국제항공네트워크 확대 노선망 .....	13
<그림 IV-1> 현행 국토계획 및 지역발전계획 체계 .....	15
<그림 IV-2> 지역개발사업의 하향식·중층적 추진구조 개념도 .....	16



# 제1편 계획 수립의 배경

제1장 계획 수립의 배경 및 필요성

제2장 국토의 여건과 전망



# 제1장 계획 수립의 배경 및 필요성

## 1. 계획 수립의 배경

-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2006~2020) 수립 이후 진행되고 있는 국내외 여건 변화와 새로운 국가발전전략 및 정책기조 대두에 능동적으로 대응 필요
- 기후변화 대응 및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새로운 국토발전전략을 국토계획에 반영
  - － 전지구적 기후변화와 에너지·식량 등 자원문제 심화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과 재해 대응을 위한 국토관리방안 수립 필요
  - － 녹색성장 국가전략 수립 및 4대강 살리기 사업 등을 계기로 신성장동력 창출을 통한 지역 발전잠재력 제고와 지역특화발전 도모
  - － 녹색성장의 기반으로서 해양영토 관리 및 해양자원의 적극적 활용전략 마련 필요
- 글로벌 경쟁체제의 심화에 대응한 개방적 국토기반 형성전략을 국토계획에 반영
  - － 전방위적 FTA 확산, 초국적 협력·경쟁 증대, 아시아 경제권의 규모 확대 등에 대응하여 국토경쟁력 강화 및 개방형 국토전략 필요
  - － 지역간 산술적 균형 중심에서 광역경제권 중심의 국가경쟁력을 제고하는 새로운 지역발전 전략으로 전환됨에 따라 이를 지원·보완할 수 있는 전략 마련 필요
  - － 경부고속철도 2단계 개통, 호남고속철도 착공 등 초고속·친환경 교통망 시대에 부합하는 국토전략 마련 필요
- 저출산·고령화 등 다양한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에 부합하는 새로운 국토전략을 국토계획에 반영
  - － 인구 감소 및 고령화 시대의 도래와 이에 따른 사회·경제적 변화에 대응한 새로운 국토 정책 패러다임 제시 필요
  - － G20 정상회담 개최, ODA<sup>1)</sup> 확대 등 국가품격 제고에 부합하는 국토구조 형성 필요
  - － 첨단정보화·유비쿼터스 시대 도래에 대응하는 미래지향적 국토구조로 개편 필요

1) ODA :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공적개발원조. 중앙 및 지방정부 등 공공기관이 개발도상국의 경제 발전과 복지 증진을 주된 목적으로 개발도상국에 공여하는 증여 및 차관을 의미.

## 2. 계획의 법적 근거와 범위

### □ 법적 근거

- 국토종합계획은 국토기본법에 의거하여 수립되는 국토의 이용·개발 및 보전에 관한 최상위 계획으로서, 군사에 관한 계획을 제외하고 다른 법령에 의해 수립되는 국토에 관한 계획에 우선하며 그 기본이 됨

### □ 계획의 범위

- 시간적 범위 : 2011 ~ 2020년
- 공간적 범위 : 대한민국의 주권이 실질적으로 미치는 국토 전역을 대상으로 하며, 필요시 한반도 및 동아시아로 확대

#### < 국토종합계획 수정의 법적 근거(국토기본법) >

**제 6 조** 국토종합계획은 국토를 이용·개발·보전함에 있어서 미래의 경제적·사회적 변동에 대응하여 국토가 지향하여야 할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임

**제19조** 국토해양부장관은 사회적·경제적 여건변화를 고려하여 5년마다 국토종합계획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필요할 경우 이를 정비해야 함

### □ 계획의 성격

-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2006 ~ 2020)에서 표방하고 있는 「약동하는 통합국토 실현」을 기반으로 대내외적인 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새로운 국토전략을 제시하는 최상위 공간계획으로서 성격을 가짐
  - －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2006 ~ 2020) 수립 이후 기후변화 등 국토를 둘러싼 전 세계적 메가트렌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새로운 정책기조 변화와 이슈를 국토계획에 접목
- 본 계획(2011 ~ 2020)은 현행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2006 ~ 2020)을 대체하고, 향후 수립될 각종 공간계획의 기본이 되며, 각 부문별계획과 지역계획, 광역경제권 계획 등은 본 계획에서 제시하는 방향과 조화를 이루어야 함

< 국토종합계획의 연혁 >

- 제1차 국토종합개발계획 (1972 ~ 1981년)
- 제2차 국토종합개발계획 (1982 ~ 1991년)
- 제2차 국토종합개발계획 수정계획 (1987 ~ 1991년)
-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 (1992 ~ 2001년)
- 제4차 국토종합계획 (2000 ~ 2020년)
-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 (2006 ~ 2020년)
  - ※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2006 ~ 2020)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등으로 인한 국토공간구조 변화 반영, 남북 교류협력 확대 및 대외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국토전략 제시를 위해 수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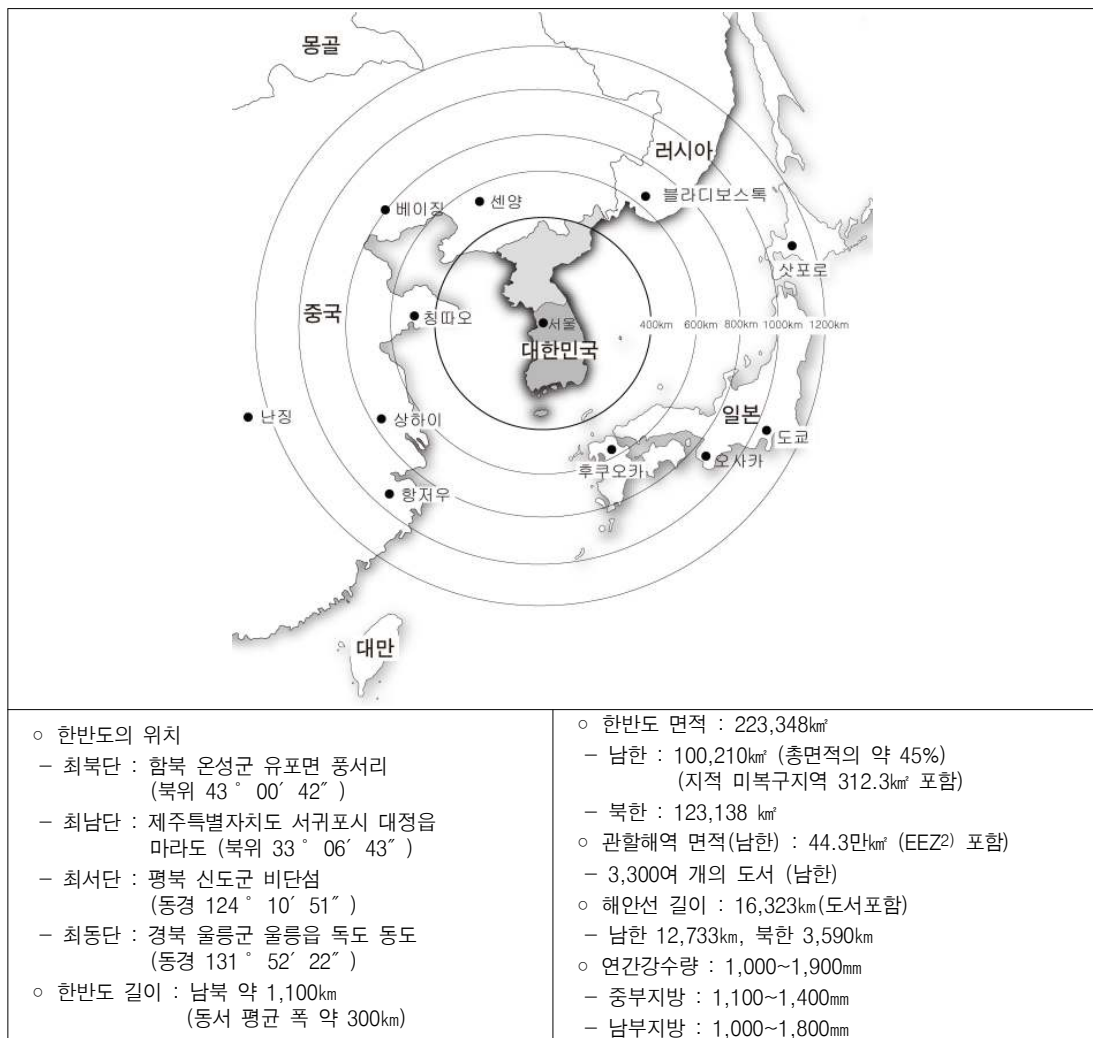
## 제2장 국토의 여건과 전망

### 1. 국토의 현황

#### (1) 지리적 여건과 자연환경

- 우리나라는 한반도에 입지한 반도국가로서 육지부와 3,300여 개의 도서로 구성되어 있으며, 국토 면적은 100,210km<sup>2</sup>(남북한 전체로는 223,348km<sup>2</sup>)임
- 해안선의 길이는 12,733km(도서 포함)이며, 관할해역 면적은 44.3만 km<sup>2</sup>임

<표 I-1> 우리 국토의 현황



자료 : 국토해양부. 2010. 「2010년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연차보고서」.

- 2) 1994년 발효된 UN 해양법 협약에 따라 연안국(沿岸國)의 경제주권이 인정되는 수역으로서, 영해 기선(基線·출발선)으로부터 2백 해리(1해리=1.85km) 범위 내의 해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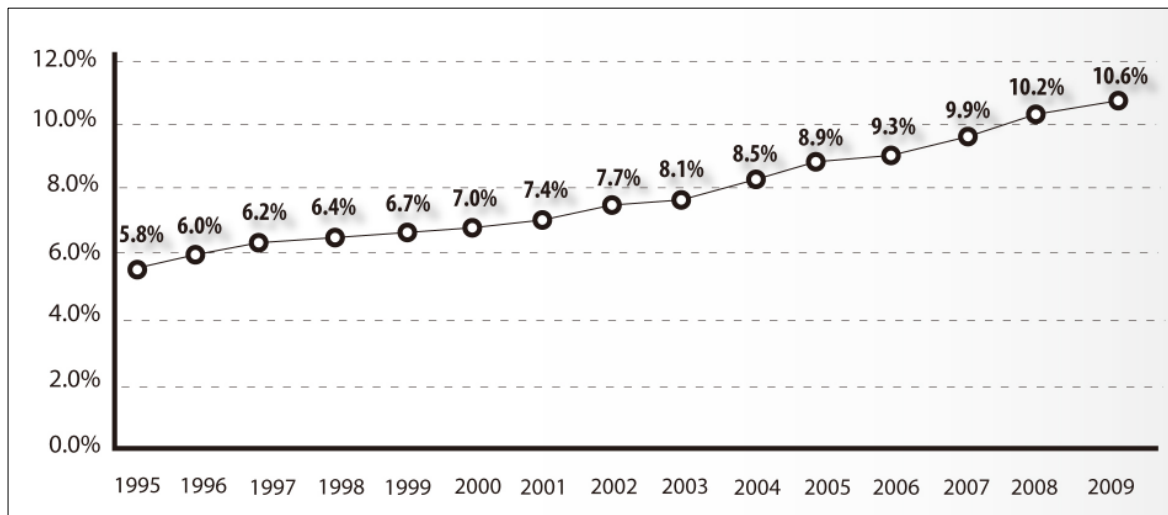


- 백두대간이 한반도 남북으로 길게 뻗어 있는 동고서저의 지형을 형성하고 있으며, 국토의 약 2/3가 산지로 구성되어 가용 토지가 제한되어 있음
- 1인당 연 강수량은 2,591㎥로 세계 평균(1만 9635㎥)의 약 1/8수준에 불과하고, 연 강수량의 2/3가 홍수기인 6~9월에 집중
- 천연자원 보유량이 빈약하여 외국수입 의존도가 매우 크나, 3면이 바다에 접하고 있어 해양자원은 비교적 풍부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음

## (2) 인구와 경제활동

- 2009년말 현재 우리나라의 인구(남한 기준)는 4977만 명이며, 출산율의 저하로 인구 성장이 둔화되고 고령화 현상이 급속히 진전
  - 출산율은 1970년 4.5명에서 2009년 1.2명으로 감소함에 따라 인구증가율도 크게 감소
  - 기대수명은 80.1세(2008년)이며, 65세 이상 인구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9년말 기준으로 10.6%(약 527만 명)수준<sup>3)</sup>

<그림 I-1> 고령인구(65세 이상 인구) 비율 변화 추이



3)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http://www.kosis.kr>).

<표 I-2> 출산율 추이

구 분	1970년	1980년	1990년	2000년	2009년
합계출산율(명)	4.53	2.83	1.59	1.47	1.15

자료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http://www.kosis.kr>).

◦ 도시인구 증가가 지속되어 2009년 도시화율은 90.8% 수준

- 2009년 기준 도시인구는 4518만 명으로 1970년에 비해 약 3배 이상 증가하여 도시화율이 1970년의 50.1%에서 90.8%로 상승

<표 I-3> 도시화 추세

(단위 : 천명)

구 분	1960년	1970년	1980년	1990년	2000년	2009년
전국인구	24,989	31,435	37,449	43,390	47,964	49,773
도시인구	9,784	15,750	25,738	35,558	42,375	45,182
농촌인구	15,205	15,685	11,711	7,832	5,579	4,591
도시화율	39.1%	50.1%	68.7%	81.9%	88.3%	90.8

주 : 도시인구는 2000년까지는 도시계획구역 내에 거주하는 인구이며, 그 이후는 도시지역내 거주하는 인구.

자료 : 국토해양부. 2010. 「2010년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연차보고서」.

- 2009년 기준 국내총생산(명목 GDP)은 약 1063조 원(8330억 달러), 1인당 국민총소득(명목 GNI)은 약 2192만 원(17,175달러)<sup>4)</sup>이나 외국인 직접투자(FDI)는 15.1억 달러, 경상수지는 427억 달러 수준<sup>5)</sup>

<표 I-4> 외국인 직접투자 및 경상수지

구 분	2000년	2005년	2009년
외국인 직접투자(FDI)	92.8억 달러	63.1억 달러	15.1억 달러
경 상 수 지	122.5억 달러	149.8억 달러	426.7억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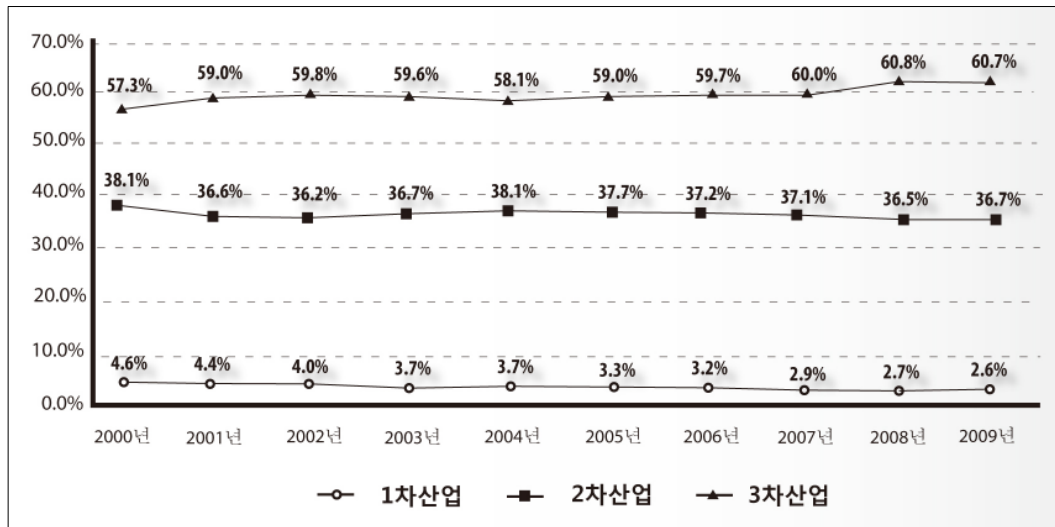
- 2009년 기준 산업별 국내총생산은 1차 산업 2.6%, 2차 산업 36.7%, 3차 산업 60.7%

- 농·림·어업 등 1차 산업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제조업 부문은 큰 변동 없이 정체 상태이나 서비스업 부문은 지속적으로 비중이 확대되고 있음

4) 한국은행. 2010. 「경제통계연보」.

5) 한국은행 경제통계 시스템 (<http://ecos.bok.or.kr>).

<그림 I-2> 산업별 국내총생산 비중 변화 추이



자료 : 한국은행. 2010. 「경제통계연보」.

### (3) 국토이용과 공간구조

- 용도지역별로는 전 국토의 48.3%가 농림지역으로 지정되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도시지역은 16.5%를 차지함
- 관리지역은 24%, 자연환경보전지역은 11.2%가 지정되어 있음

<표 I-5> 용도지역 지정 현황(2009년)

(단위 : km<sup>2</sup>, %)

구 분	계		육 지		해 면	
	면 적	비율	면 적	비율	면 적	비율
합 계	105,593.9	100.0	100,167.6	100.0	5,426.3	100.0
도 시 지 역	17,420.2	16.5	16,443.7	16.4	976.5	18.0
관 리 지 역	25,283.3	24.0	25,268.9	25.2	14.5	0.3
농 립 지 역	51,019.1	48.3	51,019.1	51.0	-	-
자연환경보전지역	11,871.3	11.2	7,435.9	7.4	4,435.3	81.7

주 : 시·도별 중복지정면적 포함.

자료 : 국토해양부. 2010. 「2010년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연차보고서」.

- 지목별로는 대지, 공장용지, 공공용지 등의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9년 현재 전 국토의 6.6%가 도시적 용지로 이용되고 있음
- 산지는 지목별 면적의 64.5%, 농지는 20.9%를 차지하고 있음

<표 I-6> 지목별 토지이용 현황

(단위 : km<sup>2</sup>)

구 분	1995년	2000년	2005년	2009년
전 국	99,286 (100.0%)	99,461 (100.0%)	99,646 (100.0%)	99,897 (100.0%)
도시적 용지	4,850 (4.9%)	5,499 (5.5%)	6,101 (6.1%)	6,638 (6.6%)
대 지	2,124 (2.1%)	2,349 (2.4%)	2,533 (2.5%)	2,706 (2.7%)
공장용지	386 (0.4%)	514 (0.5%)	622 (0.6%)	720 (0.7%)
공공용지	2,340 (2.4%)	2,636 (2.7%)	2,946 (3.0%)	3,212 (3.2%)
산 지	65,506 (66.0%)	65,139 (65.5%)	64,805 (65.0%)	64,472 (64.5%)
농 지 (목장포함)	21,989 (22.1%)	21,596 (21.7%)	21,216 (21.3%)	20,845 (20.9%)
기 타	6,826 (6.9%)	7,109 (7.1%)	7,524 (7.6%)	7,943 (8.0%)

주 1) 농지는 전, 답, 과수원. 산림지는 임야, 기타는 하천까지 포함.

2) 지적 미복구지역의 면적(12.4km<sup>2</sup>) 미포함.

자료 : 국토해양부. 2010. 「2010년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연차보고서」 재구성.

#### (4) 국토기반시설

- 2009년말 현재 우리나라의 도로연장은 총 104,983km으로 1970년 40,244km에서 약 2.6배 증가
  - － 고속국도 3,776km, 일반국도 13,819km, 특별·광역시도 18,749km, 지방도 18,138km, 시·군도 50,501km로 구성
  - － 인구당 도로연장은 2.2km/천인으로 일본 9.4km/천인, 미국 20.8km/천인, 영국 6.8km/천인과 비교하면 아직도 미흡한 수준<sup>6)</sup>

6) 우리나라는 2009년 기준, 외국의 경우 2007년 기준.

<표 I-7> 도로 현황(2009년)

구 분	연장(km)	포장율(%)	도 로 성 격
고속국도	3,776	100.0	거점간 신속한 이동
국 도 (市 관내)	13,819 (2,402)	97.4	
지방도 등	87,388	75.5	접근 편이성
계	104,983	79.2	-

자료 : 국토해양부. 2010. 「2010년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연차보고서」.

- 철도연장은 3,378km로 외국에 비해 크게 뒤떨어지지만, 복선화율은 43.8%, 전철화율은 55.9% 수준으로 프랑스, 독일, 일본 등과 유사한 수준임
- 2009년 기준 여객 수송실적은 10억 2천만 인/년, 화물 수송실적은 38.9백만 톤/년임

<표 I-8> 철도 복선화율 및 전철화율 비교

구 분	한 국	프랑스	독 일	일 본
연 장(km)	3,378	29,286	34,128	20,052
복선화율(%)	43.8	55.2	49.9	40.2
전철화율(%)	55.9	50.4	56.7	60.9

주 : 한국은 2009년말 기준, 해외는 2007년 기준.

자료 : 국토해양부. 2010. 「2010년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연차보고서」.

- 항만시설은 2010년 현재 무역항 30개, 연안항 25개 등이며, 2009년 기준 무역항의 시설확보율은 102.1%, 하역능력은 7억 5862만 톤(M/T)<sup>7)</sup>임
- 우리나라 공항은 2010년 현재 총 15개소로 국제공항은 8개<sup>8)</sup>, 국내공항 7개<sup>9)</sup>이며, 2009년 총 여객 수송실적은 약 7025만 명, 화물 수송실적은 294만 톤임

<표 I-9> 공항 수송 현황(2009년)

운항횟수(회/년)			여객(명/년)			화물(톤/년)		
계	도착	출발	계	도착	출발	계	도착	출발
527,252	263,588	263,664	70,253,124	35,125,365	35,127,759	2,940,519	1,341,295	1,599,224

자료 : 인천국제공항공사. 2009. 항공통계(2009.1~2009.12); 한국공항공사. 2009. 공항통계(2009.1~2009.12).

7) 국토해양부. 2009. 「2009 국토해양통계연보」 ; 해운항만물류정보센터. 2008. 「항만물동량통계」.

8) 인천국제공항을 포함하여 김포, 김해, 제주, 대구, 무안, 청주, 양양공항이 국제선을 운영하고 있음.

9) 여수, 울산, 사천(진주), 포항, 군산, 원주, 광주공항은 국내선만 운영하고 있음.

- 2008년말 기준 상수도보급률<sup>10)</sup>은 92.7%<sup>11)</sup>이며, 하수도보급률<sup>12)</sup>은 88.6%<sup>13)</sup>임
  - 상수도의 1인 1일당 급수량은 337ℓ<sup>14)</sup>로 2001년 이후 계속 감소 추세이며, 수도관 총연장은 151,293km<sup>15)</sup>임
  - 전국에 가동 중인 하수처리시설은 2,394개소로 500m<sup>3</sup>/일 이상 처리하는 시설은 403개소, 500m<sup>3</sup>/일 미만은 1,991개소로 총 시설용량은 24,568m<sup>3</sup>/일임

#### <표 I-10> 국토기반시설 현황(2009년)

• 도로 총연장 : 104,983km	• 고속국도 연장 : 3,776km
• 일반철도 영업연장 : 3,378km	• 철도 복선화율 : 43.8%
• 항만시설 : 무역항 30개, 연안항 25개	• 공항시설 : 국제공항 8개, 국내공항 7개
• 상수도 보급률 : 92.7%	• 하수도 보급률 : 88.6%

주 : 항만시설은 2010년 기준, 상·하수도 보급률은 2008년 기준.

## 2. 여건변화 전망

### □ 전지구적 기후변화와 자원위기 심화

- 화석연료 사용 및 온실가스 배출 증가에 따른 지구 온난화에 대한 세계적인 관심과 우려가 고조
  - 교토의정서(1997), 발리로드맵(2007)<sup>16)</sup> 등 글로벌 차원의 대응논의 확산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범국가적 대책 요구 심화
  - 탄소배출권 확보, 녹색산업 육성을 위한 범세계적 경쟁이 치열해질 전망

10) 총인구(주민등록인구) 중 급수인구의 비율.

11) 환경부. 2009. 「2008 상수도 통계」.

12) 총인구(주민등록인구) 중 공공하수처리구역인구의 비율.

13) 환경부. 2009. 「2008 하수도 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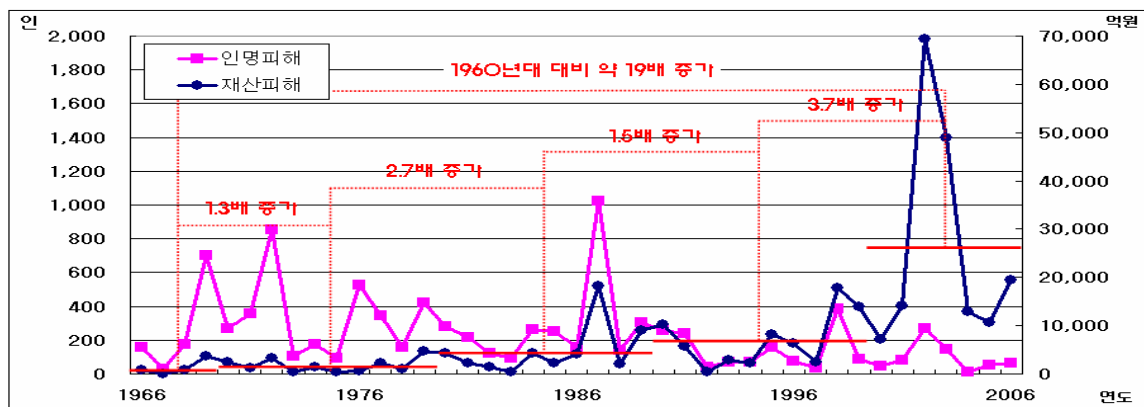
14) 전용 공업용수 제외.

15) 도수관(취수시설→정수장) 3,179km, 송수관(정수시설→배수구역) 10,204km, 배수관(배수지→배수펌프) 75,100km, 급수관(배수관→가정 등 일반수용가) 62,810km로 구성.

16) 2007년 12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개최된 제13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교토의정서가 만료되는 2012년 이후의 기후변화 대응체제 협상의 기본방향과 일정에 대한 규칙으로 채택한 협약. 기존의 교토의정서는 38개 선진국을 참여대상으로 한정했던 반면, 발리로드맵 채택으로 인해 2012년 이후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이 모두 온실가스 감축에 참여하게 됨. 발리로드맵 채택에 따라 우리나라도 온실가스 감축 의무국에 포함됨.

- 에너지 수요 증가에 따라 한정된 에너지 자원 고갈에 대한 위기감 고조
  - 석탄, 석유 등 화석연료의 매장량이 한계에 도달하여 에너지 확보 경쟁이 치열해질 전망
- 기후변화에 따라 물 부족, 수해가 빈발하고 하천자원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될 전망
  - 장래 물 부족에 대비한 충분한 수자원 확보 필요
  - 수해 복구 위주의 치수대책에서 사전예방 투자로 전환 요구
  - 국토공간 디자인과 품격 향상을 위한 수변공간의 체계적 정비 필요성 증대 예상

<그림 I-3> 연도별 자연재해 피해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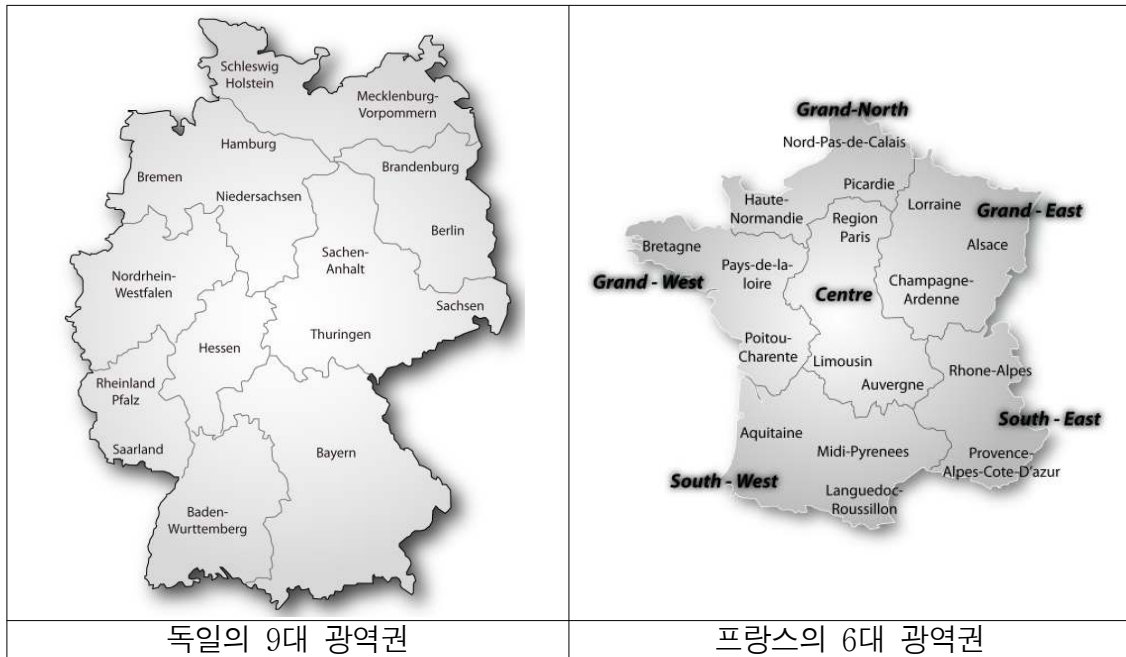


자료 : 국토해양부, 2008, 「기후변화 대응 국토공간계획 평가 및 과제」.

## □ 거대 지역경제권 중심의 신개방 경쟁체제 가속화

- 전방위적 FTA 추진 확산, 경제 블록화 등으로 글로벌 교역 및 투자가 확대될 전망
  - 한-미 FTA, 한-EU FTA 등 글로벌 FTA시대의 확산으로 국경을 초월한 국가간 지역경제 통합 가속화
  - 대외 수출시장이 확대되는 한편 산업경쟁력 확보 및 외국자본 유치가 중요시될 전망
- 세계화·개방화의 진전으로 지역간 경쟁이 보다 가속화 될 전망
  - 기존의 국가간 경쟁체제에서 지역이 직접 세계시장에서 타지역과 경쟁하는 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지역간 글로벌 경쟁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광역단위 지역경제권 형성 심화
    - ※ 프랑스 : 22개 레지옹을 6대 광역권으로 통합 추진 중, 일본 : 8개 광역지방계획구역 설정, 독일 : 16개 주를 9대 광역권으로 통합 추진 중, 중국 : 10~12개 도시권 형성 추진 중
  - 지역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전략산업 육성, 매력있는 생활환경, 양호한 인프라, 우수인재 보유 등이 보다 중시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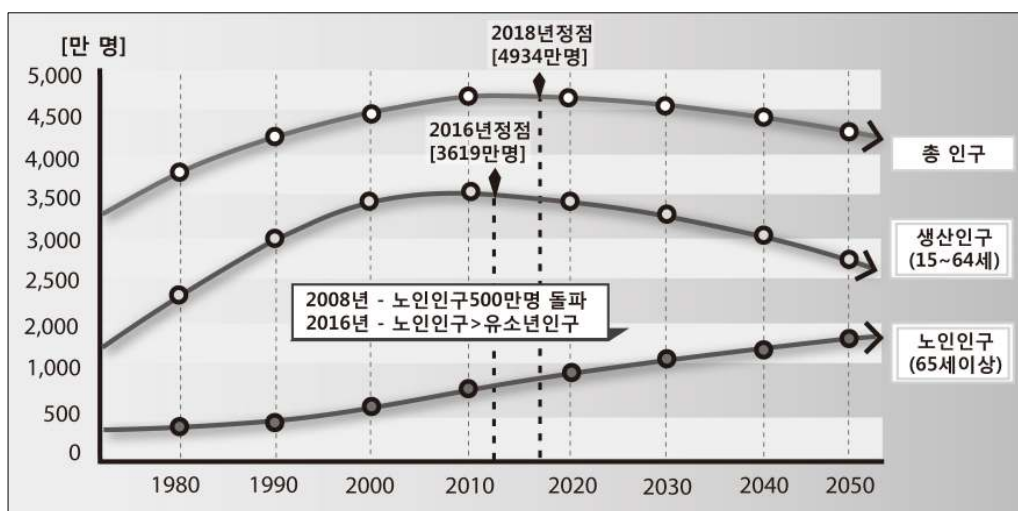
<그림 I-4> 외국의 광역경제권 사례



## □ 인구 감소 및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 진행

- 향후 절대인구는 2018년을 기점으로 감소하여, 2020년경에는 연령대별 인구구조가 역사다리꼴로 변화할 것으로 전망
- 2018년 4934만 명을 정점으로 인구가 점차 감소하여 2030년 4863만 명에 이를 전망<sup>17)</sup>

<그림 I-5> 총인구의 감소 및 고령사회 진입



자료 : 통계청, 2009. 「향후 10년간 사회변화 요인분석 및 시사점」. 재구성.

17) 통계청, 2009. 「향후 10년간 사회변화 요인분석 및 시사점」.



-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어 2020년에는 고령화율이 15.6%에 이를 것으로 전망
  - 한국의 고령화 속도<sup>18)</sup>는 OECD국가 중 1위(프랑스 115년, 스웨덴 85년, 일본 24년, 한국 18년)로 급속히 진행될 전망
- 인구감소 및 고령화에 따라 경제성장 시스템과 산업, 기업 및 개인의 행동양식 등 경제·사회 모든 분야에 걸쳐 근본적 변화 예상
  - 도시기반시설 정비, 다양한 정주 및 교통환경 구축 등 대응전략 마련 필요
  - 경제저성장 시대의 도래를 유발할 것으로 예상되어 대량공급 위주의 공공정책 한계 도래

## □ 교통·생활 혁명으로 U-Green 통합형 시대 전개

- 에너지 절약형 교통체계 및 정보통신기술이 연계 발전하는 유비쿼터스-그린(Ubiquitous-Green) 통합형 시대가 본격 전개될 전망
  - 신속·안전한 이동 및 탄소배출량 저감을 위해 교통기술과 IT기술이 결합된 지능형교통 시스템(ITS)<sup>19)</sup>, 스마트하이웨이 구축 등이 보다 확대될 전망
- 고속철도, 스마트 하이웨이 등 저탄소 고속교통망의 구축으로 통근권, 경제·여가 활동의 공간적 범위가 대폭 확대되는 등 생활패턴의 변화 예상
  - 정부고속철도 2단계 개통, 2017년 호남고속철도가 완공 등으로 고속교통망이 확대됨에 따라 전국 1시간 30분대 생활권 시대가 도래할 것으로 전망

## □ 환경, 문화 등 삶의 질에 대한 요구 증대

- 환경관련 국민의식 전환, 소득증대 등에 따른 소비행태 변화로 국민의 시간 및 공간이용 패턴이 근본적으로 변화할 전망
  - 경제, 산업의 양적 발전에서 문화적·질적 생활환경의 추구하고 환경보전과 개발이 어우러진 지속가능한 국토 공간 요구 증대
  - 늘어난 여가시간과 소득을 생산적인 문화활동에 소비하기 위한 여가·문화공간 수요 및 쾌적한 환경에 대한 요구 증대 예상

18) 고령화 속도 :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인구의 14%에 도달하는데 걸리는 시간.

19) ITS : Intelligent Transportation System. 전자, 정보, 통신, 제어 등의 기술을 교통체계에 접목시킨 지능형 교통 시스템. 신속, 안전, 쾌적한 차세대 교통체계를 만드는데 목적을 두고 있음.

- 고령화에 따른 노인복지와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생활기반시설의 배려 필요
  - 고령인구를 위한 정주 및 여가시설 공급, 장애인 편의성 증대 등을 위한 생활시설 공급 등이 더욱 중요한 가치로 부각

## □ 남북 교류 및 유라시아-태평양 협력 기반 강화

- 환태평양권과 유라시아간 교류·협력 증진에 따라 한반도의 전략적 중요성 증대
  - 2030년 한국의 GDP는 전세계 GDP의 2%, 한·중·일 경제권은 42%에 이를 전망
  - 동북아경제권이 EU, NAFTA와 더불어 세계 3대 경제권의 하나로 성장하면서 역내 중추 지위 확보가 중요시될 전망
- 남북한 긴장이 지속되고 있으나 중장기적으로 상호간 신뢰 확보 및 호혜적 교류 협력 확대를 통해 한반도의 경제적 통합을 위한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필요성 증대

<표 I-11> 세계 주요 국가의 성장률과 명목 GDP 추이

구 분	2009년 GDP	2009년 비중	실질성장률 (2004~30년)	2030년 GDP	2030년 비중
세 계	58.2조 달러	100.0%	—	116조 달러	100%
미 국	14.3조 달러	24.5%	3.0%	37조 달러	32%
유 럽	18.8조 달러	32.2%	1.8%	21조 달러	18%
한·중·일	10.8조 달러	18.6%	12.3%	49조 달러	42%
일 본	5.1조 달러	8.7%	1.5%	10조 달러	9%
중 국	4.9조 달러	8.4%	6.8%	36조 달러	31%
한 국	0.8조 달러	1.4%	4.0%	3조 달러	2%

자료 : 국토연구원, 2009. 「한반도의 비전과 국토발전전략」.

### 3. 국토의 현안문제 및 과제

#### □ 기후변화 대응 미흡 및 에너지 과소비형 국토공간의 지속

- Post 2012 체제에 대비하여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공간구조 개편 및 제도적 기반 구축 미흡
  - 에너지 과소비형 공간구조, 도로 중심의 교통체계 등으로 인해 전체 온실가스의 42%가 건물·교통 부문에서 발생하여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전략 마련이 시급
  - 도심내 주거·상업지역 등의 일률적 구분(Zoning), 승용차 위주 교통체계 등으로 보행·자전거·대중교통의 활성화가 저해되고 있어 해결방안 마련 필요
- 에너지 수요 증가에 따라 한정된 에너지 자원 고갈에 대한 대비책 마련 필요
  - 에너지 가격 급등, 에너지 자원 확보 등에 관한 대비책 마련과 함께 해양자원 및 신재생 에너지 활용 확대가 필요
- 녹색성장 정책의 본격 추진에 부합하는 국토발전전략 마련 미흡
  - 2008년 저탄소 녹색성장을 미래 국가비전으로 제시한 이후 4대강 살리기 사업, 녹색성장 국가전략 등이 본격 추진됨에 따라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새로운 공간전략 마련 필요
  - 4대강 살리기 사업 완료 이후 수변공간의 체계적 정비 및 효율적 활용 방안 마련 필요
- 국토의 이용 및 개발과정에서 야기되는 자연환경 및 생태계 훼손, 국민의 생활환경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통합적 국토관리방안 미흡
  - 도시, 강, 산림, 연안 등 생태계 구성요소별 생태축을 고려하지 못한 개발로 국토관리네트워크의 단절이 초래되고 있어 국토 환경을 유지·개선하기 위한 통합적 관리방안 필요
- 기후변화에 따른 재난, 재해에 대비한 종합적 방재시스템 및 체계적 대처방안 미흡
  - 기후변화에 따른 재해 및 재난의 반복·대형화에 대처할 수 있는 체계적 대비태세 마련 및 사전예방 투자 확대 필요

☞ **녹색성장 시대를 선도하는 저탄소·에너지 절약형 국토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新국토전략 수립 필요**

## □ 국가간 협력 및 경쟁체제 심화에 대응한 글로벌 국토기반 취약

- 산술적 균형 위주의 지역발전전략으로 유라시아-태평양 중추국가 지위 선점을 위한 글로벌 경쟁력 강화 미흡
  - 행정구역간 산술적 균형을 위한 중복·분절적 투자로 인해 규모의 경제를 확보하지 못하고 대외 경쟁력도 저하
  - 수도권 과밀 해소 및 집중 완화를 위한 경직적·물리적인 규제로 국제경쟁을 선도해야 할 수도권의 경쟁력 저하
  - 국가 및 지역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광역경제권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지역발전 전략을 발전적으로 수용·보완할 수 있는 계획 마련 필요
- 지경학적 위치는 우수하나 각종 규제, 높은 토지비용, 취약한 인프라, 경직된 노동 시장, 불편한 생활여건 등으로 실제 투자유치 성과는 미흡
  - 다기화된 토지이용계획, 복잡한 용도지역 구분, 엄격한 행위 제한 등으로 토지 확보 및 이용에 많은 시간과 비용 소요
  - 매력있는 생활환경, 양호한 인프라, 우수인재 유치 등을 위한 전략 마련과 투자유치 제도 정비 필요

<표 I-12> 동북아 주요 국가의 외국인 투자유치 잠재력 및 성과지수

국 가	외국인 투자유치 잠재력 지수 <sup>1)</sup> (2008)	외국인 투자유치 성과지수 <sup>2)</sup> (2009)
한 국	16위	124위
중 국	30위	76위
일 본	25위	135위
대 만	22위	122위
홍 콩	5위	4위
싱가포르	2위	18위

주 1) GDP 실질성장률, 1인당 GDP, GDP 대비 수출, GDP 대비 R&D 지출, 총인구 대비 고등교육 인구, 국가 위험도, 서비스 수출의 전세계 비중 등 12개 요인을 고려하여 산출.


2) 해당국가 경제규모에서 외국인 투자가 차지하는 정도를 측정한 것으로서, 세계 GDP에서 해당 국가의 GDP 비중, 세계 외국인 투자유입에서 해당국가에 대한 투자유입액 비중으로 산출.

자료 : UNCTAD, 2010. 「World Investment Report」.

☞ 국가간 대공조와 경쟁체제에 대응하여 선택과 집중을 통한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및 투자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 및 인프라 정비 시급

## □ 인구 감소 및 고령화에 대비한 국토관리 기반 미흡

- 인구 감소 및 고령화 시대의 도래에 대비한 새로운 국토관리 기반 형성 미흡
  - 인구 감소 및 고령화에 따른 도시 공간구조 및 토지이용 패턴 변화, 주택 수요 변화 등에 대응한 새로운 전략 마련 필요성 증대
  - 외국인 근로자 유입 등 다문화사회에 따른 정책수립 필요성 증대
- 저성장 시대 도래에 대비한 국토관리 패러다임 전환 미흡
  - 글로벌 금융위기 및 세계 경기침체 장기화, 생산인력 감소 등으로 저성장 시대가 도래할 것으로 예상되나 대량공급 위주의 개발 패러다임 지속
  - 대규모 개발 및 공급주도형 국토관리 방식에서 탈피해 실수요를 고려한 새로운 국토이용 및 관리 방식 정립 필요
  - 인구감소 및 저성장시대에 대비한 새로운 토지이용전략과 수요맞춤형 국토공간 조성 필요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한 정주구조 형성 등 국토 재편성 전략 필요

## □ 지역의 자립적 통합발전 기반 취약

-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의 경우 일부 대도시를 제외한 대부분 지역이 지속적인 인구 유출 및 성장기반의 미비 등으로 인해 발전 잠재력이 취약
  - 2008년 기준 전국 인구의 49.1%(2475만 명), 제조업체의 56.9%가 수도권에 집중
  - 지방의 산업구조는 수도권과의 교역을 통해 발전을 도모하는 교역형 경제구조 형성<sup>20)</sup>
- 수도권 과밀은 생산 및 생활기반시설의 공급을 원활하지 못하게 하여 수도권의 삶의 질과 경쟁력이 저하
  - 서울의 삶의 질은 전 세계 215개 주요 도시 가운데 86위<sup>21)</sup>에 불과
- 고속철도 등 초고속 교통망의 확충에 대응한 국토공간구조 재편 전략 미흡
  - 초고속 교통망의 확대로 전국 1시간 30분대 생활권 시대에 진입하여 기업 및 국민의 활동 공간이 확대됨에 따라 새로운 공간구조 형성 필요
  - 산업 및 인구의 재배치, 생활권 확대 등 국토공간구조 재편을 위한 전략 마련 필요

20) 한국은행, 2007. 「지역간 산업연관표 작성」.

21) Mercer Human Resource Consulting, 2008. 「Worldwide Quality of Living Survey 2008」.

- 광역화되는 산업·경제활동에 대응해 도시지역과 주변지역을 통합하여 관리할 수 있는 광역적 공간관리의 미정착
  - 도시 주변의 개별적 개발행위로 인한 도시경관의 훼손 및 농지, 산지의 효율적 보전·활용 곤란
  - 지역간 개발 및 갈등을 광역적인 차원에서 통합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광역적 협력수단 및 협상문화의 형성이 미흡

**👉 복수의 지역을 통합한 광역적 공간구조 형성 및 지역간 연계·협력을 통한 성장잠재력 확보 필요**

## □ 양질의 정주환경 및 사회통합 기반 미흡

- 주택 보급률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나 선진국에 비해 주택 재고가 부족하고 지역별 수급 불균형과 저소득층의 주거복지 문제는 상존
  - 인구 천인당 주택수는 350호(2009년)로 선진국의 70% 수준,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는 206만 가구로 전체 일반가구의 13%를 차지
  - 선진국형 정주환경 및 주거복지 체계 구축을 위한 새로운 주택정책 방향 설정 필요
- 성장 위주의 도시개발로 인해 국토경관의 품격이 저하되고 도시의 역사적·문화적 유산이 어우러진 고품질의 정주환경 조성이 미흡
  - 생태공간 고려가 부족하고 아파트 건설 위주의 도시개발로 개성있는 도시경관 형성 미흡
  - 지역의 자연·역사·문화 유산의 가치를 발굴하고 이를 유지·보존하기 위한 전략 마련 필요
  - G20 정상회의 개최국 등 글로벌 리딩국가 위상에 부합하는 품격있는 국토경관 및 정주환경 조성방안 마련 필요
- 여가·문화 수요는 다양화되고 있으나 이를 위한 적정시설 공급 및 자원 활용이 미흡
  - 적정 수준의 문화·여가시설 공급 및 강, 산지, 해안 등 수려한 자연자원을 활용한 여가·문화 환경 조성 필요
- 고령인구, 장애인, 여성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생활기반시설이 불충분
  - 사회적 약자를 고려한 도시설계 기준 마련, 교육 및 복지시설 공급 확대 등 필요

**👉 삶의 질에 대한 국민적 요구를 충족시키면서 사회적 약자와 더불어 사는 고품격 정주환경 조성 필요**

## □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신성장선도형 산업 기반 미흡

- 녹색성장을 신성장동력으로 설정하였으나 이를 육성하기 위한 성장 기반 조성 미흡
  - IT 산업, 나노산업, 생명공학산업, 신재생에너지산업, 환경산업, 문화관광산업 등 신성장 산업이 부상하고 있으나 이를 지원할 수 있는 공간정책은 미흡
  - 신성장산업의 특성에 부합하는 산업용지 및 지원시설 조성 방안 마련 필요
- 대도시 산업단지의 노후화로 인하여 도시형 산업의 특화발전 미흡
  - 기존 도심산업단지는 노후화되어 첨단 신성장산업 입지 자체가 곤란하여 도시경쟁력 저하의 원인으로도 작용
- 육지부 중심의 국토이용전략으로 해양영토 및 자원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미흡
  - 해양영토에 대한 관리 강화와 함께 녹색성장 및 신성장동력 육성을 위해 해양자원의 발굴, 활용 및 산업화 전략 마련 필요

☞ 녹색산업 육성, 산업간 융복합화 등을 통한 새로운 수익 창출을 위해  
신성장선도형(Trend-Setter Model) 산업 기반 형성 필요





## 제2편 계획의 기본방향

제1장 계획의 비전과 목표

제2장 6대 추진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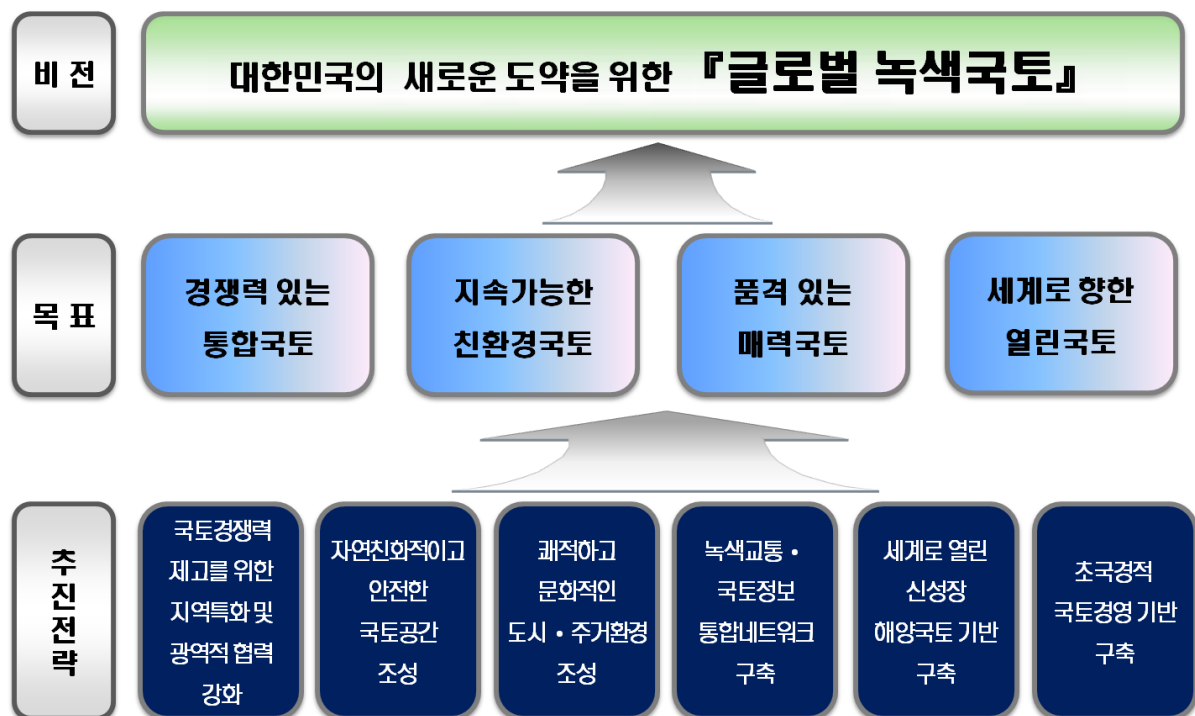
# 제1장 계획의 비전과 목표

## 1. 계획의 비전

###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글로벌 녹색국토』

- 동북아시아 중심에 위치한 한반도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고 FTA 시대의 글로벌 트렌드를 수용하여 유라시아-태평양 지역을 선도하는 글로벌 국토 실현
- 정주환경, 인프라, 산업, 문화, 복지 등 전 분야에 걸쳐 국민의 꿈을 담을 수 있는 국토공간을 조성하고, 저탄소 녹색성장의 기반을 마련하는 녹색국토 실현

<그림 II-1> 계획의 기본 틀



## 2. 국토형성의 기본목표

### ☐ 경쟁력있는 통합국토

- 개별 지역이 통합된 광역적 공간 단위에 기초한 新국토골격을 형성하여 지역특화 발전 및 동반성장을 유도
- 남북간 신뢰에 기반한 경제 협력과 국토 통합을 촉진

### ☐ 지속가능한 친환경국토

- 경제성장과 환경이 조화되고 에너지·자원 절약적인 친환경국토 형성
- 기후변화로 인한 홍수·가뭄 등 재해에 안전한 국토 구현

### ☐ 품격있는 매력국토

- 역사·문화자원을 우리 국토공간에 접목한 품격있는 국토 조성
- 정주환경을 개선하여 국민 모두가 쾌적한 삶을 누리는 매력있는 국토 조성

### ☐ 세계로 향한 열린국토

- 유라시아-태평양 시대에 물류, 금융, 교류의 거점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글로벌 개방 거점 확충
- 대륙-해양 연계형 인프라 구축을 통한 유라시아-태평양 지역의 관문기능 강화

### 3. 국토공간 형성 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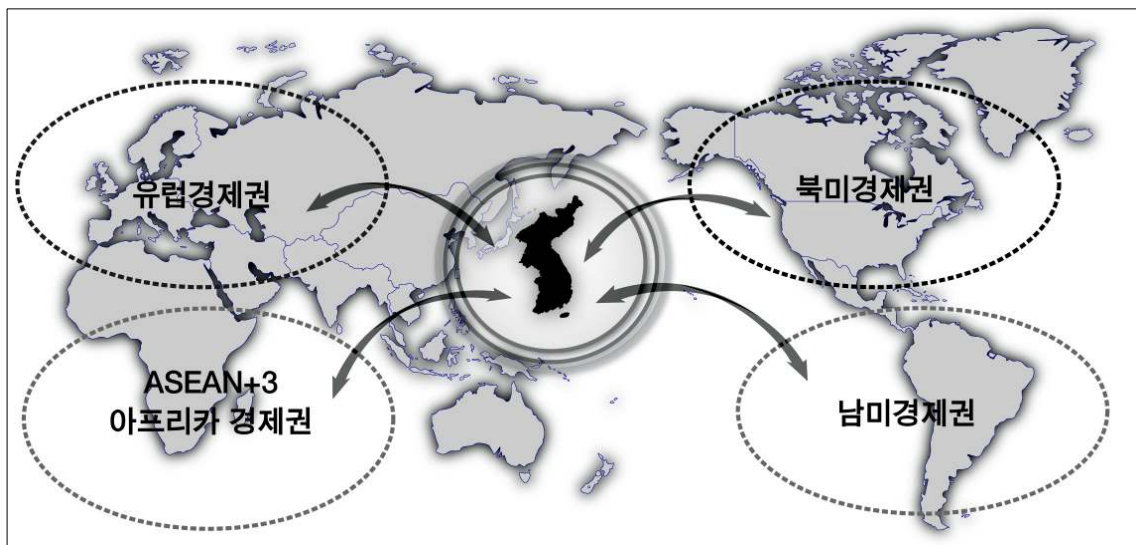
#### < 국토공간구조 형성의 기본방향 >

- 대외적으로는 초광역개발권을 중심으로 개방형 국토발전축을 형성하여 초국경적 교류·협력기반 강화
- 대내적으로는 5+2 광역경제권을 중심으로 거점도시권 육성, 광역경제권간 연계·협력을 통해 지역의 자립적 발전을 유도

#### (1) 세계와 교류하는 개방형 국토축 형성

- 유라시아-태평양지역의 전략적 요충지로서 가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관문국가 역할과 동아시아 주요 경제권(환황해권, 환동해권, 환태평양권, 유라시아 대륙권)의 중추국가로서 위치를 확립

<그림 II-2> 유라시아-태평양의 전략적 요충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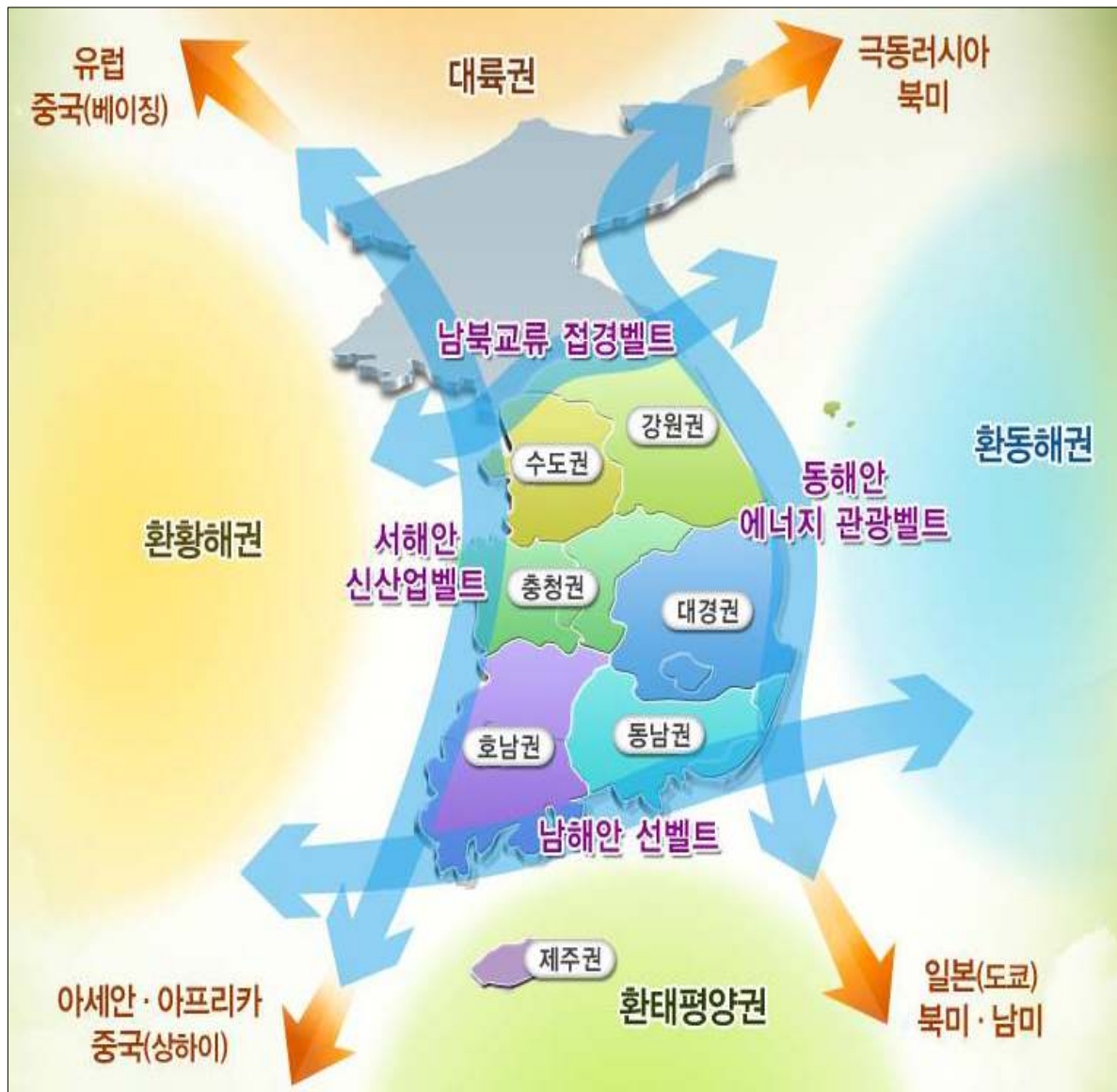


- 세계를 향한 한반도의 위상 강화와 광역경제권간 연계를 위한 개방적 국토발전축 형성
  - 동·서·남해안 등 대내외 접점지대인 3개 연안지역과 대북접경지역을 중심으로 초광역 벨트를 구축하여 대외개방적이고 해양지향적인 국토구조를 형성
  - 광역경제권 간의 연계와 동시에 연안개방축과 내륙을 연계하는 내륙 신발전축을 구축

## (2) 광역연계형 녹색국토 형성

- 대도시권을 중심으로 광역경제권이 거점 역할을 하는 광역연계형 국토구조로 개편
  -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가의 성장엔진인 도시권(City-Region)을 글로벌 인재와 자본이 집적되는 국제적 성장거점으로 육성
  - 도시권의 특성화 발전을 통해 거점도시와 주변지역이 동반 성장함으로써 광역경제권과 국토발전을 선도하도록 유도
- 행정구역을 탈피하여 광역경제권 단위의 자체역량 및 대외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권역별 게이트웨이 기능을 강화하고 각 권역의 중심도시를 고속 네트워크로 연계하여 생산적·포괄적·지속적 성장을 추구
  - 공항, 항만, 고속철도 등 초고속교통수단과 같은 글로벌 인프라와 양호한 정주여건을 갖춘 도시권을 중심으로 국토정주체계 형성
  - 각 권역이 독립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권역 게이트웨이와 중심도시간 연계를 강화하고 중심도시에서 권역내 타 지역으로 성장의 확산이 원활하도록 교통망을 정비
  - 도시권 내외 및 글로벌 시장과의 원활한 교류가 가능하도록 지원할 수 있는 연성적 네트워크형 국토구조로 개편
- 강 중심의 지역발전 및 하천생태 복원과 기후변화에 대응한 자원순환형 녹색국토 공간구조를 구축
  - 국토 균형발전 및 강 중심의 국토 재창조를 선도할 수 있도록 지천 살리기, 문화가 흐르는 4대강 살리기, 활력넘치는 금수강촌 만들기, 4대강을 활용한 녹색성장산업 활성화 등 추진
  -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부합하는 녹색국토 구조를 형성할 수 있도록 탄소배출 저감형 교통체계, 에너지 저소비형 국토 공간구조 형성, 부존자원 및 폐기물의 효율적 활용 등을 추진
  - 4대강, 백두대간, 새만금, 연안지역 등을 중심으로 자원 순환형 녹색 국토공간을 구축
  - 도시권을 중심으로 한 INBEC(IT·NT·BT·ET·CT)형 녹색산업 육성
- 광역경제권간 교류·연계 강화 및 녹색 국토공간 형성을 토대로 유라시아-태평양 주요 국가로 진출하기 위한 「개방형 녹색국토」 완성

<그림 II-3> 국토형성의 기본골격



## 제2장 6대 추진전략

### (1) 국토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역특화 및 광역적 협력 강화

- 국토의 성장잠재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3차원 지역발전전략을 발전적으로 수용
  - 대외개방적 국토형성을 위한 초광역개발권 개발, 지역간 네트워크 강화 및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한 광역경제권 육성, 기본적 삶의 질이 보장되는 기초생활권 구축을 통해 전 국토의 성장잠재력을 극대화
- 5+2 광역경제권 발전을 견인하는 도시권 육성
  - 도시권 육성으로 광역경제권 발전을 선도하고 도시권과 국토의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
- 국가경제를 견인하는 신성장거점 육성
  - 지역특화발전을 선도하고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새만금, 경제자유구역, 국제과학 비즈니스벨트, 세종시 및 기업·혁신도시 등 성장거점을 육성
  - 수도권에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수도권 개발이익의 지방이전을 통해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발전 도모
-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신성장 산업입지 육성
  - 3차원 지역발전전략과 연계하여 지역 특화산업을 육성하고, 융복합 산업과 녹색성장산업 육성 등을 통해 미래 신성장동력산업 기반을 조성
- 농·산·어촌의 녹색성장 기반 구축
  - 농·산·어촌의 중심거점 육성 및 통합적 개발, 인구유입·정착기반 확충 등을 통해 삶의 질 향상 및 경쟁력 향상 도모
- 문화국토 조성을 위한 역사문화관광자원의 연계 활용
  - 역사·문화자원의 창조적 산업화 및 문화·관광산업 기반 육성 등을 통해 지역산업을 활성화시키고 국토의 문화경쟁력을 제고



## (2) 자연친화적이고 안전한 국토공간 조성

- 강·산·바다를 연계한 국토 품격의 새로운 창출
  - 4대강, 백두대간·정맥, 해안·도서를 연결하는 통합국토관리체계 구축 및 추진전략 마련
  - 해양, 하천, 산림 등 주요 생태계의 보전 및 활용을 위하여 보호지역 지정 확대 및 환경친화적 이용방안 마련
- 국민과 강이 어우러지는 친수국토 조성
  - 치수(治水)·이수(利水)·친수(親水)와 수질을 고려하여 종합적인 강 이용 및 관리체계 구축
  - 강과 수변공간 및 주변지역을 계획적이고 통합적으로 관리
  - 하천공간 정비, 다양한 문화콘텐츠 및 프로그램 개발 등을 통해 하천을 문화·레저·여가 활동 등이 가능한 다목적 공간으로 이용하고 새로운 하천 문화를 창출
- 지속가능하고 안전한 국토·생활공간 조성
  -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재해에 대비하여 IT기술을 활용한 첨단 통합방재시스템을 구축하고 예방적·통합적 안전관리체계 구축
  - 재해 대응 및 피해 경감을 위해 녹색방재축 설정, 방재거점 설정 등을 추진하고, 부처별로 분산·다기화된 재해관리체계를 통합적·포괄적 관리체계로 전환

## (3) 쾌적하고 문화적인 도시·주거환경 조성

- 녹색성장 시대에 부응하는 한국형 압축도시(Compact City) 조성
  - 신시가지 확산을 억제하여 도심재생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토지의 집약적·복합적 이용의 촉진 등을 통해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도시환경을 조성
  - 도시 및 자연생태계 보전·복원, 에너지 절약형 도시 및 택지개발, 저탄소·에너지 절감형 주택 및 건물 보급 및 신재생에너지 활용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도시환경을 조성
- 삶의 질을 향유할 수 있는 매력적 문화도시 창조
  - 지역상징거리 조성 및 전통건축물 정비 등을 통해 도시의 고유한 문화적 가치를 제고
  -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대응한 육아보육시설 및 노인복지시설 확충과 함께 다문화 사회에 대응하여 외국인도 살기 좋은 커뮤니티 조성 추진
- 인구 감소 및 기존 도심 쇠퇴에 대응하는 도심재생 활성화로 도시경쟁력 제고
  - 주거환경 개선에서 산업 활성화, 정주여건 및 생산기반을 중시하는 복합적 도시재생으로 전환
  - 신산업기능 집적을 유도하기 위하여 노후산업단지의 재생, R&D 및 컨퍼런스 기능 등을 도입한 복합산업단지화 지원

- 도시경쟁력 제고를 위한 용도지역체계의 탄력적 적용
  - 인구정체 및 감소, 질적 성장으로의 패러다임 전환 등에 따른 새로운 토지수요에 대처할 수 있는 유연한 용도지역제를 운용하고 Time-Zoning 제도를 도입
  - 개발행위허가제도 정비를 통해 계획적 국토관리의 실효성을 제고
- 주거 수준의 선진화 및 주거안전망 확충
  - 점차 다양화되는 주택수요에 부응하여 1인 가구용 소형주택, 고령자 전용주택, 도심 소형주택, 전원주택, 타운하우스 등 수요맞춤형 주택 공급정책 추진
  - 보금자리주택 등 신규주택 공급, 공공임대주택 재고 확대, 기존 주택의 개보수 등에 대한 정부지원 강화 등을 통해 주택의 양적·질적 수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제고
  - 환경친화적 녹색주택 보급을 확대하고 주거단지 및 주택 디자인 개선을 통해 주거환경의 질적 향상을 도모

#### (4) 녹색교통·국토정보 통합네트워크 구축

- 철도 중심의 저탄소 녹색성장형 교통체계 구축
  - 도로 중심에서 철도 중심으로, 신규건설 위주에서 운영 효율화 위주로 교통정책 전환
  - 광역경제권의 거점도시간 및 초광역개발권간의 신속한 연계를 위한 'X+□'자형 고속철도망을 구축하고, 고속철도망의 접근성 향상을 위해 대중교통 연계체계를 강화
- 선택과 집중을 통한 효율적 도로망 정비를 통해 국토경쟁력 강화 지원
  - 고속국도, 국도 등 도로간 상호연계를 강화하고 지역간 균등한 간선도로 서비스 제공을 위한 도로시설 개량 및 확충 추진
  - 국가간선도로망의 지능화 및 첨단화로 신속·안전하고 편리한 첨단교통서비스 제공
- 교통수단간 기능적 역할분담을 통한 통합연계 교통체계 구축
  - 도로, 철도, 공항, 항만 등 교통수단간 상호연계로 저비용 고효율 교통체계 구축
  - 국가기간교통망계획과 부문별계획의 통합·조정을 강화하여 교통정책과 교통시설 확충의 상호연계를 도모
- 탄소배출을 줄이고 에너지를 절약하는 친환경 교통정책 추진
  - 자전거 및 보행자도로 확충 등을 통해 생활 속의 녹색교통 정착을 추진하고 대중교통 지향형 교통정책 추진
  - CO<sub>2</sub> 저배출형 교통수단(CNG버스, 경전철 등)의 점진적 확대를 친환경 녹색교통체계 구축

- 고부가가치 창출 및 동북아 물류 중심국가 성장을 위한 글로벌 물류체계 구축
  - 인천국제공항의 허브경쟁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김포공항의 근거리 국제선 서비스 강화
  - 부산항 신항, 광양항, 울산항 등을 동북아 거점 항만으로 육성하고, 권역별 거점 항만의 특화 개발 추진
  - 동북아 포트 얼라이언스(Port Alliance)구축, 공항·항만 배후단지 물류클러스터 조성, 미래형 첨단 물류기술 개발 및 보급 등을 통해 글로벌 물류체계 구축
- 첨단 국토정보 인프라 구축 및 활용을 통한 국토관리 선진화
  - 미래형 선진 국가공간정보 인프라를 구축하여 고정밀 공간정보를 실시간 제공
  - GIS, 센서, 네트워크 기술을 결합한 스마트 국토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각종 시설 및 정보 활용의 첨단 인텔리전트화 추진

## (5) 세계로 열린 신성장 해양국토 기반 구축

- 해양자원 확보를 위한 활동영역 확장과 해양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 북극해 항로 개발에 적극 참여하고 태평양권역 국가와 남극대륙 및 북극해 해양자원에 대한 공동개발 추진
  - 풍력, 조류, 파력 등을 활용한 해양 신재생에너지 개발, 해양산업의 클러스터 및 네트워크화 추진과 해양관광산업 활성화 기반 조성
- 생태계에 기반한 해양자원 및 공간의 통합적 관리
  - 육지부 개발시 해양환경의 수용력을 고려하고, 연안해역 용도제의 조기 정착을 통해 연안의 보전·이용·개발 질서를 확립
  - 자연해안 유지 및 인공해안 복원 추진과 연안·해양보호구역 면적을 확대하고 연안·해양 조사 및 정보화를 통해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정책 수립·시행

## (6) 초국경적 국토경영 기반 구축

- 남북한 교류협력 확대에 대비한 기반 구축
  - 남북한 교류협력 사업 등은 남북관계의 진전과 국내외 정치·경제적 여건 등을 감안하여 단계적으로 추진
  - 접경벨트를 중심으로 남북 교류협력 기반을 구축하고, 접경지역의 생태환경 보전, 평화지대 구축 및 남북한 수자원 모니터링 등 남북관계 진전에 대비한 협력과제 강구

- 유라시아-태평양 시대를 선도하는 글로벌 국토역량 강화
  - 한·중·일 복합수송체계를 구축하고, 아시안 하이웨이 및 아시아 횡단철도 연결을 추진하여 글로벌 교통·물류 관문국가로 도약
  - 국제항공노선망 확충, 항공자유화 추진 등을 통해 글로벌 항공 네트워크를 구축
- G20 개발의제 실천을 통한 글로벌 연성국토 개척
  - 저개발 국가에 대한 한국형 국토개발 지원모형을 구축하고 국토개발사업 지원을 추진하여 국격 향상에 기여
  - 고속철도, 고속도로, 원자력발전소, 한국형 첨단그린도시, 산업단지, 물관리 기술 등을 세계에 수출하여 해외로부터 새로운 기회를 포착하고 국익 창출로 연결

## 제3편 전략별 추진계획

---

제1장 국토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역특화 및 광역적 협력 강화

---

제2장 자연친화적이고 안전한 국토공간 조성

---

제3장 쾌적하고 문화적인 도시·주거환경 조성

---

제4장 녹색교통·국토정보 통합네트워크 구축

---

제5장 세계로 열린 신성장 해양국토 기반 구축

---

제6장 초국경적 국토경영 기반 구축

---



# 제1장 국토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역특화 및 광역적 협력 강화

## 1. 현황과 문제점

### □ 지역의 내생적·자립적 발전역량 취약

- 지역의 수도권 경제의존도가 과다하게 높고, 인구유출 및 산업기반의 취약 등으로 인해 자립적 발전역량 미약
  - － 1970~2005년간 수도권의 인구는 28.3%에서 2005년 48.2%로 증가
  - － 수도권 총생산비중이 48.6%를 차지하여 충청권과 동남권을 제외한 대부분의 권역이 인구 비중에 미달하는 지역내 총생산규모를 나타냄
  - － 지방광역시를 제외한 광역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10~30% 수준으로 자체적인 발전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역량이 크게 미흡
- 국가 균형발전정책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나 행정구역에 고착된 지역발전방식으로 가시적 성과는 미흡
  - － 소극적 균형발전 추진 및 중앙정부 주도의 형식적 지방분권으로 인해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지 못하는 등 한계 노정

### □ 농·산·어촌의 인구 공동화 등에 따른 지역경제 기반 쇠퇴

- 지난 20년간(1985~2005) 농·산·어촌(面 기준) 인구의 비중은 22.7%에서 10.2%로 크게 감소한 반면, 고령인구는 7.8%에서 24.2%로 증가

<표 Ⅲ-1> 지역별 인구분담 비중

구 분	인구 비중			노령인구 비중		
	1985년	1995년	2005년	1985년	1995년	2005년
면(面)	22.7%	13.6%	10.2%	7.8%	13.9%	24.2%
읍(邑)	11.9%	7.8%	8.3%	5.0%	8.1%	11.8%
동(洞)	65.4%	78.5%	81.5%	3.0%	4.3%	7.2%

- 국가경제에 대한 농·림·어업 비중의 지속적인 감소와 도·농간 소득격차의 확대
  - － 총부가가치에 대한 농·림·어업 비중이 1985년 13.5%에서 2005년 3.3%로 감소
  - － 취업인구에 대한 농·림·어업 비중 역시 1985년 24.9%에서 2005년 7.9%로 감소

## □ 지역의 신산업 성장 기반 취약

- 환경산업, 생명공학산업, IT산업, 문화 콘텐츠산업 등 신성장산업이 부상하고 있으나  
이의 성장 기반이 되는 산업용지의 맞춤형 공급이 부족
- 도시적 입지특성을 가진 산업수요에 적기 대응 미흡
  - 도시첨단산업단지가 2009년 6월말 기준 6곳이 지정된데 불과하여 도시적 입지특성을 가진  
산업수요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음
- 노후산업단지는 주차문제, 기반시설 부족, 낮은 녹지율 및 도로율, 환경기초시설  
부족 등으로 첨단장비와 기술을 활용하는 신성장 산업 입지 애로
  - 노후화된 산업단지 리모델링이나 신규 장비 구입이 이루어지지 못하여 저부가가치형 산업  
구조가 지속되고 도시경쟁력 강화에도 기여 미흡

## □ 지역발전의 새로운 성장동력인 문화·관광산업이 취약

- 지역의 독특한 특색과 부존자원을 활용한 창의적 관광자원 개발이 미흡하며, 종합  
적인 문화·관광공간이 부족
  - 한국 고유의 브랜드 관광상품 부족으로 국내외 관광수요를 흡수하는데 한계
- 국제관광객 유치에 위한 인프라가 부족하여 관광산업의 국제경쟁력 취약
  - 외국관광객들이 입국에서 출국까지 편리·안전·친절한 관광을 할 수 있는 각종 인프라가  
경쟁국에 비해 취약
- 유·무형의 지역문화유산을 적극적으로 보전하고 활용할 수단이 미흡
  - 고유한 지역성·장소성에 바탕을 두는 특성있는 지역문화의 창달이 미흡



## 2. 여건변화 전망

### (1) 글로벌 경쟁의 심화와 광역경제권의 중요성 부각

#### □ 거대경제권 중심의 글로벌 경쟁이 심화

- 국가간 경쟁에서 거대경제권 간의 경쟁이 본격화 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국가 경쟁력과 지역의 경쟁력 강화를 동시에 추구할 필요성 대두
  - 지역이 직접 세계시장에서 경쟁하는 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지역의 잠재력 및 자원을 활용한 지역발전 전략 마련이 보다 중시될 전망

#### □ 경제의 개방화 및 광역화의 진전에 따라 대도시권의 역할이 증대

- 대도시와 주변지역을 포함하는 도시권(City-Region) 단위의 지역구조 형성을 추진하는 글로벌 트렌드에 대응하여 수도권에 합리적 관리와 함께 수도권에 대응할 수 있는 다핵구조의 대도시권 육성 중요
  - 수도권과 지방 대도시권의 경쟁력 및 발전역량을 제고하여 수도권과 지방이 동반발전 할 수 있는 전략 마련이 중요시될 전망

### (2) 녹색성장과 FTA 체결에 따른 지역산업구조 개편

#### □ 신성장동력 및 녹색성장 추진에 따른 산업 및 기술 혁신

- 신재생에너지 기술 개발 및 보급 확대, 에너지 효율성이 높은 산업구조로의 재편, 녹색기술 산업클러스터 등의 발달 예상
  - 기술 혁신, 고소득, 삶의 질 추구, 고령화 등에 따라 정보통신산업, 생명공학산업 등 첨단 산업과 문화·관광산업의 규모가 커지고 중요성이 높아질 전망
- 녹색성장 및 재생에너지, 자전거, 자연생태, 문화, 자원순환, 친환경유기농 중심의 녹색커뮤니티 등 녹색생활을 주제로 하는 지역사회 형성 촉진 예상
  - 지속가능한 성장산업으로 자연친화적인 관광행태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관광산업(New Tourism) 각광

## □ 세계 여러 나라와의 FTA 체결에 따라 지역별 산업구조 변화

- FTA 체결 확대에 따른 지역별 산업구조 및 지역경제 규모 변화 예상
  - 자동차·조선·전기전자 등 국제경쟁력이 있는 산업의 경우 활성화 전망
  - 국제경쟁력이 미흡한 산업은 불가피하게 규모의 축소가 예상

## (3) 지역문화 창달과 녹색생활의 보편화

### □ 문화의 공공적·산업적 가치 확대

- 문화시설을 운용·활용하는 소프트웨어나 콘텐츠의 중요성이 증대되어 지역 및 민족문화, 예술 등을 바탕으로 하는 문화산업의 태동·발전이 예상
- 경제적 풍요로움과 더불어 정신적·문화적 풍요로움을 추구하는 국민의식 변화로 삶의 질을 제고하고 창조적 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문화의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지역 문화자원의 산업적 가치가 증대

### □ 녹색생활의 보편화 및 탈도시·전원지향 수요 증대

- 녹색기술의 개발, 녹색기술산업의 진흥과 함께 고효율·친환경을 지향하는 녹색생활의 보편화 중요성 증대
  - 융·복합 기술, 녹색기술의 개발 및 발전으로 지역개발과 환경보전이 상생·촉진
  - 고효율·친환경 설비의 개발 및 보급과 함께 고효율·친환경을 추구하는 생활이 보편화될 것으로 예상
- 주5일 근무제 및 스마트 워크(Smart-Work) 증대로 인한 이동범위의 확대, 여가시간의 증가, 소득수준의 향상 등으로 탈도시·전원지향성이 고조
  - 농·산·어촌이 보유하고 있는 각종의 자연자원에 대한 수요 확산으로 이들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

#### (4) 농·산·어촌 다변화와 공간적 연계가능성의 확대

##### □ 농·산·어촌의 인구 공동화와 지역경제 복합·다변화

- 농·산·어촌 인구의 공동화와 노령화로 정주인구의 지속적인 감소가 예상
- 기존 전통농업의 쇠퇴와 복합화, 겸업농가 및 농외소득 비중의 확대로 농·산·어촌 경제구조의 복합·다변화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

##### □ 농·산·어촌 활성화를 위한 공간적 연계 가능성의 확대

- 공공서비스 기반 및 편의시설의 광역적 연계 가능성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
- 지역 활성화를 위한 광역적 공동·연계개발 가능성과 수요의 확대
  - － 지역자원의 공동·연계 개발을 통한 규모경제성 제고, 시너지효과 창출 등을 위해 광역적 개발의 활성화가 촉진될 것으로 예상

### 3. 추진과제

#### (1) 3차원 지역발전전략의 발전적 수용을 통한 국토의 성장잠재력 극대화

##### □ 광역경제권 전략 : 특성화 발전을 통한 지역경쟁력 제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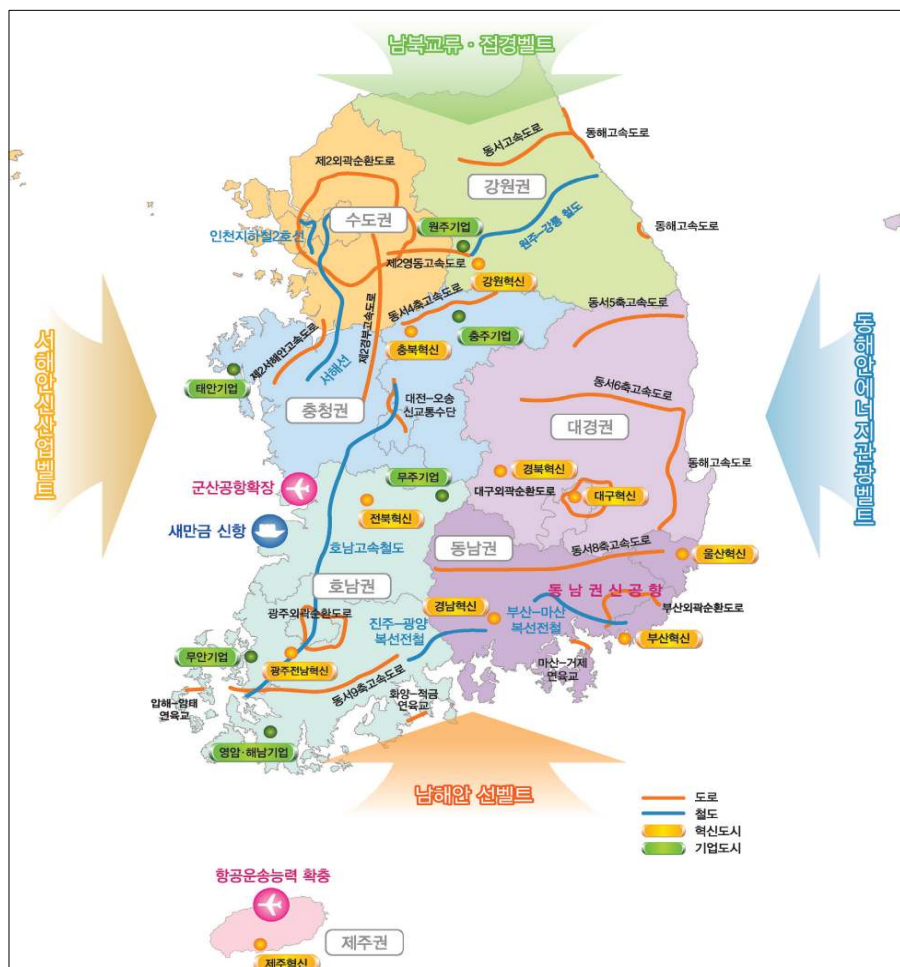
- 인구규모, 산업연계성 및 보완성, 역사문화 동질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5+2) 광역경제권을 설정하고, 지자체 주도로 지역특성에 맞는 특화발전 추진

※ 5+2 : 수도권, 충청권, 대경권, 호남권, 동남권 + 강원권, 제주권

##### ◦ 30대 선도프로젝트 추진

- 신성장거점을 육성하고 권역내 및 권역간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 교통인프라 확충
-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개발용지 확대 및 규제 합리화 추진

<그림 III-1> 광역경제권 30대 선도프로젝트



- 연계효과가 크고 지역여건에 맞는 권역별 선도산업 집중 육성
  - 신규투자자에 대한 고용보조금 확대,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 활성화 등 지역의 기업투자 활성화 여건 조성
- 지역인력 양성 및 과학기술 진흥
  - 권역별 선도산업과 연계하여 지방대학의 인재양성 지원, 우수 이공계 대학의 연구역량 강화, 지역 산·학·연 공동 R&D 사업 활성화 등 추진

## □ 초광역개발권 전략 : 개방과 협력의 촉진

- 초국경 시대에 대응한 대외개방형 국토의 신성장축 형성을 위해 연안지역을 잇는 동·서·남해안 벨트와 남북교류·접경벨트를 초광역개발권으로 육성
  - 환동해·환황해·환태평양권 등과의 경제협력을 촉진하고, 광역경제권간 공유자원, 산업, 인프라 등을 연계한 발전을 통해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상생발전 도모
  - 동북아 및 유라시아 대륙을 연결하는 도로, 철도, 공항, 항만 등 통합 교통·물류 인프라를 확충하여 초국경적 교류·협력 기반을 구축
  - 권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국가기간산업(철강, 석유화학, 조선 등), 생산자 서비스, 물류, 신재생에너지 등 특화산업을 중심으로 세계 수준의 초광역적 산업벨트 육성 추진

<표 III-2> 초광역개발권의 개발방향

구 분	개 발 방 향
동해안 초광역개발권 (에너지·관광벨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에너지 산업벨트 구축</li> <li>○ 산업간 연계 강화를 통한 기간산업 고도화</li> <li>◦ 국제관광거점 기반 조성 및 창조산업 육성</li> <li>◦ 인프라 확충 및 환동해권 교류협력 강화</li> </ul>
서해안 초광역개발권 (신산업벨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제비즈니스 거점 및 환황해 협력체계 조성</li> <li>○ 초일류 첨단 산업벨트 구축</li> <li>○ 글로벌 해양 생태·문화 관광벨트 조성</li> <li>◦ 역내외 연계 인프라 구축</li> </ul>
남해안 초광역개발권 (선벨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계적 해양 관광·휴양지대 조성</li> <li>◦ 글로벌 경제·물류거점 육성</li> <li>◦ 통합 인프라 및 초국경 네트워크 구축</li> <li>◦ 동서 통합 및 지역발전 거점 육성</li> </ul>
남북교류·접경벨트 (평화에코벨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남북한 교류협력단지 조성</li> <li>◦ 비무장지대 생태자원 보전 및 녹색관광 육성</li> <li>◦ 통일대비 접경지역 개발 촉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li> </ul>

- 대외개방형 초광역개발권과 연계하여 지역발전 성과를 내륙으로 확산시키는 한편, 내륙 자체의 산업·고유자원을 활용한 내륙특화벨트를 육성하여 지역의 성장잠재력을 극대화
- 하천 등 초광역적으로 이어지는 국토 공유자원과 역사·문화유산을 기반으로 창조산업과 창조지역을 육성

<그림 III-2> 개방형 초광역개발축



## □ 기초생활권 전략 : 기본적 삶의 질 보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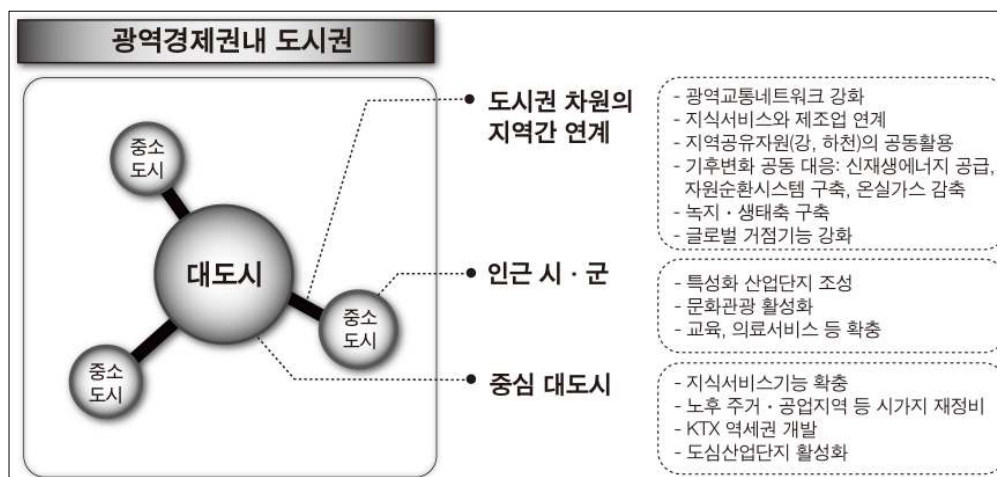
- 기초생활권 유형별로 특성화·차별화된 개발 추진
  - 161개 시·군을 인구·소득 및 서비스 접근성 등을 기준으로 도시형, 도·농 연계형, 농·산·어촌형 등으로 유형화하여 중점 개발
  - 시·군 주도로 지역 여건 및 특성을 반영하여 기초생활권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중앙정부는 이를 지원해주는 상향식 발전체제 구축
- 살고 싶은 정주공간 형성과 삶의 질 향상 추진
  - 광역경제권 수혜대상에서 소외될 우려가 있는 시·군에 대하여 ‘살고 싶은 정주공간 형성’과 ‘삶의 질 향상’을 적극 추진
  - 지역특화자원, 체험·관광자원 등 향토자원의 융복합화, 시·군간 연계·협력에 의한 소득 및 고용 창출
- 낙후 및 소외지역의 차등적 생활기반 확충
  - 농·산·어촌 및 지방 중소도시 등의 정주·주거기반을 확충하여 전국 어디든지 최소한의 생활수준 보장
  - 낙후도가 심한 성장촉진지역, 접경지역 등 특수상황지역에 대해서는 지원 강화
- 시·군간 연계·협력 활성화를 통한 시너지효과 극대화
  - 문화관광, 환경, 복지, 의료 등 지역간 연계·협력 촉진으로 규모의 경제화 및 지역개발정책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
  - 시·군 연계·협력에 의한 농·축·수산업 및 2·3차 산업의 공동마케팅 강화와 환경 등 자치단체가 선호하지 않는 비선호시설의 공동사업화 및 활성화
- 자율적 지역 개발을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
  - 2개 이상 시·군의 기초생활권발전계획 공동수립을 장려하고, 시·군간 협력 모범사례에 대해서는 재정적 인센티브 부여
  - 시·군이 자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포괄보조금제도(Block Grants) 도입

## (2) 5+2 광역경제권 발전을 견인하는 도시권 육성

### □ 거점도시와 인근 지역을 연계하는 도시권 육성

- 세계경제의 개방화 및 지방화의 진전으로 글로벌 장소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통합경제권의 핵심지역으로 도시권을 육성
  - 대도시 등 거점도시와 기능적으로 연계된 인근 시·군을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등 핵심 기능이 집적된 국토 중추공간이 되도록 전략적으로 육성하여 광역경제권 발전을 선도
  - 도시권이 글로벌 투자와 교역 및 네트워크의 중심지로서 발전할 수 있도록 인프라 확충, 고차서비스업 및 첨단산업 유치, 우수한 정주환경 조성 등 추진

<그림 III-3> 도시권 육성 전략



- KTX 정차도시를 중심으로 성장동력을 결집·확산하여 거점도시권을 육성함으로써 자생력 있고 특성화된 지역발전을 견인
  - KTX 역세권을 순차적으로 개발하되, 대도시역세권을 우선 개발하고, 신시가지형은 성과를 보아가며 단계적으로 개발
  - 도심 재생, 노후산업단지 재정비 등 도시경쟁력을 제고하고, 고부가가치 융·복합 산업 등 지역별 특화산업이 KTX 광역 역세권에 입지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 마련
- 도시권의 광역적 산업클러스터 구축
  - 도시권의 특성화 발전방향에 따라 도시권내 주요 도시간 연관산업의 입지 지원, 교육 및 R&D 기능의 협력 관계를 강화하고 기존 대도시와 혁신도시, 기업도시 등 신성장거점과 연계 강화



- 도심내 노후 산업단지를 복합기능의 친환경·첨단 산업단지로 재생하고, 대규모 재생 사업이 곤란한 지역은 지원시설 확충, R&D 기능 강화 등으로 산업단지의 기능고도화 추진
- 도시권내 교통인프라 확충
  - 도시권내 핵심 도시와 인근 도시간 30분내 이동이 가능하도록 순환방사형으로 교통망을 확충
  - 도시간 순환교통망과 도시내 대중교통망과의 환승·연계시스템을 확충하고, 4대강 자전거길, 대중교통-자전거이용 연계 강화
- 도시권 정주여건 및 생태환경 개선
  - 도시권의 공간구조 개편 전략을 원도심 재생과 연계하여 성장형 도시는 도시성장관리계획 마련, 정체형 도시는 토지이용 효율성 제고에 우선순위를 두는 전략 실행
  - 대도시권 차원에서 환경자원을 통합 관리·정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도시민의 생활여건 개선을 위해 공원·녹지 확충방안 모색
- 도시권 고유의 역사문화 창출 및 역량 강화
  - 도시권내 역사문화 특성별 거점도시를 설정하고, 도시 간 역사문화적 맥락을 연계하여 도시권 고유의 역사문화 정체성 확보
  - 권역별 역사문화 거점도시 조성, 역사문화적 상징체계 구축, 디자인 역량 강화로 세계도시 경쟁시대에 대비한 대도시권별 지명도 제고
- 도시권간 연계·협력 강화를 통한 상생발전 추진
  - 고속간선교통망을 통한 도시권간 연계 강화, 도시권간 및 중앙정부-지자체간 협력사업 활성화 등 추진

### (3) 농·산·어촌의 녹색성장 기반 구축

#### □ 녹색성장형 농·산·어촌 발전 및 전원적 삶의 질 향상

- 농·산·어촌의 지역·생활중심거점 육성과 이용편의성 제고
  - 쾌적한 전원주택단지 조성, 생활편의시설의 확충, 기숙형 공립고 연계 등을 통하여 농어촌 뉴타운 등 생활거점을 도시적 서비스 수준을 갖춘 새로운 성장거점으로 육성
  - 생활인프라 정비,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재래시장 활성화, 30분내 응급의료체계 구축, 생활친화형 문화공간 조성 등 선진 정주환경 조성

- 농·산·어촌의 녹색성장기반 구축과 삶의 질 향상
  - 바이오매스 및 신재생에너지 등을 활용한 저탄소 녹색마을 조성으로 녹색성장 기반을 구축하고 기존 기반시설의 적극적인 활용 등을 통해 환경 부담과 자원 소모를 최소화
  - 하천공간에 상·하류를 연계하는 녹색벨트를 구축하고, 자전거길과 산책로·체육공원 등의 설치로 휴식 및 여가공간을 체계적으로 조성
  - 농촌마을종합개발·전원마을·농어촌 뉴타운 등 농어촌 지역개발사업 추진시 계획단계부터 신재생에너지 도입을 적극 유도
- 낙후된 농·산·어촌에 대하여 국가지원을 차등화하고 광역적 연계를 통하여 종합적·체계적으로 개발
  - 낙후도가 심한 농·산·어촌 중 발전잠재력과 개발여력이 양호한 지역에 대해서는 기반시설 지원을 확대하고 인근 시·군과 연계하여 광역적으로 개발
  - 백두대간 연접지역, 서부경남권, 경상북도 북부권 등 낙후지역을 대상으로 지역의 문화·관광, 산업자원을 활용한 지역특화형 녹색발전 추구

## □ 농·산·어촌의 경쟁력 제고와 연계한 고소득·일자리 창출

- 향토자원을 활용한 농·산·어촌 산업 진흥
  - 경쟁력 있는 향토자원을 발굴하여 농·림·어업, 향토식품 제조업, 체험·휴양서비스업 등의 복합화, 그린투어리즘(Green Tourism) 등을 통해 고부가가치를 창출
  - 향토자원 연관기업에 특화된 농어촌산업단지의 조성을 확대하고 기업지원서비스 기능의 결합으로 농공단지 기능을 고도화
- 농·림·어업의 생산성과 경쟁력 향상
  - 주업농과 영세농이 결합된 법인경영체를 육성하고, 영농인에 대한 교육·훈련 강화
  - 기업·연구기관·대학 등이 집적된 국가식품클러스터와 생산·가공, R&D, 물류·유통, 관광·홍보기능이 바이오 및 IT 기술과 결합되어 통합 운영되는 첨단농산업복합단지(Agro Park) 조성
- 농·산·어촌의 지역특성에 부합되고 민간주도에 의한 자립적 발전을 촉진
  - 지역특화발전특구를 통하여 지역별 특성에 부응하는 규제 개혁으로 향토산업·지역특화산업에 대한 민간활력 유입을 촉진

#### (4) 국가 경제를 견인하는 신성장거점 육성

##### □ 세계시장을 향한 글로벌 성장거점 육성

- 새만금을 글로벌 신경제체제의 중심거점이자 저탄소 녹색성장의 선도지역으로 육성
  - － 산업, 국제업무, 관광·문화 등 융복합기능을 갖춘 환황해권의 핵심성장거점으로 육성하고, 국제적인 인력·자본·기술의 집적지로 조성
  - － 신재생에너지 등 녹색산업 육성, 저탄소형 에코시티 조성, 첨단친환경농법 활용, 항공, 우주 등 미래유망기술 개발 등을 통해 녹색성장의 메카로 육성
- 글로벌 투자를 유치하고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하여 제주국제자유도시와 경제자유구역을 개발·육성
  - － 제주국제자유도시를 사람과 상품, 자본의 이동이 자유롭고 기업 활동의 편의가 최대한 보장되는 교류도시로 발전시켜 세계를 포용하는 국제도시로 육성 추진
  - － 인천, 부산·진해, 광양만권, 황해, 새만금·군산, 대구·경북 등 경제자유구역의 내실화를 통해 대외개방거점으로 육성하고, 수요를 반영하여 단계적으로 개발
- 과학기술분야 기초역량을 강화하여 창조적 성장을 도모하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개발 및 글로벌 의료산업의 메카로 세계적 수준의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
  - － 기초과학과 국제비즈니스네트워크가 융합된 창조적 연구환경을 조성하여 새로운 국가성장거점으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개발·육성
  - － 첨단 의료기기·신약 개발 등을 위한 산·학·연의 의료산업 클러스터거점인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조성하여 세계 의약의료시장의 글로벌 거점으로 육성

##### □ 지역특화발전 및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하는 선도도시 육성

- 세종시, 혁신도시 및 기업도시간 연계교통망 등 인프라를 구축하고 산업 및 기능분담을 강화하여 지역특화 및 균형발전을 촉진
  - － 도시권간 사람, 자본, 정보 교류가 확대될 수 있도록 초고속교통망 및 정보통신 네트워크 구축
- 세종시에 9부 2처 2청, 20개 정부소속기관 및 16개 국책연구기관 등 52개 기관을 이전시켜 지역균형발전을 선도하는 자족도시로 육성
  - － 질 높은 공공서비스와 도시기능을 제공하고, 다양한 자족기능의 유치 기반 조성

- 쾌적하고 편리한 도시공간을 조성하여 최적의 정주공간을 제공
  - 저탄소 녹색도시 조성,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체계 구축, 품격 높은 문화·휴식공간 조성, 최적의 주거환경 조성, 우수한 교육환경 등 조성 추진

<표 III-3> 세종시 이전기관

중앙행정기관	정부소속기관	국책연구기관
○ 9부 2처 2청 1실 2위원회 ▪ 국무총리실 ▪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 환경부 농림수산식품부 교육과학기술부 문화체육관광부 지식경제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 국가보훈처 법제처 ▪ 국세청 소방방재청	○ 20개 기관 조세심판원 복권위원회 중앙토지수용위원회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교원소청심사위원회 해외문화홍보원 경제자유구역기획단 지역특화발전특구기획단 무역위원회 전기위원회 광업등록사무소 연구개발특구기획단 중앙노동위원회 최저임금위원회 산재보상보험재심위원회 보훈심사위원회 한국정책방송원 우정사업본부	○ 16개 기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기초기술연구회 산업기술연구회 국토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산업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한국조세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계기로 산·학·연·관이 서로 협력하여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는 미래형 혁신도시를 건설
  - 혁신도시를 지역의 새로운 성장거점으로 조성하고 주변도시와 연계를 통해 지역발전 촉진
  - 최적의 혁신여건과 수준 높은 생활환경을 갖춘 새로운 차원의 도시로 육성
- 민간투자를 촉진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신성장전략으로 기업도시를 건설
  - 산업교역형, 지식기반형, 관광레저형 등 지역특성에 맞는 기업도시를 육성하여 국가균형발전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

<표 III-4> 혁신도시 및 기업도시 개발방향

구 분		개 발 방 향	
혁 신 도 시	부산	▶ 대륙과 해양이 만나는 해양수산, 영화, 금융의 중심 ▶ 이전기능 : 해양수산, 금융산업, 영화진흥 등	
	대구	▶ 교육·학술 산업의 메카, 동남권 산업클러스터의 중심 ▶ 이전기능 : 산업진흥, 교육·학술진흥, 가스산업 등	
	광주/전남	▶ 하나로 빛나는 초광역 첨단미래산업 클러스터 ▶ 이전기능 : 전력산업, 정보통신, 농업기반, 문화예술 등	
	울산	▶ 인간과 자연이 함께하는 친환경 첨단 에너지 메카 ▶ 이전기능 : 에너지, 근로복지, 산업안전 등	
	강원	▶ 녹색건강과 건강·생명·관광으로 생동하는 강원혁신도시 푸른섬 ▶ 이전기능 : 광업진흥, 건강생명, 관광 등	
	충북	▶ IT·BT 산업의 테크노폴리스 ▶ 이전기능 : 정보통신, 인력개발, 과학기술 등	
	전북	▶ 전통과 첨단을 잇는 생물·생명산업의 메카 ▶ 이전기능 : 국토개발관리, 농업생명, 식품연구 등	
	경북	▶ 첨단과학기술과 교통의 허브 ▶ 이전기능 : 도로교통, 농업기술혁신, 전력기술 등	
	경남	▶ 한국을 움직이는 메카트로닉스의 거점 ▶ 이전기능 : 주택건설, 중소기업진흥, 국민연금 등	
	제주	▶ 국제자유도시를 선도하는 국제교류·교육연수도시 ▶ 이전기능 : 국제교류, 교육연수, 국세관리 등	
기 업 도 시	지식기반형	원주	- 세계 최고수준의 미래형 첨단 의료·바이오 산업의 중추 - 기업과 지자체가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기업도시의 모델 Wonju for U-Life
		충주	- 친환경, 자족형 복합도시, 첨단형 기업도시 - IT, BT, NT 중심의 최첨단 부품소재 산업의 세계최고 도시
	산업교역형	무안	- 서남권의 새로운 성장거점도시, 미래형 첨단산업도시 - 중국과 합작해서 만든 국토 서남권의 새로운 성장 거점도시
	관광레저형	태안	- 관광, 레저, 웰빙 시설이 복합된 “고품격 미래지향적 도시” - 생태와 사람이 공존하는 “Dream City”
		영암/해남	- 세계인이 찾는 복합레저도시 조성 - 동북아의 새로운 관광 메카

자료 : 국토해양부 (혁신도시 <http://innocity.mltm.go.kr>, 기업도시 <http://enterprisecity.moct.go.kr>).

## □ 수도권 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 ◦ 국제적 대도시권으로의 발전 도모

- 기존의 국가균형발전 지원 역할 뿐만 아니라 국제적 대도시권으로서 국가경제를 견인하는 성장엔진으로서의 역할 확립
- 글로벌 녹색성장 실현에 협력하고 개발도상국의 녹색성장을 지원하는 세계적 녹색성장 시범지역으로서 수도권의 위상 확보

◦ 글로벌 비즈니스 허브로 도약하기 위한 글로벌 기업환경 조성

- 아시아의 금융거점이 될 수 있도록 글로벌 투자환경 및 외국인 생활환경 개선
- 디지털콘텐츠산업, 지능형 로봇서비스산업, U-Health 융합기술 등 지식기반서비스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고 글로벌 기업활동 지원
- 인천공항을 중심으로 동북아종합물류시스템을 구축하고 인천·평택항과 인천·황해 경제자유구역 연계를 통한 국제물류산업클러스터 구축
- 글로벌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공항·항만·광역철도망 등 교통인프라 확충 및 동북아 주요 거점과의 연계교통 네트워크 강화
- 서울-인천축을 국제업무 및 경인 아라뱃길 건설 등과 연계한 관광·레저 중심거점으로 개발

◦ 수도권 공간구조를 다핵분산형으로 재편

- 서울에 집중된 일자리를 수도권내 주요 거점도시에 재배치함으로써 서울의 과밀 해소 및 거점도시 중심의 자족적 도시권 형성
- 수도권내 연계교통망 확충을 위해 제2외곽순환도로의 조기 건설 및 광역철도망 확충
- 역세권 주변을 재정비하고 직주 근접을 유도하여 에너지 절약형 공간구조로 전환

◦ 수도권 관리방식의 선진화

- 글로벌 대도시권으로서의 역할에 부응할 수 있도록 수도권의 품격 제고 및 질적 발전 추구
- 지역발전시책의 성과와 연계하여 수도권의 장기적 개발수요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보전과 개발이 조화를 이루는 계획적 성장관리체제로 전환
- 중앙정부, 지자체, 민간 등 관련주체의 적극적 참여에 의한 협력적 광역거버넌스 구축
-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수도권 개발이익을 재원으로 비수도권 지자체의 기업 유치 및 투자활성화,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 □ 외국인 투자 유치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 외국기업의 업무환경 개선 및 인센티브제도 확대를 통한 외국인 투자환경 개선

- 지적재산권 및 의료·주거·교육환경 관련 제도를 개선하여 외국기업 근로자들의 현지 정착 환경을 개선
- 현금 지원한도 상향 조정, 인센티브 총액 상한제 도입 및 선택권 부여, 법인세 감면 폭 확대, 외국인투자유치지역내 부담금 완화 등 인센티브 제도 마련

◦ 선택과 집중 전략을 통한 외국인 투자유치 체제 개선

- 기존의 전 산업분야 유치전략에서 중점분야를 선정하는 유치전략으로 전환하고, 지역산업과 관련된 기업을 중점 유치하여 투자유치 전략의 효율성을 제고
- 중앙정부와 지자체, 외국인 투자유치 전문기관이 협력하여 투자유치에 적극 대처하고, 유치 후 관리 및 조정까지 지원하는 전담조직 마련

◦ 규제 완화 및 예산 지원을 통한 투자유치지역 확대

- 외국인 투자의 주요 거점지역인 경제자유구역의 심의 및 승인과 관련된 제도 기준을 완화하여 외국인투자지역의 활성화를 도모
- 외국인 전용공단 조성 등을 통해 그린필드형 투자<sup>22)</sup>를 원하는 외국기업의 경비 부담을 완화하고 부담금 완화, 세제 감면 및 세율 인하 등 예산 지원을 통해 투자유치의 장애요소를 제거

## (5)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신성장 산업 육성

### □ 3차원 지역발전전략과 연계한 특화산업 육성

◦ 지역연고·향토산업, 지역전략산업, 광역경제권 선도산업간 유기적 연계체계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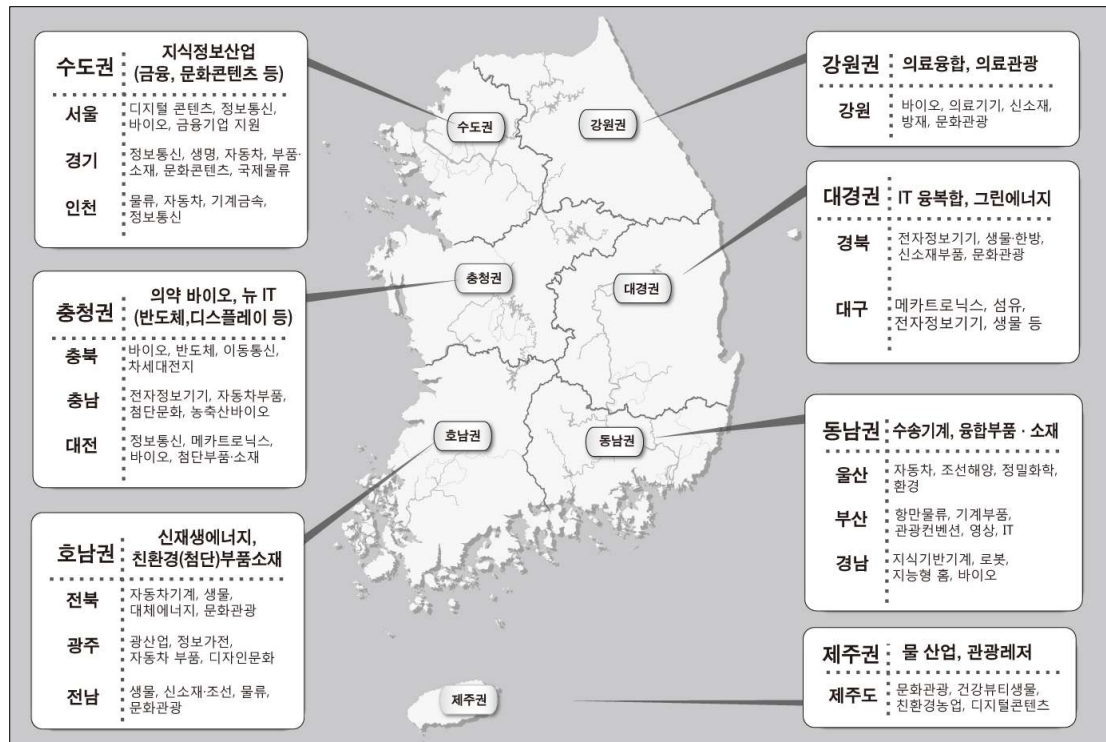
- 지역연고산업, 향토산업에서 시·도의 지역전략산업을 거쳐 광역경제권의 선도산업으로 단계적 발전을 유도하고 선도산업 간의 전후방연계를 고려한 지역산업발전체계 구축 지원
-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지역전략산업, 지역연고산업·향토산업은 지역여건에 따라 각각 5년~10년씩 선택과 집중을 통하여 지원

◦ 지역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광역경제권 선도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지원·육성

- 광역경제권 선도산업을 중심으로 기업 유치, 연구개발 및 기업 지원 등을 통해 산업클러스터 형성을 유도하고 국가적인 경쟁력을 확보한 지역전략산업은 선도산업으로 신규 선정하여 지원
- 광역경제권 선도산업이 임계규모와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여 자립적으로 추진이 가능한 경우 지원을 종료하고 신규 광역경제권 선도산업을 발굴·지원

22) 그린필드형 투자는 국외 진출 기업이 직접 투자처에 새로운 생산라인을 만드는 등의 투자를 의미.

<그림 III-4>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및 지역전략산업



- 지역연고산업 · 향토산업 육성을 통한 기초자치단체의 경쟁력 제고
  - 지역연고산업, 향토산업의 경우 지역특구제도를 통한 규제특례,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재정지원을 통해 육성하고, 규모와 경쟁력을 확보한 경우 지역전략산업으로 선정하여 지원

## □ 융복합·녹색산업 등 신성장동력 육성 기반 조성

- 지식기반 경제화, 신기술 융합화 등 미래의 변화에 대응한 연구개발역량 강화
  - 산업분야간 연계 융합을 통한 新산업 창출 기반으로서 연구개발거점을 육성
  - 대도시의 연구개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연구개발특구 지정요건을 완화
- 제조업 혁신역량과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기반 조성
  - 신성장동력산업과 기존 주력산업, 첨단제조업과 관광산업의 동반발전 추진
  - 대학, 연구기관, 첨단기업 등과 지역 기업간 유기적인 네트워크를 통해 혁신역량 강화
- 미래 신성장동력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특화된 신산업 기반 조성
  - 미래 신성장동력산업, 녹색성장산업 등을 육성하기 위해 IT, BT, ET, CT 등에 특화된 산업 단지를 조성하고 선도기업과 선도가관이 집적된 녹색성장 맞춤형 신성장산업입지로 육성



- 산업의 입지특성에 따라 도시지역에는 도시첨단산업단지, 농어촌지역에는 풍력발전, 태양광 발전 등 입지특성에 맞는 신재생에너지 발전단지를 조성
- 첨단제조업과 관광산업의 융·복합화를 통해 신성장동력 창출
  - 로봇 생산, 요트 생산 및 첨단의료기기 생산 등 첨단제조업과 관광산업을 융·복합화
  - 해안권의 요트관광 활성화와 관련 부품 제조 및 수리 산업 육성, 고령화시대를 대비한 의료·휴양·관광산업 육성 기반 조성
- 지역특성에 맞는 다양한 규모의 산업클러스터 형성을 지원
  - 광역경제권 선도 및 연계사업을 중심으로 중소규모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산·학·연 네트워크를 통한 혁신역량 제고와 산업단지 혁신클러스터사업을 통해 기존 주력산업의 경쟁력 강화
  - 클러스터 형성을 위한 연구개발·창업·금융·마케팅·수출 등 R&BD(연구개발 및 사업화) 체제를 구축

## □ 신성장동력 육성을 위한 산업단지 조성 및 노후 산업단지 정비

- 저탄소 녹색성장시대에 부합하는 자원순환형 생태산업단지 조성
  - 신규 산업단지 조성시 청정에너지, 태양열 등 신재생에너지의 활용을 확대하고 자원순환 시스템 도입·구축과 탄소제로 생태산업단지 조성
  - 충분한 녹지의 확보 등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며, 첨단 녹색산업을 유치하는 저탄소 신 산업단지 모델을 구축·확산하고 정부 지원을 확대
- 노후 산업단지 재생을 통한 산업구조 고도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
  - 노후 산업단지는 기반시설 확충·개량, 오픈스페이스 확대, 저밀도 개발 등 환경친화적인 산업단지로 재정비하여 첨단·녹색산업 유치 활성화
  - 생산기능 중심의 기존 산업단지를 연구개발, 유통, 마케팅, 디자인 기능 등을 갖춘 복합 산업단지로 전환 및 구조 조정하여 재활성화 모색
- 맞춤형 산업입지 공급 확대 및 개별입지 집적지역에 대한 계획적 관리방안 마련
  - 국가산업단지(대구, 포항, 장항, 광주·전남, 구미) 및 장기임대산업단지를 수요에 대응하여 공급하고 도시내 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
  - 개별입지 집적지역의 경우 준산업단지로 지정하여 산업단지에 준하는 진입도로 등 지원, 상하수도 정비, 폐기물처리시설 집단설치 등 관리

## (6) 국토의 문화적 품격 제고와 역사·문화·관광자원의 연계 활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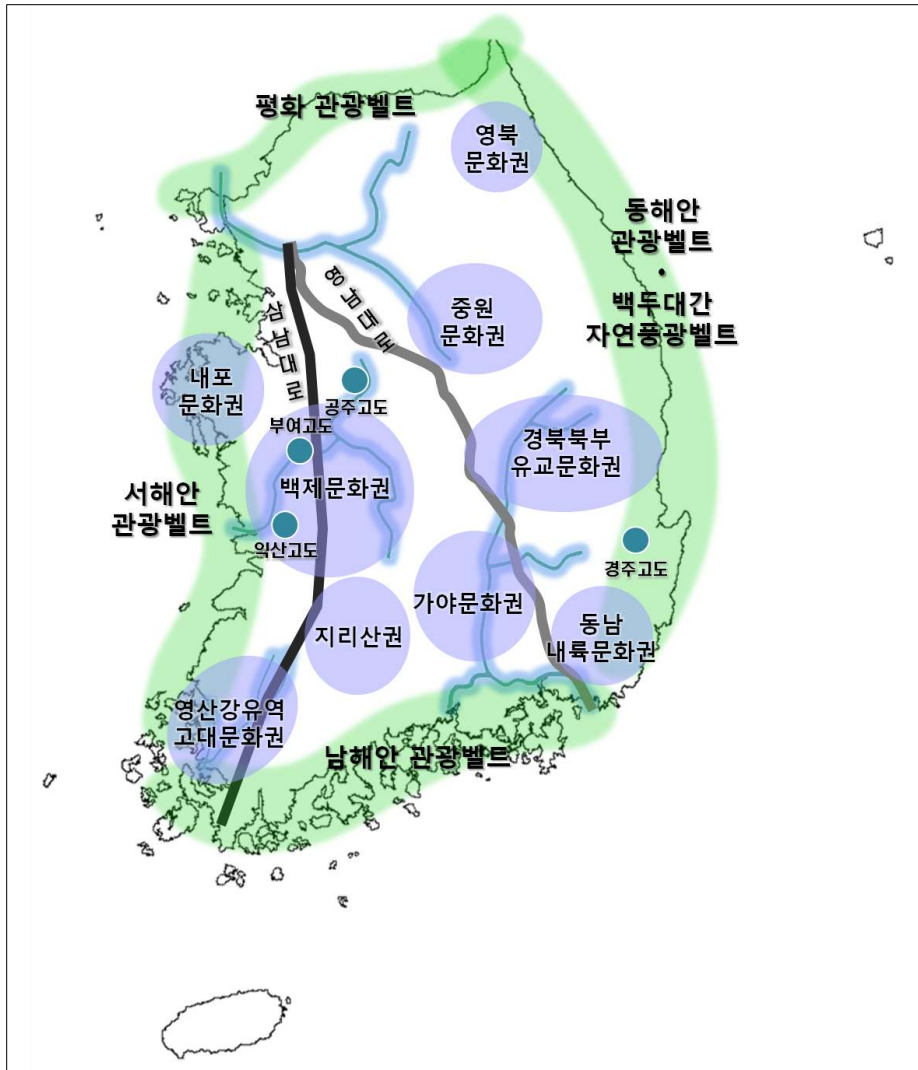
### □ 역사·문화축 조성을 통한 국토의 문화적 품격 제고

- 국토 전반에 흩어져 있는 역사·문화의 흐름을 파악하고 이를 지역의 관광자원과 연계하는 역사문화축 조성을 통해 국토의 문화적 가치를 높이고 관광경쟁력 제고
  - 백제시대에서 근대까지 생활문화권역을 연결하는 백마강 역사·문화축(공주-부여-강경-익산) 조성
  - 한강·낙동강 주변의 역사유적·나루터·주막·민속·설화 등을 연계하는 영남대로 역사·문화축(동래-대구-문경새재-충주-용인-성남) 조성
  - 역사상의 문물이동 통로를 연결하는 삼남대로 역사·문화축(해남-광주-정읍-공주-천안-수원) 조성
  - 백두대간 자연풍광벨트, 평화관광벨트(파주-철원-고성 접경지역 일대), 해양관광벨트 조성

### □ 문화관광권역별 특성화로 관광산업의 경쟁력 제고

- 문화·관광자원의 특성 및 분포, 접근 교통체계, 행정구역 등을 고려하여 전국을 특성 있는 문화관광권역으로 구분하여 개발
  - 동·서·남해안 및 접경지역의 광역관광벨트, 백제문화지역·유교문화지역·지리산 등과 같이 특정 자원이 여러 행정구역에 걸치는 광역관광권을 문화관광 특정지역으로 개발·육성
- 4대강과 연계한 유적 및 강변 문화·관광벨트를 조성하여 문화·관광자원 확충
  - 한강을 중심으로 강원도, 충청북도, 경기도, 서울시 등 다양한 지역의 역사·문화자원을 연계하는 강변문화·관광벨트를 조성
  - 금강을 중심으로 공주·부여 등 백제문화자원을 연계하는 강변문화·관광벨트를 조성
  - 낙동강을 중심으로 안동 등 유교문화자원을 연계하는 강변문화·관광벨트를 조성
  - 영산강을 중심으로 진안, 하동, 광양, 지리산 등 고대역사·문화유적 및 수려한 자연환경자원을 연계하는 강변문화·관광벨트를 조성

<그림 III-5> 문화관광권역 및 관광벨트



## □ 고도(古都) 육성을 통한 국토의 문화경쟁력 제고

- 고도의 훼손된 역사적 골격을 계획적으로 복원하여 국토 전반의 역사적 정체성과 문화적 품질을 제고하는 전진기지로 활용
  - 과거의 문화재 중심의 소극적 보전에서 벗어나 광역적으로 고도의 역사·문화환경을 회복하고 조성하여 고도의 역사적 진정성 회복 추진
- 고도가 가진 유·무형의 역사자산과 자연지형, 역사적 사건 등을 공간계획적으로 연계하여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관광자원으로 육성
  - 고도의 유적과 산, 하천 등을 설화, 역사적 사건 등과 연계한 탐방로를 조성하고, 스토리텔링 기법을 통하여 부가가치 높은 관광자원으로 조성

- 고도의 역사적 정체성 확립과 함께 고도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쇠퇴한 도심기능을 재생시켜 고도 활성화 추진
  - 고도의 역사·문화경관과 조화되는 형태로 현 주민의 주거환경을 개선
  - 고도가 가진 역사적 정체성과 도시적 기능을 조화시켜 쇠퇴한 도시기능을 재생

## □ 지역문화의 진흥 기반 구축과 지역 역사·문화자원의 창조산업화

- 문화인프라 최소기준 설정 및 중장기적 문화환경 조성계획 수립
  - 지역문화자원을 활용하여 박물관, 미술관, 공연장 등 기초문화시설 확충
  - 지역문화 전문인력의 체계적 양성 및 문화프로그램 개발
- 지역 역사·문화자원의 관광상품화 및 콘텐츠산업화
  - 지역 고유의 문화자원에 대한 장소마케팅 전략을 통해 관광상품으로 개발하여 지역 문화자원의 부가가치 향상
  - 문화상품 생산을 통한 경제적 이득과 함께 장소마케팅으로 관광객을 유치함으로써 지역이 문화상품의 생산 및 소비 공간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지원
- 문화자원을 활용한 지역의 특화발전과 창조지역 개발
  - 지역 문화자원 및 관광상품, 콘텐츠 창출을 통하여 지역 활력을 제고하고 자립적 특화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
  - 역사 및 전통문화 공간 확충과 함께 지역주민이 주체가 되는 창조지역 개발 확대
- 지역 문화산업진흥지구를 지정하여 지역 문화자원의 창조적 산업화 지원
  - 문화관련 산업이 집적된 지구를 문화산업진흥지구로 지정하고, 기업의 세제혜택 등 지원을 적극 추진
- 지역별로 문화산업클러스터를 육성하여 산업연관효과 제고
  - 일반산업단지와 달리 공연예술시설, 테마파크 등의 위락·문화 시설을 갖춘 문화상품 위주의 복합형 클러스터로 조성

## 제2장 자연친화적이고 안전한 국토공간 조성

### 1. 현황과 문제점

#### □ 강·산·해 국토생태망의 연결성 미흡

- 국토의 생태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효율성과 경제성에 치중함으로써 강·산·해 등 주요 국토생태망의 단절 초래
- 개발에 따른 자연환경 훼손에 대한 사전적 조치 및 사후관리체계 미흡
- 점적·산발적으로 무분별하게 이루어지는 해양의 개발행위, 대규모 간척·매립사업 등으로 인해 해양환경의 변화가 가속화

#### □ 수자원의 안정적 확보 및 친수공간 활용 미흡

- 이용 가능한 수자원량이 적고, 강우가 계절적·연도별·지역적으로 편중
- 기후변화에 따른 이상가뭄의 빈발로 물 부족이 심화되고 하천유량도 감소할 전망
- 물 확보 및 이용을 둘러싼 분쟁 심화, 기후변화로 인한 극대홍수 및 가뭄 증가 등으로 물 관리 여건은 점차 악화
- 국민소득 증가로 친수공간에 대한 요구가 증대하고 있으나 체계적 활용 부족
- 기존 하천조사는 이수와 치수, 수질 등 개별 하천기능 중심으로 구성되어 관련 정보간 연계가 부족하여 종합적 판단에 어려움

#### □ 전지구적인 온난화 진행에 대한 대응 미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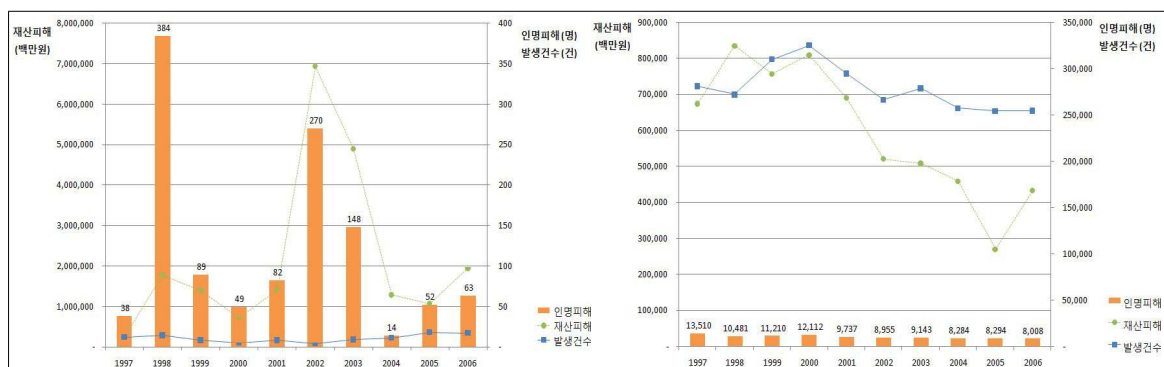
- 지구 온난화가 인류 생존의 위협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 평균기온 상승폭은 세계 평균수준을 크게 상회
  - － 지난 100년간(1912~2008년) 우리나라 기온은 1.7℃ 상승(세계 평균 0.74℃ 상승)
- 국토개발의 모든 분야에 있어서 녹색성장과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국가적 차원에서 녹색성장 정책 추진중
  - － 하수설비 등 환경기반시설은 양호하나 생태계 보존, 대기관리 및 에너지 부문은 개선 필요

- ‘물관리종합대책(1996)’, ‘4대강 수계 물관리종합대책의 수립·추진(1998-2000)’ 등으로 4대강 수질이 개선되기는 하였으나 아직 미흡
- 수질환경기준 달성률이 35.6%(2006년 전국 하천 194개 구간)에 불과하며, 특히 영산강(25%), 낙동강(33%) 수계는 전국 평균에 미달

## □ 재해 대형화에 대응한 통합적·계획적 방재체계 미흡

- 자연재해<sup>23)</sup> 및 인적재해<sup>24)</sup>로 많은 재산피해와 인명피해 발생
  - 자연재해로 인해 연평균 약 2조 원의 재산피해와 약 119명의 인명피해 발생
  - 인적재해로 인해 연평균 약 6천억 원의 재산피해와 약 1만 명의 인명피해 발생
- 기후변화 등 자연적 여건변화와 하천 주변 도시화 등 사회적 여건변화로 인해 홍수 피해 규모가 증가되고 홍수발생 가능성도 증가
  - 연평균 피해액은 1980년대 4800억 원에서 1990년대 7000억 원, 2000~2006년 2조 6000억 원으로 증가하였고, 노후 구조물 증가로 인한 홍수 위험성이 증대

<그림 III-6> 최근 10년(1997~2006년)간 자연재해(좌) 및 인적재해(우) 발생 추이



- 방재대책이 입지계획, 토지이용계획 등과 병행되지 못하고 개별 시설물 중심의 대책으로만 수립되어 공간계획적 접근에 의한 방재시스템이 미흡
- 통합적·협력적 재해관리체계 미흡
  - 재해 관리를 위한 예방, 대비 관련업무가 분산되어 있고 방재대책은 주무부서별로 개별 시설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기후변화에 따라 대형화 되는 재해에 대비 미흡

23) 자연재해 : 태풍·홍수·호우·강풍·풍랑·해일·대설·가뭄·지진·황사·적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24) 인적재해 :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화생방사고·환경오염사고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일정규모의 사고.

## 2. 여건변화 전망

### □ 통합적 수자원 관리와 친수환경에 대한 요구 증대

- 생존을 위한 3대 안보자원으로서 물 확보 중요성이 증대될 전망
  - 수자원이 식량·에너지와 함께 생존을 위한 3대 안보자원으로 인식되어 안정적 용수 확보와 관리 필요성이 절실해 질 전망
- 기후변화 등으로 물 수요의 증가가 전망되나 신규 수자원 확보가 더욱 어려워지고 한정된 수자원의 효율적 활용 및 배분 필요성도 증대될 전망
- 물 관련주체 간의 분쟁 심화 및 과학적 수자원 관리의 중요성 증대
  - 최적의 수자원 관리와 물 분쟁의 합리적 조정·해결을 위한 지속적이고 과학적인 수자원 관리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될 전망
- 하천환경 유지·개선을 위한 하천유지용수 및 환경개선용수의 확보 필요성 증대
  - 도시화로 인한 불투수층의 증가와 기후변화 등으로 중소하천에서의 건천화가 더욱 심해질 전망
  - 수변지역에서의 다양한 활동·시설유지에 필요한 환경개선용수의 수요 또한 증대
- 하천을 이용한 다양한 문화콘텐츠 개발의 필요성 증대
  - 하천과 주변 지역의 문화적 요소들을 연계 발굴하여 하천을 매력적인 새로운 도시공간으로 개발하기 위한 정책적 필요성 증대

### □ 기후변화 문제에 대응하는 녹색경쟁체제 가속화

- 세계 각국이 기후변화를 새로운 기회로 활용하여 새롭게 도약하기 위한 ‘녹색경주 (Green Race)’ 심화 예상
  - 생산과정에서 자원과 에너지의 투입을 줄이고, 녹색기술과 녹색지식을 통한 저탄소녹색 성장 구현 요구 증대 전망
- 최우선 국제의제로 급부상하고 있는 기후변화협약에서 선도적 역할 필요성 증대
  - 체계적인 감축 잠재량 분석 및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한 감축 목표에 따라 국토분야의 온실가스 감축전략 필요

- 협력적 국토환경관리 거버넌스 구축 필요성 증대
  - － 지방화, 분권화의 추진으로 환경정책이 중앙과 지방의 역할 분담, 지역주민의 참여와 협력 체계 구축 등 다양한 형태로 전개될 전망
- 녹색경제와 녹색환경의 구현을 위해 녹색생활 실천전략 필요성 증대

## □ 쾌적하고 안전한 국토공간 확보 필요성 증대

- 기후변화로 인해 홍수, 가뭄, 폭설, 폭염 등의 자연재해 발생빈도가 높아지고 피해 규모도 대형화될 전망
- 기후변화, 대기불안정 등에 따른 돌발성·국지성 호우로 인한 피해 가능성 증대 전망
- 수공구조물의 위험성 증가 및 비구조물적 대책의 중요성 증대
  - － 기존의 댐 및 제방만으로는 이상홍수에 대비하기 어려우며, 구조물적 치수대책과 함께 홍수예보·피난·홍수보험 등 비구조물적 치수대책의 필요성 증대
- 도시화와 인위적 공간 창출 증대로 인해 재해 가중
  - － 도시개발에 따른 불투수면적의 증가, 지하공간, 고층빌딩 등의 증가는 수해, 화재, 지진 등 재해 피해를 가중
  - － 도시지역에 인구와 기반시설이 집중되어 재해 발생시 막대한 인명 및 재산피해 우려



### 3. 추진과제

#### (1) 江·山·海를 연계한 국토 품격의 새로운 창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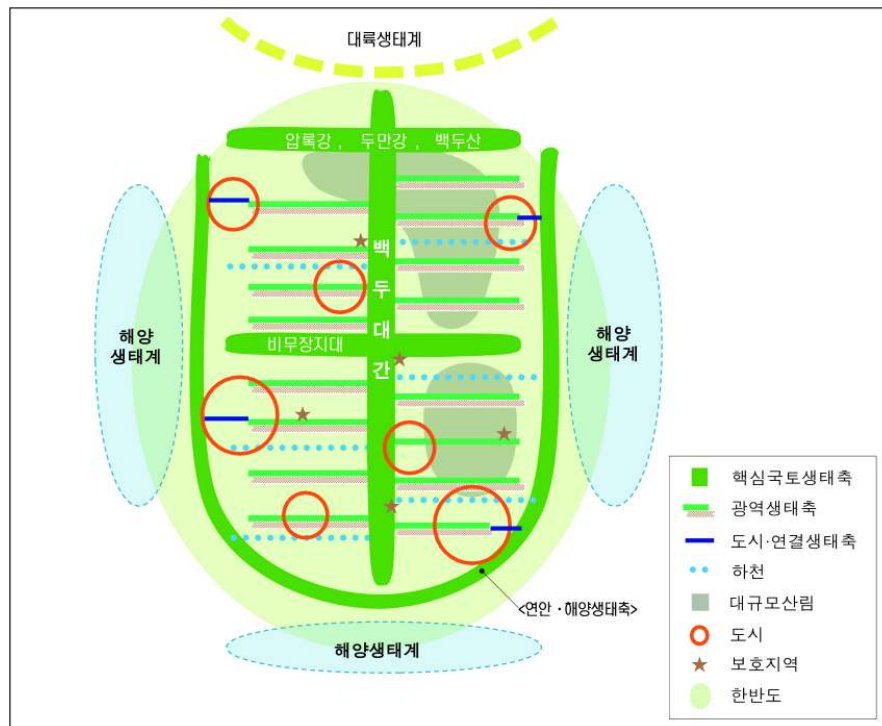
##### □ 국토 전체를 아우르는 강·산·해 통합 국토관리체계 구축

- 국토는 산에서 강이 발원하고 바다로 유입되는 하나의 통합된 시스템으로서 강·산·해 통합관리를 통해 국토관리의 효율성 제고
- 강·산·해 통합 국토관리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녹색성장의 기반 형성
  - － 국토의 주요한 생태적 자원을 핵심국토생태축, 광역생태축, 도시·연결생태축 및 연안·해양생태축으로 구분하고 각 생태축에 대한 역할 및 공간영역 설정

<표 Ⅲ-5> 강·산·해 통합 국토관리네트워크 구축

구 분	개 념	역할 및 관리방향	공간영역
핵심국토 생태축	한반도의 생태적 골간을 이루는 생태축으로 국가 생물자원의 보고이므로 후손을 위해 반드시 보전해야 할 생태축	중요 생물자원의 현지내 보전기능을 하므로 절대보전지역으로 관리하고, 과학연구 등 최소한의 활동만 허용	백두대간, 연안, 비무장지대
광역 생태축	국토 단위의 핵심생태축과 도시·연결생태축을 연결하는 생태축	지역 단위에서 생태계의 구조와 기능을 유지하는 역할을 하므로 광역생태축의 범위를 설정하고 보전할 지역인 핵심지역과 환경친화적 이용을 허용하는 완충지역으로 구분하여 관리	주요 정맥
도시·연결 생태축	도시지역의 생태적 가치와 생물 다양성을 보호·확보하기 위해 생태적 중요지역을 보전·복원하여 연결한 생태축	도시지역의 녹지나 자연생태지역의 파편화를 최소화하기 위해 물리적으로 연결된 생물 서식공간으로서, 도시 생물 다양성의 증진과 동식물의 이동통로 기능을 하며, 도시민에게 다양한 여가공간을 제공	개발제한구역, 도시하천, 공원·녹지
연안해양 생태축	연안과 해양의 생태적 건강성을 유지하고 주요 생태적 거점을 보호	해양의 주요 서식지 평가, 연안 주요 서식지 및 자원관리 우선순위 평가, 연안·해양 생태자원 및 생태축 지도화	연안, 해양공간

<그림 Ⅲ-7> 강·산·해 통합 국토관리네트워크 개념도



◦ 통합적 국토관리를 위한 강·산·해 연결지점의 관리 강화방안 마련

- 강과 산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관리하고, 강과 산이 만나는 전이지대(Ecotone)의 관리 강화
- 강과 바다가 만나는 하구지역은 생물 다양성과 생산성이 매우 높은 지역으로 자연형성과정 (Natural Process)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관리
- 산과 바다가 만나는 연안지역에서 건축물 및 시설물의 설치에 해안경관관리 가이드라인을 통해 허용 여부 결정

□ 강을 중심으로 한 품격있는 국토 개조

◦ 4대강 살리기 사업, 지류 정비 등을 통해 홍수 피해와 물 부족을 근본적으로 해결

- 기후변화에 대비한 퇴적토 준설, 홍수조절지 및 강변저류지 설치 등을 통해 홍수조절 능력을 증대하여 주요 江 주변은 200년 빈도 홍수에도 안전하도록 조성
  - ※ 4대강 본류는 4대강 사업으로 2012년까지 우선 정비하고, 4대강에서 제외된 나머지 국가 하천 및 지방하천도 단계적으로 정비 추진
- 하도 준설, 보 설치, 중소규모 다목적댐 건설, 기존 농업용저수지 증고 등을 통해 용수 확보량 13.0억m³를 증대
  - ※ 장래 물부족과 가뭄에 대한 대처역량 제고는 물론, 갈수기에도 풍부한 하천 유지유량 확보

- 수질 개선과 하천 복원으로 생명이 살아숨쉬는 수생태계 조성
  - 하수처리시설 확충, 비점오염 저감 등을 통해 하천으로 유입되는 오염원을 사전에 저감하여 낚시가 가능하고 수영할 수 있는 ‘좋은 물’의 비율을 대폭 향상
  - 하천 수생태계 현황 진단 및 훼손구간에 대한 단계별·체계적인 생태하천 조성 및 복원을 통해 수생태계 건강성 제고
  - 생태습지, 하천숲 조성, 하천내 농경지 정리 등을 통해 수변생태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
- 강을 중심으로 국민 여가문화 수준 및 삶의 질 향상과 지역 활성화 유도
  - 홍수 방어, 물 확보 외에 수변접근성, 문화·레저공간 등을 고려한 복합하천정비를 통해 주민들의 문화·휴식공간 및 여가활동 기회 제공
  - 강을 중심으로 자연·문화·역사자원 등 지역성·장소성을 감안한 경관거점(Landmark) 조성을 통해 관광자원 개발 및 지역경제 활성화 유도
  - 4대강 살리기 사업, 지류하천 정비 등을 통해 강 살리기의 효과를 전 국토에 골고루 돌아가도록 함으로써 지역균형발전 효과 제고
- 4대강 등 주요 江 주변지역을 체계적으로 보전·활용
  - 4대강 등 국가하천 주변지역의 난개발 방지와 체계적 활용을 위해 국가하천 주변 일부 지역을 친수구역으로 지정·조성 추진
  - 수질 보전, 수변경관 향상 등 사전대책을 감안함과 동시에 지역특색, 여가패턴 변화, 고령화 등을 반영한 차별화된 주변지역 활용전략 마련
  - 지역의 역사·문화·관광자원 등과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 창출 유도
  - 수변공간을 중심으로 품격있는 국토공간 조성을 위해 친수구역 개발 및 관리 지침을 마련

## □ 산을 휴양 및 경제공간의 거점으로 활용

- 백두대간을 녹색 국토관리네트워크로 보전하고, 이외의 지역은 도시민의 여가수요에 대응한 휴양공간으로 조성
- 보전가치가 낮은 구릉지·산지를 계획적으로 활용하여 山地의 경제적 잠재력 극대화
  - 구릉지·산지의 계획적 활용과 자연친화적 개발을 위한 지침을 작성하고 개발절차의 간소화, 기반시설의 지원, 세제 감면 및 금융 지원 등의 제도 개선

- 보전가치가 높은 구릉지는 도시녹지 확보 차원에서 보전하되, 보전가치가 낮은 지역을 대상으로 구릉자산지의 경제적 가치 극대화를 위해 주거·업무·상업·공업 용도를 혼합할 수 있는 혼합용도지역제 도입 검토

◦ 백두대간의 효율적 관리와 비무장지대 생태계의 통합적 관리

- 백두대간 핵심지역의 보전·복원을 강화하고 완충지역은 에코 트레일(Eco Trail) 또는 국토녹색길(GKT: Green Korea Trail)로 조성하여 친환경적으로 활용도 제고
- 비무장지대 및 주변지역의 토지를 비롯한 자연생태정보 구축과 토지이용 규제

## □ 바다를 국민의 고품격 휴식처로 개선

◦ 육지와 바다의 연접지역인 연안지역을 친환경적인 해양공간으로 조성

- 중요한 휴양공간인 연안지역을 친환경적인 관광여가지대(Eco Resort Zone)로 조성하고 건축물 및 시설물 설치와 해안경관 관리 가이드라인 마련
- 하구역 생태적 재개발 등 녹색성장의 토대 구축을 위한 하구역 종합관리 시스템 개발

◦ 바다를 친환경적인 해양공간으로 개발

- 해양생태계의 건강성과 지속가능성을 바탕으로 늘어나는 해양 관광·휴양 수요에 대응한 바다 중심의 리조트 인프라 구축 및 지속가능한 연안·해양관광거점 조성

◦ 인프라 개발 및 접근성 증대를 통한 풍부한 섬자원의 활용 제고

- 동·서·남해안의 청정한 자연환경과 섬자원을 활용하여 녹색생활 및 녹색관광을 실현하는 한국형 녹색섬(Green Island) 조성
- 녹색기술 적용을 기반으로 한 녹색인프라를 확충하고 이를 연계하여 섬의 정체성과 특성을 살리는 녹색관광자원 발굴
- 연안페리 운영 확대, 필요한 지역에 한해 연륙·연도교 건설 등을 통해 섬의 접근성 증대

## □ 품격있는 국토 형성을 위한 제도 정비

◦ 강·산·해 네트워크 통합관리 및 활용을 위한 원칙 마련

- 보전 및 활용지역 구분의 원칙과 보전지역 선정 후 활용지역 개발방안을 마련하고 통합관리를 위한 관리기구 정비 및 관련 법령 정비 등 제도 기반 구축
- 4대강 수변공간과 주변의 산·해 자원과의 연결 및 통합 활용을 도모하고, 강·산·해 자원을 국민건강 증진 그린인프라 시설로 활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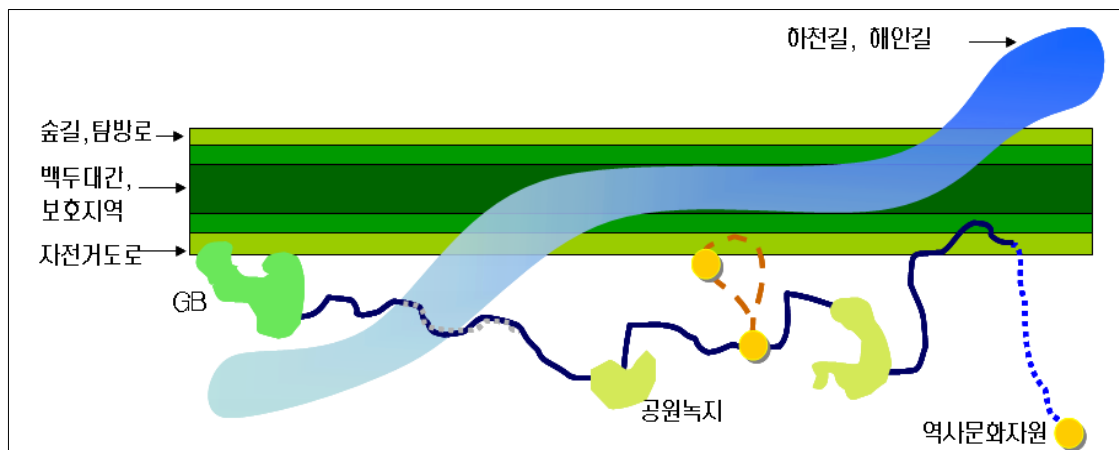
- 각종 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제기되는 자연환경 훼손 및 경관 부조화 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다양한 공간계획 수단 활용
  - 개발계획 수립시 자연환경 훼손 예방 및 복원방안 보강, 생태서비스(Ecosystem Services) 개념 도입 등 추진과 공간계획으로 인한 녹지 훼손시 녹지 유지를 위한 녹지총량제 도입
  - 공간계획으로 향후 온실가스 흡수원의 감소시 흡수총량 유지 또는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방안 제출을 의무화하고 환경지도를 작성하여 각종 계획과 환경성 평가에 활용
- 국민의 건강 증진과 공중보건을 고려한 건강도시 구현
  - 토지이용, 기반시설, 도심 및 주변환경, 공원·녹지 등 계획부문별로 국민건강 및 보건을 고려한 건강도시 요소 반영
    - ※ 도시공원 및 오픈스페이스 조성, 녹색 건강교통 기반 조성, 안전하고 매력적인 거리 조성 등
- 유역권 수질관리체계의 구축
  - 각 수계 상수원의 수질 관리를 위하여 해당 지자체, 관계부처 등이 참여하는 수계관리 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유역권별 오염총량제 확대 추진
- 훼손된 주요 산림생태계의 복원과 보전 기반 구축을 위한 산림지속성 평가체계와 연안역 생태계의 보전을 위한 연안통합관리체계 구축
- 현재 전국토의 9.6% 수준인 보호지역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 생태계 보전·활용을 위한 관련 제도를 정비
  - 적극적 보전이 필요한 지역은 엄격한 행위제한을 통해 관리하고, 환경친화적 이용이 가능한 지역은 지역주민 참여를 통한 생태관광을 적극 도입하기 위한 제도 마련

## □ 환경 및 건축디자인을 적용한 품격있는 국토경관 조성

- 품격있는 경관 형성을 위해 건축·경관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작성·보급
  - 계획과 설계의 통합, 지역별 건축설계 가이드라인 설정, 우수 공공디자인 사례집 보급, 가로 및 간판 정비, 지역주민 교육 및 홍보 추진
- 녹색국토 형성을 위해 국가조망점(주요 명승, 주요 강·산·해中 우수조망점)과 지역조망점(주요 랜드마크, 역사적 건축물, 주요 가로 등)으로 구분하여 지정·관리

- 경관조망 측면에서 국가적으로 중요하고 보전가치가 있는 지점을 국가조망점으로 선정하여, 국가조망점별 전략조망경관을 설정하고 경관 훼손을 관리
- 강·산·해 등 경관·생태 우수지역을 연결하는 국토녹색길 조성
  - 생태적 건전성을 유지하면서 건강·문화시설이 융합된 국토녹색길 조성
  - 생태형, 여가형, 건강형, 역사·문화형 등 사회경제적 여건과 인간행태 및 생태계 특성에 따라 구분하여 국토녹색길을 2020년까지 5,000km 조성
- 국토녹색길을 실현하기 위한 계획적·제도적·정책적 전략 추진
  - 장기 국토녹색길 기본계획, 실행계획 성격의 전국 국토녹색길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각종 관련 공간계획에 국토녹색길 계획을 반영하여 추진
  - 국토·광역·지역·도시 등 공간위계를 고려하여 단계별로 추진(우선적으로 4대강, 백두대간, 동·서·남해안 등 연안, 옛길 등)

<그림 III-8> 국토녹색길 개념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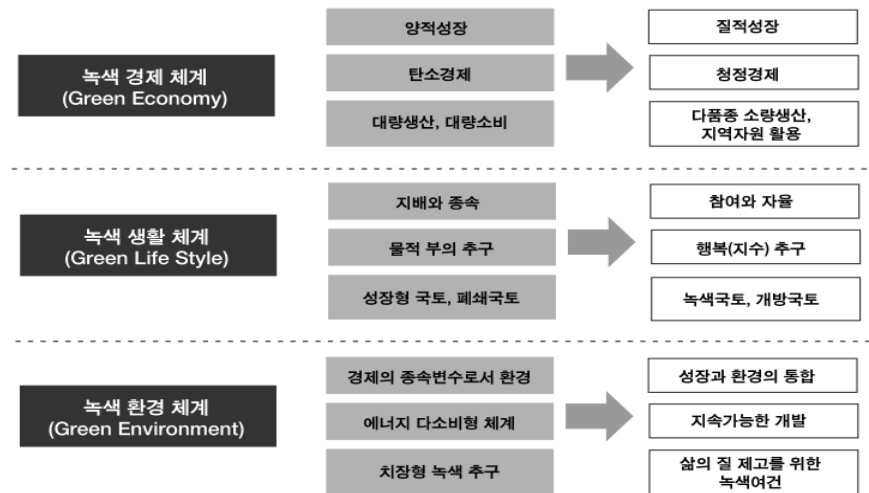
## □ 녹색국토 실현을 위한 3G 통합전략 수립

- 녹색경제(Green Economy), 녹색생활(Green Life), 녹색환경(Green Environment)을 통합하는 녹색국토의 비전 및 3G 국토관리전략 수립과 분야별 정책과제 발굴
  - 3G 선순환형 녹색국토 조성을 위해 기존의 양적·물적성장에서 질적성장, 행복지수의 향상으로 패러다임을 전환
- 녹색국토 실현을 위한 장단기 실천계획 수립 및 추진체계 정립
  - 국가에서 추진할 장단기 전략과 추진과제, 실천사업 및 프로그램을 포함하는 실천계획 수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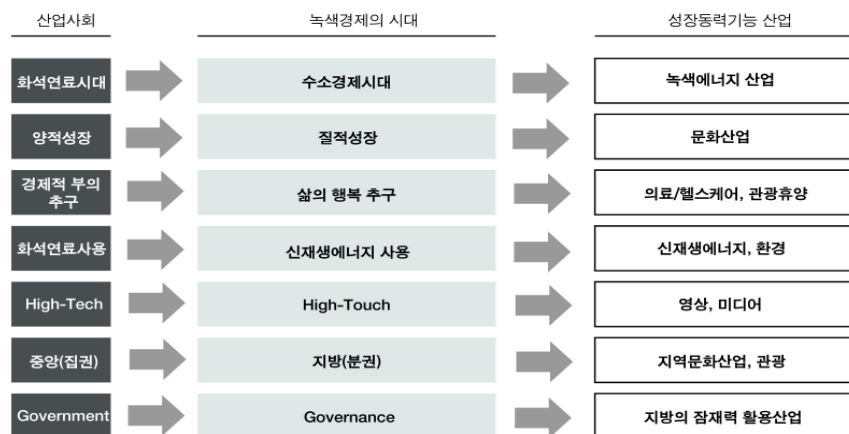
◦ 녹색 경제체계 구현을 위한 녹색국토 기반 조성

- 녹색산업 및 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한 인력 양성 및 확보, R&D 예산의 증대
- 에너지, 건설, 교통분야 등 경쟁력 있는 녹색산업의 육성을 통한 녹색일자리 창출
- 녹색산업 육성을 위한 산업단지 공급 및 기존 산업단지의 생태산업단지화 추진
- 에너지 다소비형 산업에서 저탄소형 산업으로 전환 등 산업구조 개편

<그림 III-9> 3G 선순환형 녹색국토를 위한 패러다임 전환



<그림 III-10> 녹색성장시대의 성장동력산업



◦ 녹색 생활체계 실천을 위한 기반 조성 및 국민운동 추진

- 자전거도로 및 건강문화생태회랑 등 녹색생활 인프라 조성 및 녹색교통 생활화
- 저탄소 녹색성장에 대한 인식 제고 및 사고 전환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학교, 기업, 관공서의 교육 강화
- 에너지 절약을 위한 교육 및 홍보 강화와 자율적 실천을 위한 시민조직 지원 및 국민운동 추진

◦ 녹색 환경체계 구축을 위한 분야별 프로그램 작성

- 저탄소 환경 구현을 위해 1인당 에너지 사용 저감, 온실가스 흡수원 증대, 에너지 절약형 건물 개발, 대중교통의 이용 등 온실가스 배출량 저감방안 마련
- 녹색교통 활성화(철도, 그린카, 대중교통 활성화, 자전거 보급 등)를 위한 교통수단간 연계 체계 구축
-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국가 종자은행(Seed Bank) 확대 및 온난화에 대비한 신품종 개발 등

□ 녹색성장형 국토 관리를 위한 국제협력

◦ 녹색 모범국가에 걸맞는 기후변화에 대한 국제적 지원·협력 강화

- 경제성장 및 환경문제 해결에 대한 경험과 기술을 개발도상국 및 후진국에 적극 보급

◦ 동북아 지역협력체제 구축 및 동북아 환경협력기구 설립

- 기후변화, 사막화, 황사 등 지구적 환경문제에 대응하는 관측망 및 예·경보 시스템 구축을 위해 동북아 협력체제 강화와 상시 협의체인 환경협력기구 설립
- 황해·동해 등 해양환경 보전과 해양자원 공동관리 및 이용 전략 수립

(2) 인간과 강이 함께하는 친수 국토공간 조성

□ 하천 관리의 패러다임 전환

◦ 강의 다목적 이용·관리로 국토가치 증진

- 대하천 본류를 중심으로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의 연계성을 고려한 치수(治水), 이수(利水), 친수(親水) 등과 수질을 고려한 종합적인 강 이용·관리 체제 구축
- 강과 수변공간의 연계 강화를 위한 계획적·통합적 관리
- 홍수에 안전하면서도 맑고 풍부한 물이 흐르며 생태계가 살아있는 자연형 하천 복원을 통해 생태계 복원 및 도시민의 어메니티 증진
- 역사·문화 및 자연경관자원을 활용하여 강을 지역문화의 거점축으로 육성

◦ 4대강 살리기 사업과 연계한 건강·문화·복지공간 조성 및 하천관리체제 구축

- 수변경관 등의 인프라를 활용하기 위한 다양한 연계사업을 추진하고, 명품숲, 생태습지, 시민공원, 자전거도로 마련 등 수변공간을 녹색 건강인프라로 조성



- 하천변에서 역사적으로 이용된 옛길을 복원하고, 주변의 역사·문화자원 스토리텔링 기법과 결합한 다양한 수변길 조성
- 중앙정부·지자체·주민의 협력을 통한 수량, 수질, 수변공간 통합관리
- 국가하천 정비 이후 지방하천, 소하천의 점진적 정비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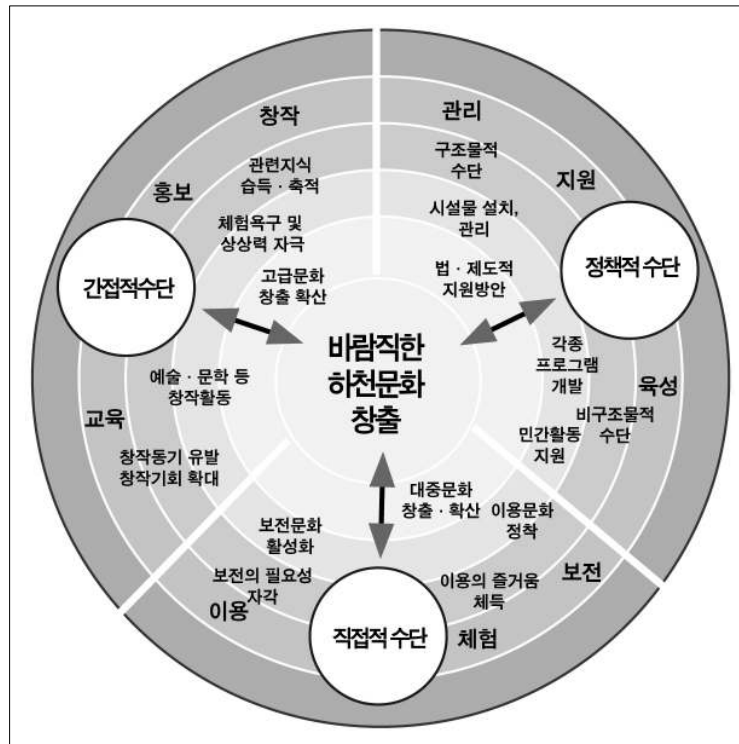
<표 III-6> 4대강 살리기의 유역별 핵심사업

구 분	주 요 내 용
한 강	· 남한강의 홍수 방어, 생태 복원 및 여가 기반 조성
낙동강	· 물 부족과 홍수 방어 대비 및 생태계 복원
금 강	· 백제 문화유산과 연계한 지역발전
영산강	· 홍수 방어와 수질 개선

자료 : 국토해양부 ·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 2009.7.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

- 건전한 하천문화 창출을 위한 다양한 문화 콘텐츠 및 프로그램 개발
  - 하천과 주변지역을 다양한 문화·레저 활동이 가능한 공간으로 조성·활용하기 위한 다양한 문화 콘텐츠 및 프로그램을 발굴·활용
  - 바람직한 하천문화를 창출하기 위해 정부·지자체·민간이 참여하는 지역공동체를 구성·운영
  - 이수, 치수, 환경, 친수 등이 함께 고려된 하천관리 통합지표의 개발·운영

<그림 III-11> 하천문화 창출 개념도



## □ 물 부족 해소 및 물 이용의 다양성 제고

### ◦ 가뭄 및 물 부족 지역 종합대책을 수립·추진

- 도서·연안·산간지역 등 물 공급 취약지역에 대해서는 지하수 개발, 해수 담수화, 육지와와 상수도 연결 등 다양한 공급방안을 마련
- 중·장기 가뭄예보 및 가뭄관리체계를 마련하여 계절적·국지적 가뭄에 대비하고, 예측 시스템을 개선하여 가뭄예보의 정확성 제고
- 광역 용수공급시설의 지속적 확충 및 연계를 통한 용수 공급의 안정성 제고
- 생·공업용수는 기후변화에 대비 공급예비율 개념을 도입하는 한편, 공공지하수 개발 및 활용을 통한 선제적 가뭄대책 마련

### ◦ 물 절약 및 수요관리정책의 지속적 추진

- 물 절약 목표를 달성한 지자체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를 위해 평가·보상체계 마련
- 적정 용수가격 및 구간별 누진요금제 적용 검토, 중수도 및 절수형 기기의 보급 확대 및 지원 등 물 절약 및 재이용을 유도·확산

### ◦ 기존 시설의 이용 극대화 및 신규 수원 확보

- 기존 댐 및 저수지를 재개발하여 용수 확보능력을 증대
- 신규 댐 건설, 지하수·지하댐 개발, 빗물 관리, 해수 담수화, 인공강우, 하·폐수 처리수 재이용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규 수원을 확보

### ◦ 물 분쟁 해소를 위한 법·제도적 개선방안 마련

- 수리권의 법적 개념을 정립하고, 단계적으로 관행수리권을 허가수리권으로 전환하는 등 수자원 공개념을 정착화
- 용수확보·용수요금·수질오염·지역발전·유역변경 등 다양화되고 있는 물분쟁의 원인을 분석하여 합리적 해결원칙과 해결방안을 마련
- 남북 공유하천인 임진강·북한강의 공동개발·이용·관리와 한강 하구의 보전 및 개발과 관련된 남북간 분쟁 방지방안 강구

### ◦ 목표수질 달성을 위한 종합적 수질 개선대책 추진

- 수원 함양 및 상수원 관리, 오염물질 유입 차단 및 처리방안 등 발원지에서 하구에 이르는 수질 개선방안 마련
- 목표수질 달성 지자체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마련

◦ 맑고 풍부한 하천유지용수 확보

- 갈수기 수량 확보 및 수질 개선을 위해 분산식 빗물관리, 처리수 재활용, 타 하천과의 연계·도수 등 하천별로 충분한 양의 하천 유지용수 확보방안을 마련
- 도시별·용도별 환경용수 수요추정방법을 개발하고, 적절한 환경용수 확보방안을 마련

□ 최적의 홍수 관리를 위한 전략적 치수대책 수립

◦ 하천의 홍수 방어능력 제고

- 4대강 하천은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을 통해 기후변화로 증가될 홍수량에도 안전하도록 정비
- 4대강 이외 국가지방하천도 단계적으로 정비, 주요 도심부는 2020년까지 4대강 수준의 홍수 방어능력 확보
  - ※ 경제·사회적으로 중요한 지방하천은 국가하천으로 승격 관리
- 노후 제방의 보수·보강 및 제방 안전도를 점검·평가하여 기존 댐 및 제방의 안전성 및 치수능력 제고
- 최근 발생한 이상강우를 고려한 한국 확률강우량도 개정을 통해 도시지역 홍수 방어능력 제고

◦ 홍수 저류공간 확대 및 기존 댐의 안전성 확보

- 댐 등을 통한 홍수 저류공간을 2020년까지 現 54억 톤에서 70억 톤으로 30% 확대하여 유역 차원의 방어능력 제고
- 극한 홍수에도 댐의 월류·붕괴 등을 방지하기 위해 대청댐 등 23개 기존 댐의 안전도 증대 사업을 2015년까지 완료

◦ 특정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 방지 종합대책 마련

- 침수피해가 빈발하거나 우려되는 지역을 특정도시하천관리구역으로 지정·관리
- 지정지역은 하천과 하수도, 빗물 펌프장, 저류지, 빗물유출 저감시설 등의 도시 배수시설을 연계한 종합 치수대책 추진

◦ 홍수위험지도 제작 및 첨단 홍수 예·경보 시스템 구축

- 홍수범람시 침수지역과 침수깊이 등을 알려주는 홍수위험지도를 제작·배포
- GIS기반의 홍수 시뮬레이션 자료 등을 활용, 집중호우시 사전대비가 가능하도록 도시침수에 대한 예보체계 구축
- 강우레이더를 설치하여 강우 이동과 공간적 분포를 실시간으로 관측하여 돌발홍수에 대비
- 유역별 상세기상 감시 및 예측정보 생산기술 개발

## □ 기후변화에 대응한 과학적 수자원 관리

-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수자원을 식량·에너지와 함께 3대 안보자원으로 중점 관리
  - 기후변화로 인한 식량, 에너지, 수자원 부족에 대비하여 충분한 수원 확보와 안정적 공급을 지속적으로 추진
  - 물에 의한 청정에너지 생산 강화 및 CO<sub>2</sub> 저감형 수자원 관리체계 구축
- 과학적 수자원 관리 및 국가 수자원정보시스템 이용 활성화
  - 기후변화에 의한 극한 홍수상황에 대비한 새로운 개념의 설계·분석방법을 마련
  - 국가 수자원 종합정보시스템의 공동이용을 활성화하고 Smart Water Grid 등 다양한 물이용·관리를 위한 첨단 수자원 관리기술의 지속적 연구·개발로 과학적 수자원 관리의 기반 강화
- 기후변화 대응 하천유역 취약성 분석 및 적응책 마련
  - 기후변화에 의한 이수·치수·환경적 취약성을 유역별로 분석하고, 가뭄·홍수 등 하천환경의 미래 위험에 따른 예방대책 마련과 수자원 관리 관련 법령, 제도, 조직 정비
- 미래 물 관리 여건을 고려한 기술 선진화 및 해외 물 시장 진출
  - 4대강 살리기 등 기후변화 대응전략을 차질없이 추진하는 한편, 해수 담수화, 첨단 수자원 관리기술 등을 활용한 해외 물 시장 진출 전략 마련

## (3) 지속가능하고 안전한 국토공간

## □ 기후변화에 강한 방재국토 조성

- 기후영향에 따른 재해 관리체계 강화
  - 연안 토지이용의 계획적 관리 강화, 취약지역 해안침수예상도 제작, 사전경보시스템 강화 등 해수면 상승에 따른 재해예방 체제 강화
  - 기후변화에 따른 홍수, 가뭄, 폭설, 폭염 등의 재해에 대비하여 도시·교통·물류·기반시설 등 국토관리 및 감시·전달체계 마련과 예·경보 시스템 구축
-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통합도시계획지침 마련 및 입지와 토지이용을 고려한 기후적응 도시모델 개발·보급
  - 도시의 기후변화 적응능력 강화를 위해 입지와 토지이용 등을 고려한 도시 유형별 기후적응 모델을 개발·보급

- 대형 재해에 대비하기 위해 토지이용계획, 교통시설계획, 하천, 하수도 등 기반시설 계획, 공원·녹지계획 등이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통합도시계획적응지침 마련

◦ 기후변화 대응 구조물적 대책의 설계기준 강화 및 유연한 설계 기반 구축

- 하천, 제방, 하수도, 도로배수시설 등 도시하천의 배수체계 설계빈도를 상향 조정하고 지역 및 구조물 특성을 반영한 유연하고 탄력적인 설계지침 마련

## □ 선제적 방재능력 강화를 위한 방재도시계획 수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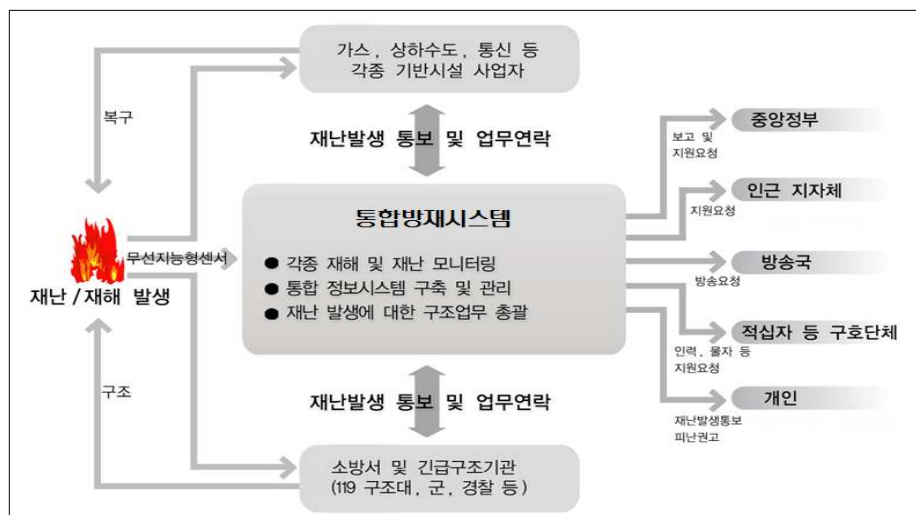
◦ 재해 위험도 분석을 통한 방재도시계획체계 확립

- 도시계획 수립시 재해 위험도 분석 절차를 마련하여 재해 위험이 있는 지역의 부적합한 개발을 피하고, 위험이 낮은 지역으로 개발 유도
- 광역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의 특성과 풍수해저감종합계획 등 관련 계획을 고려하여 도시계획내 방재계획의 내용 강화 및 체계화

◦ 홍수, 산불, 지진 및 해일 등 재해취약지역 분석을 통한 녹색방재축<sup>25)</sup> 설정

- 침수피해가 크게 발생하였거나 예상되는 홍수방어축(하천 및 유역)에 대한 종합계획 수립
- 중요 시설물의 내진 설계기준 강화, 재해대응 행동매뉴얼 작성 및 대피계획의 수립과 교육 실시
- 산불방어축 설정 및 지역단위 산불위험지도 작성을 통해 산불예방, 초기진화계획 수립

<그림 III-12> 통합방재시스템 구축 모형



25) 강, 산, 연안, 공원·녹지 등을 중심으로 재해 집중 관리를 위한 축(예 : 국토차원에서는 백두대간을 중심으로 산불방어축, 주요 하천변을 중심으로 홍수방어축, 연안지역을 중심으로 해일방어축 등 설정 가능).

- 재해 발생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선제적 첨단방재역량 확보
  - IT 기술을 활용한 첨단 통합방재시스템을 구축하여 각종 재해에 사전대응체제 확립
  - 위험 시설물 및 이동차량 등을 실시간 추적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IT 기술을 활용하여 건축물·시설물, 방재자원 등의 관리 고도화 추진
- 유형별·부처별로 분산·다기화된 재해 관리를 통합적·포괄적 재해관리체제로 전환
  - 재해의 1차 대응주체인 지자체 중심으로 다양한 이해관계자 참여를 통한 협력적 재해관리 체계 구축

## □ 사람 중심의 안심국토 조성

- 주민의 안전한 대피 확보를 위한 사전대응체제 구축
  - 재해위험지도, 주민대피지도 등 재해지도를 작성하여 지역 주민에게 배포·교육함으로써 주민들 스스로 위험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유도
  - 가구당 재해대피소 지정·관리, 피난로 확보 등 신속하고 안전한 사전대피체계 구축
  - 하천, 교통축, 공원·녹지 등을 중심으로 방재거점을 정하여 현장지휘소, 비상시 피난소, 물자 집결지, 비상도로 등으로 활용
- 도시형 재난에 대한 예방체계 강화
  - 화재, 교통사고, 폭발, 지반 붕괴, 식품안전, 전염병, 테러 등 도시형 재난에 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예방대책 추진
  - 초고층 빌딩, 지하철, 지하상가 등 지하공간 시설물에 대한 대피체계 수립 및 설계기준 강화
  - 문화재, 주요 랜드마크 등 중요 문화유산 및 자산에 대한 화재예방체계 강화,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안전관리기준 강화 및 다중이용업소 밀집지역에 대한 특별관리
- 안전·안심 교통체계 구축
  - 재해 발생시 긴급 수송, 대체운송, 긴급 물자공급 등을 위한 교통수단 및 시설의 다중성, 대체성을 확보하고, 교통사고 다발지역에 대한 중점 관리 및 대책 추진
  - 교통 정온화대책(Traffic Calming) 등을 통해 안전·안심 교통체계 구축

- 시설물의 재해 예방능력과 복구능력의 강화
  - 에너지(전기, 가스, 상하수도 등), 교통(도로, 철도, 항공, 선박 등) 등 기초 인프라의 다중화 등을 통해 시설 이용의 연속성 및 비상대응기능 강화
  - 재해 복구시 시설물의 신속한 기능 회복과 개량을 위해 재해 복구체계 개선
- 재해 약자를 배려한 안전한 생활공간 창출
  - 노인 및 장애인, 어린이 등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무장애설계기법(Universal Design)<sup>26)</sup> 적용
  - 스쿨존(School Zone), 실버존(Silver Zone)내 도로 등에 대한 안전시설물 설치를 강화하고, 지구단위계획 등과 연계하여 유흥시설 등 유해환경 관리
- 범죄 발생 가능성이 높은 환경의 정비
  - 범죄 예방 도시설계기준(CPTED)<sup>27)</sup>을 적용한 안심생활공간 조성
  - 건축설계나 도시계획에 대상지역의 방어적 공간특성을 높여 범죄가 발생할 가능성을 줄이고, 범죄가 발생할 수 있는 도로, 공원, 주차장 등의 중점 정비 및 관리

26) 유니버설 디자인(Universal Design)이란 환경으로부터 가능한 모든 장애를 제거하고, 접근하기 편리하고, 다양한 신체 능력의 인구를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 위한 광범위한 노력을 의미하는 개념으로, 기능적 지원성이 높은 디자인(supportive design), 수용가능한 디자인(adaptable design), 접근 가능한 디자인(accessible design), 안전한 디자인(safety-oriented design)의 4가지 디자인 원리가 있음.

27) 범죄 예방 도시설계기준(CPTED: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이란 건축설계, 도시 계획 등의 분야에서 범죄에 대한 방어적인 디자인을 통하여 범죄발생의 기회를 줄이고 안전감을 유지하도록 하는 종합적인 범죄예방 전략을 의미함.

## 제3장 쾌적하고 문화적인 도시·주거환경 조성

### 1. 현황과 문제점

#### □ 도심의 생활 및 생산기능 취약

- 구시가지는 상대적으로 생활편익시설의 부족, 노후주택, 교통혼잡 등 주거생활환경이 열악하여 신·구시가지간 불균형 초래
- 무분별한 도시외곽 개발, 도심기능의 외곽 이전으로 원도심의 기능 쇠퇴 가속화
  - － 대도시의 경우 외곽지역의 신시가지 개발에 따른 인구 유출, 중소도시의 경우 인구 감소에 의한 수요 격감에 따라 대도시 및 중소도시의 원도심 기능이 쇠퇴
- 도시내 전통 제조업의 쇠퇴와 지식기반·첨단산업 등 고부가가치 산업구조로의 전환이 부진하여 도시 성장동력 상실

<표 III-7> 전국 도시 중심시가지 인구 변화 유형

도시유형	구분유형	구 분 기 준	해당도시
도시인구 증가형	절대집중	도심인구증가 / 비도심인구 감소	－
	상대집중	도심인구증가 > 비도심인구증가	안양
	상대분산	도심인구증가 < 비도심인구 증가	수원, 춘천
	절대분산	도심인구감소 / 비도심인구증가	전주, 포항, 천안, 청주
도시인구 감소형	절대분산	도심인구감소 / 비도심인구 증가	진주, 마산
	상대분산	도심인구 감소 > 비도심인구 감소	부산
	상대집중	도심인구 감소 < 비도심인구 감소	－
	절대집중	도심인구 증가 / 비도심인구 감소	여수

#### □ 도시문화 다양성 부족과 고유 이미지 부재

- 여가·문화공간 부족, 문화·관광자원의 관리·개발 미흡으로 지역 고유의 문화 정체성이 상실
  - － 문화시설의 35.7%, 문화예술단체의 42%가 서울 및 경기도 지역에 분포하고 있어 문화 시설의 지역별 편중이 심각
- 성장 위주의 도시개발로 획일적인 도시경관 형성
  - － 도시 이미지를 고려하지 않은 아파트 위주의 획일적인 경관으로 인해 도시환경의 질이 저하되고, 개성있는 도시브랜드 및 도시정체성 부족



## □ 에너지 소비적 도시공간구조

- 에너지 소비적 도시공간구조 지속 및 토지의 집약적 이용을 통한 에너지 효율 제고 미흡
  - 외곽지역의 개발로 인한 교통수요 유발, 원격 통근에 의한 에너지 소비·교통혼잡비용 증가, 외곽의 양호한 녹지 훼손, 기존 도심의 낙후 등 문제 야기
  - 도심 내에서도 주거·상업지역 등의 일률적 구분(Zoning), 승용차 편의적 교통체계 등이 보행·자전거·대중교통의 활성화를 저해
- 신도시가 주로 도심 외곽에 공급됨에 따라 생활근거지와 주거지가 불일치하여 교통 체증이 발생하고 교통비용 증가
  - 지방도시의 경우 공공기관, 상업업무시설 등이 신도시로 이전함에 따라 도심공동화가 초래되어 기존 도심주거지의 주거환경 악화

## □ 가구 변화와 주택공급간 연계 및 저소득층 주거복지 개선 미흡

- 1980년대 후반부터 수도권 5대 신도시를 필두로 한 신도시 중심의 주택공급에 따라 주택의 양적 부족 문제는 크게 완화
  - 1980년대 주택공급은 연평균 30만 호 내외였으나 1990년대 이후에는 연평균 55만 호를 상회하여 전국 주택보급률은 1990년 72.4%에서 2005년 105.9%(2009년 신주택보급률 기준 101.2%)로 증가
- 그러나 주택 공급구조가 인구 및 가구구조의 변화를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여 수요에 부합하는 효율적 주택공급과 국민 주거복지 향상에 미흡
  - 핵가족화 및 저출산 등으로 1인 가구가 크게 증가하고, 고령화로 인해 노인 인구가 증가하고 있으나 이에 대응한 1~2인 가구용 주택, 고령자전용 주택, 실버타운 등의 공급은 미약

<표 Ⅲ-8> 노인부부 가구 및 1인 가구 변화 추이

구 분	1995년	2000년	2005년	증가율(1995~2005년)
노인부부 가구	380,742	573,597	827,722	117.4%
노인 1인 가구	349,020	542,690	782,708	124.3%

자료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 저소득층의 열악한 주거환경과 과중한 주거비 부담
  -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는 2000년 334만 가구에서 2005년 206만 2천 가구로 크게 감소하였으나, 아직도 전체 일반가구의 13% 수준<sup>28)</sup>
- 호황에 따른 주택가격 급등과 침체에 따른 거래 위축 등이 주기적으로 발생하나, 주택시장의 변동을 최소화하는데 한계
  - 주택시장 조기경보시스템(EWS) 등을 운영하고 있으나, 사전적 시장 관리기능이 미흡

## □ 통합적 토지이용·관리를 위한 제도적 장치 미흡

- 유사한 목적의 용도지역·지구가 중복 지정되어 있어 토지이용규제의 내용을 파악하기 어렵고 행정절차가 복잡
  - 총 11개 부처 119개 법령에서 326개 지역·지구를 지정하여 운용(2010년 6월 기준)
- 1960년대 이후 산업화 및 도시화 과정에서 토지정책의 주대상이 도시용지로 국한되어 국토관리 정책의 단절성 초래
  - 도시용지로 이용되는 면적은 7% 미만이고, 나머지는 모두 농지, 산지 등으로 구성되나 토지정책의 핵심은 도시용지 관리에 치중
- 종합적인 개발이익 환수제도가 미흡하여 투기적 수요에 의한 지가 상승 및 토지비용 증대 등의 사회적 손실 초래
  - 개발이익 환수 규모는 1980년 0.6조 원에서 2005년 18조 원으로 31배 증가하였으나, 이는 전체 개발이익의 1/6 수준(2005년)에 불과

28) 통계청.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

## 2. 여건변화 전망

### □ 인구 감소에 대비한 도시공간 재편 요구 증대

- 인구 감소 등으로 인하여 신시가지 개발에 의한 도시 확산이 한계에 도달하고, 기존 도심의 기능이 지속적으로 쇠퇴하면서 도시경쟁력은 약화 전망
- 인구 감소 및 노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도시내 공공서비스 수요가 점차 다양화되고, 새로운 공공편익시설 정비 필요성 증가

<표 Ⅲ-9> 우리나라 도시규모별 인구 감소 현황(2001 ~ 2005년)

규모 구분	개소수	인구감소 시·군	비율
소규모(10만 미만)	90	85	94.4%
중규모(10만 이상~50만 미만)	58	26	44.8%
대규모(50만 이상)	19	5	26.3%
총 계	167	116	68.2%

자료 : 통계청, 주민등록인구자료.

### □ 기후변화에 대비한 저탄소 녹색도시 형성 요구 증가

- 기후변화·에너지 위기 시대 도래에 대응하고 도시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기존 도시공간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증대할 전망
  - 도시계획 차원에서 에너지 절감 유도, 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CO<sub>2</sub> 저감 필요성 증대
  - 녹지면적 증대, 기존 도시 주변의 녹지지역 보존 및 복원에 대한 필요성 증대
- 기후변화·에너지 위기 시대 도래에 대응하여 도시공간구조와 토지이용에서 에너지 절감을 유도하고, 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CO<sub>2</sub> 저감 필요성 증대
- 도시내 자연순환체계 확보, 도시내 녹지면적 증대 및 복원에 대한 필요성이 증대

### □ 개방과 소득수준 향상에 따른 도시문화의 다양화

- 도시간 경쟁이 강화됨에 따라 도시별로 도시민의 자긍심을 살릴 수 있는 전통 및 문화 등 다양한 도시정체성 발굴 노력 증가 예상

- 세계화의 진전에 따라 외국인 체류자의 수가 급증하여 다문화시대가 도래할 전망
  - 국내 거주 외국인 체류자는 100만 명(2007년)을 넘어섰으며, 2020년 254만 명(총인구 5%) 예상

## □ 주택수요 증가 추세에 둔화 및 주택수요의 다양화

- 향후 가구증가율은 2010년 1.3%, 2020년 0.7%로 급격히 감소할 전망<sup>29)</sup>
  - 향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선진국과 같이 점차 둔화되고, 주택보급률 증가, 주택시장 투명화로 주택시장 불안요인이 점진적으로 감소할 전망
- 경제적 여유와 여가활동이 증가하면서 주택수요의 유형이 다양화될 것으로 예상
  - 전원주택, 별장주택(second house), 단지형 단독주택, 타운하우스, 장애인 편의주택 등 여러 형태의 주택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전망
  - 1~2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도시형 생활주택, 준주택 등 도심내 소형주택 등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
  - 노인가구가 증가하면 고령자임대주택, 실버타운, 노인복지주택 등 노인전용주택 수요가 증가하고, 전원지역 거주 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
- 환경기준의 강화에 따라 녹색주택 공급 필요성이 커지고, 주택 및 주거문화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전망
  - 태양열·태양광 주택 등 환경 친화적 녹색주택을 공급할 필요성이 증대
  - 한옥 등 전통적인 주택 및 주거문화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면서 이에 대한 창조적 계승과 보급의 필요성이 높아질 전망
- 기존 주택의 재고 관리, 무주택 서민과 빈곤층의 주거문제가 더욱 부각될 전망
  - 생활편의 증진, 교통비 절감, 도심공동화 방지 등을 위해 직주근접성 제고를 위한 도심 및 도심 주변지역 주택개발방식에 대한 선호도가 증대될 것으로 전망
  -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 지원 및 주택 공급 프로그램 확대·개편 요구가 증가할 전망

## □ 세계화에 대비한 토지관리제도 선진화 요구 증대

- 지방화시대의 진전에 따라 토지에 대한 수요 조정, 도시용지 공급, 토지이용규제 완화 등도 지역특성에 따라 차등화 할 필요성이 커질 전망

29) 통계청. 2005~2030 장래가구추계 결과.

- 기후변화, 탄소배출권거래제도, 식량무기화 등으로 농지와 산지에 대한 보전 필요성이 부각되고 녹지의 기능이 다양화될 전망
- 인구·산업구조, 도시관리 방식 등의 변화에 따른 토지수요 구조 변화
  - － 인구성장률 둔화 및 도시화의 안정화 추세로 도시용지의 공급 확대에 중점을 둔 도시개발 정책의 재검토 및 지역 차별적 도시용지 공급정책 필요성 증대
  - － 제조업 중심에서 고부가가치 지식산업사회로 급속히 전환됨에 따라 국토이용 패턴과 토지 수요 구조의 변화가 예상

### 3. 추진과제

#### (1) 인구 감소에 대비한 도시경쟁력 제고

##### □ 기존 도심 활력 증진을 위한 재생사업 활성화

- 상대적으로 낙후된 도심지역의 정주여건 및 생산기반을 개선하여 중심성을 유지
  - 도시철도, 버스 등 대중교통수단에 대한 접근성 제고, 도심 진입부에 거점형 공공주차장 설치, 보행환경 개선 등을 통해 도심이용객의 편리성 제고
  - 개발수요가 있는 도심지역에 상주인구와 산업유치를 위한 용적률 인센티브 제공, 복합용도 개발허용 등의 규제 완화를 통해 민간부문의 투자를 유도
  - 도심주거를 선호하는 독신계층과 고령자 증가에 대비하여 역세권을 중심으로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 기존의 사회·경제·문화적 유무형 자산을 최대한 활용한 주거지 재생 추진
  - 기존의 유무형 자산 활용을 극대화할 수 있는 주거지 정비
  - 쇠퇴지역에서 주민자체적 생활역량 강화를 위해 사회적기업 설치 등에 의한 공동체 활력 증대 유도
- 도시내 노후 산업단지를 복합용도의 첨단산업단지로 재생
  - 기존 제조업 중심의 산업단지를 연구개발·기술지원 기능, 기업 업무활동 기능, 주거기능 등이 복합된 도시형 첨단산업단지로 육성
- 중복적인 도시재생 관련 법률을 정비하여 도시재생 관련 자원과 조직의 효율적 통합 운영 관리
  - 개별 부처 및 부서에서 추진 중인 각종 도시재생 관련 기초생활권 발전계획사업, 녹색 커뮤니티 조성관련 사업 등 각종 사업재원을 통합 운영
  - 도심, 노후 산업단지, 주거지 재생 등을 역세권 개발사업과 연계하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 종합적 도시재생 발전모델을 제시
  - 사업성이 낮은 지방 중소도시의 사업 추진을 위해 중앙정부의 자원 마련 근거 및 구체적인 사업 지원방안 마련

## □ 광역화·다양화되는 도시에 대한 연계성 강화

- 도시간 연계·협력을 통한 도시권 발전계획 수립 추진
  - － 도시권의 경쟁력 제고와 광역적 문제 해결 등을 위해 3개 이상 광역시·시·군이 광역 도시권 발전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정책 가이드라인을 마련
- 광역도시권내 역할 정립을 통한 인구와 기능 배분 및 특성화, 역할 다양화 유도
  - － 광역도시권 발전계획을 통하여 인구 및 공공·산업기능 배분뿐만 아니라 기능간 수평·수직적 연결을 통한 상호보완적 역할 부여
- 인구 감소에 따라 효율적인 공공편의시설 운영을 위한 재편성
  - － 생활권별로 몇 개의 다른 소규모 기능을 한 곳으로 복합화하거나 생활권간 기능 통합에 의한 재집중을 유도
- 광역도시권 내의 교통연계 강화를 위한 버스, 도시철도 등 대중교통망을 정비
  - － 대중교통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광역철도망을 중심으로 도시철도, 버스를 연계하는 환승 체계를 구축하고 환승요금체계를 실시

## □ 정보화시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U-city 건설

- 도시관리 효율화, 통합화를 위한 정보화 추진
  - － 교통·기반시설 관리, 토지·건축물 관리를 위해 시설상태를 지능화시켜 도시 관리를 효율화
- 시민 편리를 위한 이용자 중심의 U-city 건설
  - －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각종 도시시설 이용정보 제공

## □ 인구 저성장 시대를 대비한 도시내 생활지원시설 확충

- 여성 사회참여 증대에 따라 보육에 대한 공공책임 강화
  - － 유아(3~5세) 보육을 위한 교육시설을 확대 공급하고, 영아(1~3세)의 보육을 위하여 아파트단지나 다세대주택 등에 공공보육시설을 정비·확충할 수 있도록 지원
- 생활권별 노인복지시설 확충
  - － 노인인구의 증가에 따라, 노인 이용시설과 수용시설을 근린-지역-도시 단위 생활권별로 수요에 맞추어 체계적으로 확충

## (2) 한국형 녹색 문화도시 창조

### □ 녹색도시 정비 활성화 및 한국형 압축도시(Compact City) 조성

- 도시유형별로 저탄소 녹색도시조성계획 수립 유도
  - 도시유형별 건축물, 산업 등에서의 온실가스배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목표 달성을 실현하기 위한 계획 수립 유도
  - 녹색도시계획 표준모델을 적용하여 기존 도시계획을 녹색도시계획으로 전환하도록 추진하고 녹색시범도시 대상을 확대
- 녹색도시 조성을 유도하기 위한 정비 방향 확립
  - 국가 차원의 녹색성장 관련 사업과 지역단위의 도시재생사업, 정주환경 개선사업 등을 연계하여 추진
  - 온실가스 절감을 위하여 건물, 산업, 교통부문에서의 온실가스 저감 대책을 수립하고 절감 효과가 큰 항목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사업 추진
  - 생물순환체계 구축을 위하여 도시내 산림순환체계, 물순환체계를 유지하는 산림 및 수자원 네트워크를 조성
  - ‘친환경녹색단지 인증제’ 도입 및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민간부문 녹색주거단지 조성을 유도하고, Smart Grid<sup>30)</sup> 구축 확대를 통해 에너지 효율을 최적화
- 녹색국토 정착을 위한 국토관리 가이드라인 마련 및 각급 공간계획 적용
  - 광역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수립시 고려해야 할 도시계획적 요소를 제시한 「저탄소 녹색도시 조성을 위한 도시계획수립 지침」과 도시계획관련 지침의 통합 정비
  - 녹색국토 정착에 부응하고 일관된 녹색성장 실천을 위한 부처간 협력체계를 마련하여 녹색도시 활성화를 유도
  - 도시, 마을, 시설 등의 세분화된 공간 단위에 녹색성장 적용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각급 공간계획의 제도 개선 유도
- 한국형 압축도시 조성을 위한 통합적 도시모델 구축
  - 성장도시에서는 도시 전체가 과밀로 인한 비효율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에서 선별하여 위치에 따라 고밀개발을 유도하되, 기존 도시내 미이용·저이용 나대지를 우선적으로 개발
  - 인구가 정제하거나 쇠퇴하는 도심부의 저이용 대중교통결절점(철도역세권 등)을 중심으로 토지이용을 복합화하거나 교외로 분산될 다중공공시설을 도심으로 재집중 유도

30) 전력망에 IT기술을 접목하여 에너지 효율을 최적화하는 차세대 전력망.



- 광역도시권에서는 중심도시-주변도시 간에 직주근접이 달성될 수 있는 수준에서 인구와 산업을 '분산적이면서 집중적으로 개발'하도록 함
- 친환경적인 녹색건축물 조성에 대한 지속적 지원
  - '친환경건축물 인증제' 등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을 확대하고 점진적으로 의무화를 추진하되, 건축물에 신재생에너지시설 설치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
- 전국 농·산촌 폐가옥 등 방치시설을 친환경 공간으로 복원
  - 폐가, 폐교, 폐공장, 폐창고, 폐선, 폐도 등을 지역의 특성과 입지를 고려하여 생태공간, 생태·환경교육장 등으로 활용하는 방안 마련
- 인구 감소 도시권에서 중심도시로 인구 및 기능을 재집중화 유도
  - 기존의 도시기반시설 효율적 이용과 관리가 가능하도록 기반시설의 잉여 부분을 검토하여 중심도시와 주변도시간 효율적 재분배

## □ 삶의 질을 향유할 수 있는 매력적인 도시 조성

- 자연수변을 최대한 감상하고 매력을 느낄 수 있도록 하천자연 생태를 복원하고, 친수공간 등을 조성
  - 도시내 하천과 실개천의 물길을 복원하고, 수변공간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시가지에서 수변으로 원활한 접근통로를 확보
  - 도시 속 다기능 생태공간을 조성하고, 수변공간을 중심으로 수변활동을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공공공간이나 신설 다중시설의 효율적 배치를 유도
- 지역 실정에 맞는 다양한 형태의 공원 조성 및 기존 공원 리모델링 추진
  - 획일화된 도심공원 조성방식에서 탈피하여 지형, 지역 이미지, 역사성 등을 고려한 공원 조성 방안 마련과 개발제한구역내 매수토지를 활용한 여가녹지 및 환경 산책탐방로 조성
- 산지, 구릉지, 하천 등 양호한 자연경관을 보전하는 지형 순응형 토지이용계획을 유도하기 위해 개발행위 허가기준 등을 통합·정비
- 도시 특성에 맞는 문화콘텐츠를 발굴하고 도시문화산업에 대한 지원 강화
  - 도시의 근현대 유희공간을 문화활동 공간으로 활용하여 도시재생 및 체험·학습형 관광 등 창조산업 육성을 지원하고 지역공동체 고유의 역사문화 경관 보전 및 조성 방안 마련

- 인구 규모에 따른 생활권별 필요문화시설 기준을 설정하고 시설을 확충

<표 III-10> 생활권 범위별 문화시설 설치 기준(예시)

생활권범위	시 설	도시 내 기능
소생활권 (인구 2~3만 명)	▶ 주민복합문화시설 ▶ 주민생활체육시설	▶ 일상생활중심 문화활동 기능 지원
중생활권 (인구 10~12만 명)	▶ 미술관/박물관 ▶ 문예회관	▶ 기초생활권 시설 지원
대생활권 (인구 30~50만 명)	▶ 중앙도서관(미디어테크) ▶ 전문공연시설, 종합체육시설 ▶ 문화의 거리	▶ 도시 이미지 제고 및 자족성 확보 ▶ 도시내 문화활동 및 정보 네트 워크의 중심핵 기능 담당

## □ 한국적 문화이미지를 표현하는 도시경관 형성

- 도시의 주요 조망대상의 스카이라인, 조망축, 천공차폐율 등을 계획할 수 있도록 경관계획제도 등을 정비
  - 대규모 개발사업 추진시 경관계획 심의 강화, 지자체 조례에 의한 개별 건축물의 경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유도
  - 거리 조망 확보를 위한 각종 교통안내·안전시설물, 대형광고판 등 각종 교통시설물과 가로시설물의 통합정비
- 도시 전체에 대한 도시경관계획을 작성하고 중심거점이나 거리를 정비
  - 도시의 독특한 정체성을 체험하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상징중심거리, 도시뒷골목 생활거리, 광장, 주요유적지 주변 등을 정비
- 전통건축·도시의 공간특성과 이미지를 현대화하여 계승한 건축물, 주택 보급 확대
  - 한국적 이미지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한국적 형태, 재료, 색채 등을 도출하고 이를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

## □ 다문화사회에 대응하는 문화 포용정책 수립 및 추진

- 문화적·인종적 소수를 보호하고 공존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다문화 지원체계 구축
  - 외국인 주민들이 초기 한국 정착에 필요한 지원 서비스 제공 시스템을 구축
  - 사회복지관, 글로벌센터 등을 통해 한국문화 적응 및 체험 프로그램을 마련

- 외국인 주민 커뮤니티를 보호하고 다문화 체험거리를 지정·육성
  - 외국인 밀집 거주지역 및 활동지역을 중심으로 다문화 특별지구 및 다문화 체험거리를 지정하여 생활환경을 정비하고 지역 문화자산으로 활용

### (3) 수요맞춤형 주택 공급 및 주거 수준의 선진화

#### □ 사회적 약자를 위한 주거안전망 확충

- 신규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하여 주택의 양적 수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제고하고, 무주택 서민을 위해 도심 및 주변지역에 지자체 중심으로 다양한 유형의 보금자리주택을 공급
  - 무주택 서민을 위해 2009~2018년간 공공부문에서 보금자리주택 150만 호(분양주택 70만 호, 임대주택 80만 호)를 선계획-후개발 방식에 따라 공급
  - 주택 유형별로는 국민임대주택 40만 호, 영구임대주택 10만 호, 장기전세주택 10만 호, 10년임대주택 등 20만 호를 공급
- 무주택 서민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기 위하여 국민임대주택을 비롯한 장기공공임대주택 제고를 2020년까지 12%(2009년 기준 4.8%) 수준으로 확대
  - 저소득 임차가구의 주거비 절감 및 주거 수준 향상을 위해 주택바우처 제도 등 다양한 주거복지 프로그램 도입 추진
- 노령자, 장애인, 외국인 노동자 등 특수계층의 주거환경을 제고
  - 고령자 전용주택의 공급 확대, 생활·의료·휴양기능이 어우러진 건강문화클러스터 조성, 고령자가 대부분인 농촌의 주택 개보수 지원 등을 추진
  - 유니버설 디자인 개념을 적용한 주택을 공급하여 노인, 장애인, 외국인 등 다양한 사회구성원의 주거 질 향상을 도모
- 최저주거기준을 현실의 주거 수준에 맞추어 상향 조정하고,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의 상향 이동 및 지원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시행
  - 최저주거기준의 구조·성능·환경 지표를 구체화하여 주거복지 프로그램과 연계

## □ 수요 맞춤형 주택 공급 확대 및 커뮤니티 활성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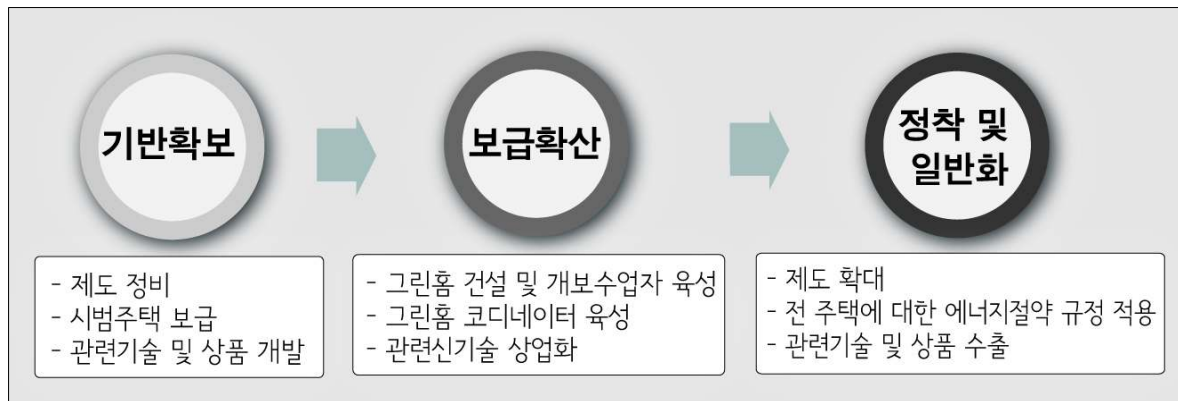
- 직주근접성을 제고하고 도심 공동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도심 및 도심 주변지역 주택 공급을 확대
  - － 재건축, 재개발 등 정비사업과 체계적 구도심 개발을 위한 광역재정비사업을 활성화하고, 보금자리주택을 차질없이 공급
- 도시내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광역재정비사업을 활성화하고, 고밀복합개발 등을 통해 역세권 개발 촉진
- 1~2인 가구 증가에 대응하고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소형주택 공급 활성화를 추진
  - － 소형주택을 일정비율 이상 공급할 경우 조세지원, 용적률 인센티브 등 지원과 도시형 생활주택, 준주택 등의 공급을 확대하고 대학교 기숙사 건립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
- 다양한 주택수요에 부응하여 전원주택, 단지형 단독주택, 타운 하우스, 장애인 편의 주택 등 다양한 유형의 소규모 주택단지 공급
- 세컨드 하우스(Second House), 오피스 기능을 겸비한 재택근무형 주택 등 여가와 업무환경 변화에 대응한 미래형 주택을 공급
- 커뮤니티를 고려한 주거공간 설계를 활성화하여 계층별·연령별로 다양한 구성원이 공동체를 이룰 수 있도록 유도
  - － 근린공공편의시설, 문화복지시설 등을 커뮤니티 회랑을 중심으로 배치하여 주민 만남을 활성화하고 주거공동체 복원을 유도

## □ 환경친화적 주택 보급 확대와 주거환경의 품격 향상

- 환경에 대한 국제기준 강화에 대비하고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 절약을 위해 기반 확보, 보급 확산, 정착 및 일반화의 3단계로 에너지 절감형 녹색주택 보급을 확대
  - － 태양열·태양광 주택, 전원주택 등 환경 친화적 녹색주택 공급 확대와 친환경주택(그린홈)의 최소 에너지 성능기준 강화, 녹색건축물 인증제 확대 적용
- 기존 주택 개보수를 통해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하도록 하여 기존 주택을 환경친화적으로 개조

- 그린홈, 생태주택 등을 중심으로 하는 주거단지 조성을 위해 ‘환경친화적 숲속주거 단지 조성 지침(가칭)’ 마련
  - 교통시설 등을 최적화하여 직주근접을 실현하고, 교육·문화·업무기능이 충족된 친환경 복합주거단지로 개발
- 주거단지 및 주택 디자인을 통한 주거환경의 질적 향상 도모
  - 도시경관에 대한 개성 부여, 농어촌 경관자원 보존, 자연과 조화 등 주거단지 디자인 개발에 대한 지원 확대와 통합 디자인 관리체계 구축으로 정체성 확보

<그림 III-13> 단계별 그린홈 보급계획



## □ 재고주택의 관리 강화

- 주택의 성능·노후도·불량도에 따른 주택 정비 및 개보수 프로그램 수립
  - 노후화가 심한 단독·다가구·다세대주택의 관리 강화와 밀집지역에 대한 재고주택 관리 시범사업 시행
  - 아파트의 노후화에 대비하여 의무관리 대상단지 및 장기수선계획 수립 대상항목을 확대
- 재고주택 관리에 대한 정부지원 강화
  - 도심의 노후도가 심한 지역은 재개발 또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고 노후화 정도에 따라 아파트 리모델링 및 재건축 시행
- 농어촌 인구 감소에 따라 발생하는 농어촌 공가에 대한 활용방안 강구
  - 향후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세컨드 하우스, 레저용 주택으로 농어촌 공가를 리모델링하는 방안 등을 검토

- 농어촌주거환경개선자금, 농촌주택정비자금을 확대 지원
  - 농어촌 뉴타운 조성사업, 농·산·어촌마을 종합개발, 녹색농촌 체험마을 등 농어촌 지역 개발사업과 연계 추진하여 농어촌 주거환경을 개선

## □ 주택정책 추진체계 합리화

- 지방화 시대에 대응하여 주택정책 추진에 있어 지방정부의 역할을 강화
  - 중앙정부는 지역 의견을 수렴하여 큰 틀에서 정책 방향 설정, 주택 건설·공급 기준 및 자금조달 방안 수립 등을 담당
  - 지방정부는 중앙정부가 제시한 기본 틀 내에서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지역맞춤형으로 주택 공급계획을 수립하고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세부 시책을 집행
- 다수의 기관에 분산 관리 중인 주택 공급 관련 통계의 생산·관리를 체계화하여 정책의 대응성을 강화
  - 주택 공급단계별(인허가~준공) 통계뿐만 아니라 파생영역(미분양·도시정비 등) 통계의 생산·관리 추진
-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인터넷을 통해 시·군·구에 부동산 거래신고를 할 수 있도록 시스템 운영
  - 실거래 가격 등 신뢰성 있는 주택거래 정보를 축적·공유하여 주택정책 수립의 시의성과 효율성을 증진

## (4) 국토가치 제고를 위한 토지이용 합리화 및 선진화

### □ 도시경쟁력 제고를 위한 용도지역제 개편

- 국토의 개발과 보전가치 제고를 위한 용도지역체계의 효율적 운영
  -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호지역 등 용도지역제의 기본 틀을 유지하면서도 당해 토지의 개발 또는 보전가치에 따라 합리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운영
- 용도지역·지구는 ‘국토계획법’에서 일괄적으로 규정하고, 개별부처에서는 규정된 용도지역·지구를 선택하여 지정·관리
  - 범부처 추진단을 구성하여 개별법으로 규정한 각종 용도지역·지구의 행위제한 내용을 표준화하여 국민에게 전산정보로 제공하고 유사한 개별법 상의 용도지역·지구 통폐합

- 계획적 국토관리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용도지역지구제와 계획허가제의 장점을 절충하여 계획허가제적 요소를 가미한 개발행위허가제도 운용
  - 기본적인 허용 용도와 용적률은 일상생활이 자유로운 수준으로 허용하고, 그 이상 개발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을 지정하여 규제를 완화하되, 이에 따른 개발이익 환수 후 개발 허가
- 용도지역제의 경직성을 해소할 수 있도록 유연지역제를 활용하여 시급한 토지수요 발생에 유연하게 대처
  - 도시용지 공급이 필요할 경우 구체적인 지역을 대상으로 준산업지구, 개발진흥지구, 특별 건축구역 등을 지정하여 규제 완화 및 개발절차 단순화 추진
- 토지정책의 지방화를 추진하여 토지이용 관리의 지역적합성 제고
  - 용도지역·지구제의 행위제한 내용을 지역특성에 맞게 운용할 수 있도록 강화 또는 조정할 수 있는 융통성 제고
- 난개발로 훼손된 국토를 회복시키고, 비도시지역의 난개발을 방지할 수 있도록 단계별로 규제를 강화하거나, 개발을 허용하는 시간적지역제(Time-Zoning) 적용
  - 개발압력이 높은 시·군을 대상으로 당해 도시의 인구성장 규모 및 경제, 기반시설의 설치 용이성 등을 고려한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단계적 개발 허용
  - 중요 생태 녹지축, 역사문화축에 해당되는 지역 중 난개발로 훼손된 지역은 목표 연도의 관리목표를 제시하고 점진적으로 규제를 강화하여 점진적 국토 회복 추진

## □ 통합적 토지관리체계 구축으로 녹색성장 지원

- 도시용지, 농지, 산지를 계획적으로 포괄하는 통합적 토지관리체계를 구축하여 토지 이용과 보존의 효율성 제고
- 녹지지역과 비도시지역(관리·농림지역)에 대한 토지적성평가를 실시하여 주변지역의 개발상황과 보전 필요성을 기초로 개발지역과 보전지역의 경계 조정
  - 농업진흥지역, 산지의 경우에도 주변지역 토지이용, 녹지축 등을 감안하여 경계 조정
- 산업단지, 택지, 관광단지, 특수목적의 신도시 등 대규모 개발이 기존 도시환경을 저해하지 않고 종합적·체계적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 개선
  - 일정 규모 이상의 개발행위는 건축물의 배치·높이·기반시설·교통처리 등을 포함하는 지구단위계획 수립 후 시행하도록 유도

- 농업진흥지역 및 보전산지 등 국토계획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용도지역의 지정해제 절차를 도시관리계획 결정절차로 통합·일원화
- － 경작목적외 제외 산지에서의 토지 형질변경은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허가를 받도록 일원화

## □ 토지시장 기능의 정상화와 관리의 선진화

- 중복 시행되고 있는 기존의 개발이익 환수제도를 통폐합
  - － 개발부담금, 각종 시설부담금, 기부채납 등 중복 시행되고 있는 개발이익 환수제도 통폐합
- 선진적 토지 관리를 위한 시장정보의 제도적 활용체계 구축
  - － 실거래가격 신고자료를 기초로 공시지가 및 공시주택가격을 조사함으로써 공시지가의 시가근접도 향상
  - － 실거래가격 신고전산망을 등기 및 지적업무 전산망에 연계하고, 실거래가격 신고자료를 기초로 공시지가 및 공시주택가격을 조사
  - － 토지 관련 정보의 실시간 분석을 통해 시장에서 합리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조세제도, 금융담보제도, 공공수용보상제도 운용체계 구축



## 제4장 녹색교통 · 국토정보 통합네트워크 구축

### 1. 현황과 문제점

#### □ 교통시설 및 시설 투자의 효율성 저조

- 교통부문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로 국가기간교통체계의 골격이 형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교통부문의 국가경쟁력은 58개국 중 19위로 중위권 수준
- － 스위스 IMD<sup>31)</sup>의 평가 결과, 도로·철도 등 교통인프라의 확충이 필요하며, 해운·항공·물류 등 유통인프라는 물류비 절감 및 운영체계의 효율화 필요

<표 III-11> 교통부문 우리나라 국가경쟁력 순위

교통인프라 평가항목	순 위					전년 대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도 로	25	24	23	25	24	↑1
철 도	27	23	24	24	25	↓1
항공수송	13	14	14	15	4	↑11
항공이용 만족도	35	13	22	15	25	↓10
유통인프라 효율성	35	18	35	27	27	－
인프라 유지와 개발 적절성	28	19	20	17	18	↓1
해운인프라 기업요구만족도	33	11	35	28	28	－
교통국가평균경쟁력지수	28	17	25	22	19	↑3

자료 : IMD. 2010. 「World Competitiveness Yearbook」.

- 지속적인 투자에도 불구하고 물류비와 교통혼잡비용은 상대적으로 높은 실정
  - － 물류비는 국내 총생산 대비 12.0%(2007년 117조 원)로 미국 9.5%(2001년), 일본 5.0%(1997년)에 비해 높은 수준
  - － 교통혼잡비용은 1997년 국내총생산 대비 3.8%에서 2007년 2.6%까지 감소하였으나 2008년 기준 2.9%수준으로 증가
- 도로·자동차 중심의 교통체계로 기후변화 및 에너지 문제 대응에 취약
  - － 국가 전체 석유소비량 중 교통부문의 비중은 34%, 이 중 도로부문이 81% 차지

31) IMD : International Institute for Management Development, 국제경영개발원(스위스).

- 고속도로 등 간선도로망 위주의 시설 확충으로 인해 도시부 혼잡 대처 미흡
  - 도시부 혼잡 비용은 2008년 기준 17조 원 수준으로, 2004년 이후 지속적인 증가 추세
    - ※ 2004년 13.9조 원, 2005년 14.6조 원, 2006년 15.4조 원, 2008년 17.0조 원
- 교통투자의 부문간·부문내 효율적 배분체계 미흡으로 투자효과 저조
  - 최근 5년간 교통시설 투자 중 도로부문은 50%이나 철도부문은 23% 수준이며, 부분적 시설개량 위주의 철도 투자로 운영 효율성 저하

## □ 교통수단간 유기적 연계성 확보 및 통합교통서비스 제공 미흡

- 교통시설 투자가 개별시설 위주로 진행되어 네트워크 시너지효과 발휘에 한계
  - 교통시설간 연계 및 협의체계 미비로 사업시기의 불일치, 간선망의 연속성과 체계성 결여로 이용자 중심의 통합 교통서비스 제공 부족
- 간선 교통결절점으로서의 실질적인 접근성 개선 부족으로 ‘Hub & Spoke’ 교통시스템 구축 미흡
  - 공항 및 고속철도역 진입도로 개설 등의 소극적 개선 및 확충에만 초점을 두어 실질적인 접근성 개선 미흡
- 교통수단간 연계 강화를 위한 통합 교통관리체계 구축 미흡
  - 도로, 철도, 공항, 항만 간을 종합적으로 통합관리 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정착 미흡
  - 개별시설 기본계획 간의 위계 및 연계가 명확하지 않아 사업의 실효성이 저하

## □ 저탄소 녹색성장형 교통체계 구축 미흡

- 대중교통, 자전거와 같은 친환경 수단에 대한 체계적인 계획 및 시설 투자 미비로 국가 온실가스 감축에 제약요인으로 작용
  - 국가목표인 2020년 BAU 대비 30% 감축을 위해 교통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이 시급
- 저탄소 녹색수단인 철도는 도로에 비해 속도경쟁력 및 접근성, 이용 편의성 등이 떨어져 이용 기피 초래
  - 소요시간(도로/철도) : 서울-여수(4:30 / 5:15), 서울-마산(3:40 / 4:48)

- 교통 수요관리 등 저탄소 녹색성장형 도로체계 구축 미흡
  - 개인 승용차 수요 관리를 위한 녹색요금체계 및 차등요금제 도입, 고속도로 진입 교통량 조절, ITS 구축 확대 등에 대한 노력 미흡
  - 환경 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도로 혼잡구간에 대한 집중 투자 부족

## □ 국토정보인프라 및 시스템의 연계·통합 미흡

- 1990년대 중반부터 각종 정보화사업을 통하여 전반적인 정보화 수준이 크게 향상
  - 1995년부터 국가 GIS<sup>32)</sup>사업을 통해 국토정보인프라와 국토정보체계를 구축하고 국토정보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
- 국토정보의 전산화 추진 및 효율적 유지·관리 체계 부재
  - 정보의 전산화·갱신·연계·통합이 미흡하여 정보신뢰성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나 기술적·제도적 장치가 미비
- 국토정보시스템이 개별적으로 구축되어 정보간 연계·통합이 제대로 되지 않아 단편적인 현황정보 제공과 업무 지원의 수준에 머물고 있음
  - 국토계획, 지역계획, 도시계획 등 공간계획 및 정책 수립시 다양한 정보의 통합적 활용이 요구되나 유관 시스템간 연계체계가 미흡

32) GIS :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지리정보체계.

## 2. 여건변화 전망

### □ 사회적 변화에 따른 다양한 교통서비스 요구 증대

- 교통혼잡 개선, 에너지 소비 및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해 저탄소 녹색성장형 교통시설의 확충 및 운영 합리화 등에 관한 요구가 증대될 것으로 예상
  - 버스, 전철, 철도, LRT<sup>33)</sup>, 자전거 등 녹색교통시설 확대 및 노선 구축, 환승체계 구축 등을 통해 교통시스템 및 시설 운영의 일대 전환이 예상
  -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소하기 위해 하이브리드카, 수소연료전지차, 전기자동차, 모노레일, 노면전차 등 친환경자동차의 개발·활용이 더욱 확대될 전망
- 인간·환경·효율성 중심의 교통정책 추진을 위해 육·해·공 통합 교통네트워크 구축의 필요성이 증대될 전망
  - 육·해·공에서 개별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정보화사업의 연계추진 전망
  - 교통수단간 상호 경쟁체제에서 상호보완을 위한 연계환승 정보시스템 구축
- 소득 상승, 생활수준 향상으로 여가통행이 급증하고, 고급·고속 교통서비스에 대한 선호가 증가함에 따라 여가공간 및 시설에 수요도 증대될 전망
  - 철도서비스 고급화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기존철도 고속화 및 고속철도망 확충 필요
  - 항공자유화 확대, 저가항공사 출현 등으로 장기적으로 고급교통 수단인 항공수요 변화에 따른 공항시설 확충 필요성 증대
- 대도시권의 다핵연계형 변화에 따른 통근통행의 광역화가 심화될 전망
  - 대도시의 높은 지가 및 주택가격, 대규모 택지개발사업 추진 등은 인구 확산 요인으로 작용하며, 통근·통학 등 통행의 광역화로 교통문제가 심화될 것으로 예상
- 노후화 된 기반시설로 인한 사고 발생 가능성 및 사회적 비용 증가에 대응하여 지속적인 시설의 유지·보수 및 재생·관리, 투자 효율화가 중시될 전망
- 기존 시설 정비 및 신규 시설 공급시 고령자·교통약자를 위한 교통시설 및 교통서비스 공급 요구가 증대될 전망

33) LRT : Light Rail Transit, 경전철.

## □ 물류시설의 선진화 및 저탄소 녹색물류체계 구축의 필요성 증대 전망

- 저탄소 녹색물류체계 구축의 중요성 대두
  - 도로에 집중된 화물운송체계를 화물특성에 따라 철도 및 연안 해운 등으로 전환유도 필요
  - 저탄소·고효율 항만물류체계 구축 및 환경친화적 항만공간 활용이 중시되고, 막힘없는(Seamless) 항만연계수송망(도로, 철도, 해상운송 등) 확충 및 재편 필요
- 글로벌 생산체계의 확산과 운송수단의 대형화로 인한 공·항만의 허브화 경쟁 심화 예상
  - 공·항만 배후단지 물류센터를 통한 화물의 환적·조립·가공 등 부가가치물류(Value Added Logistics)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될 전망
- 하드웨어 물류인프라와 소프트웨어 물류시스템의 융·복합화로 항만 및 임항권역에 대한 다양한 수요가 증가될 전망
  - 물류체계 효율화를 위해 물류거점시설 통합개발 및 기능을 재정비하고, 산업 및 물류거점 간 연계기능 강화로 물류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전망
  - 배후도시와 연계된 레저, 관광, 상업, 주거 등 복합공간으로 활용하는 선진국형 임항권역 활용 수요 증가
- 국내 항만에 대한 민간 투자유치 및 해외 항만 개발의 국내기업 진출 등에 대한 정부의 지원 강화에 대한 필요성이 증대될 것으로 전망
- 기후변화 논의에 대응하여 조선·해운분야에서 2013년 온실가스 규제가 본격 발효 전망
  - 국제규제에 따른 감축목표 설정, 시장 기반 조치 등 이행수단의 채택 등 국제협약 이행을 위한 국내 대응전략 마련 필요
  - 해운선사에서는 선대 재편, 항행 최적화 등 선박 구성과 운영 측면에서 온실가스 감축 방안을 강구해 나갈 전망

## □ 국토정보화의 급속한 진행과 수요의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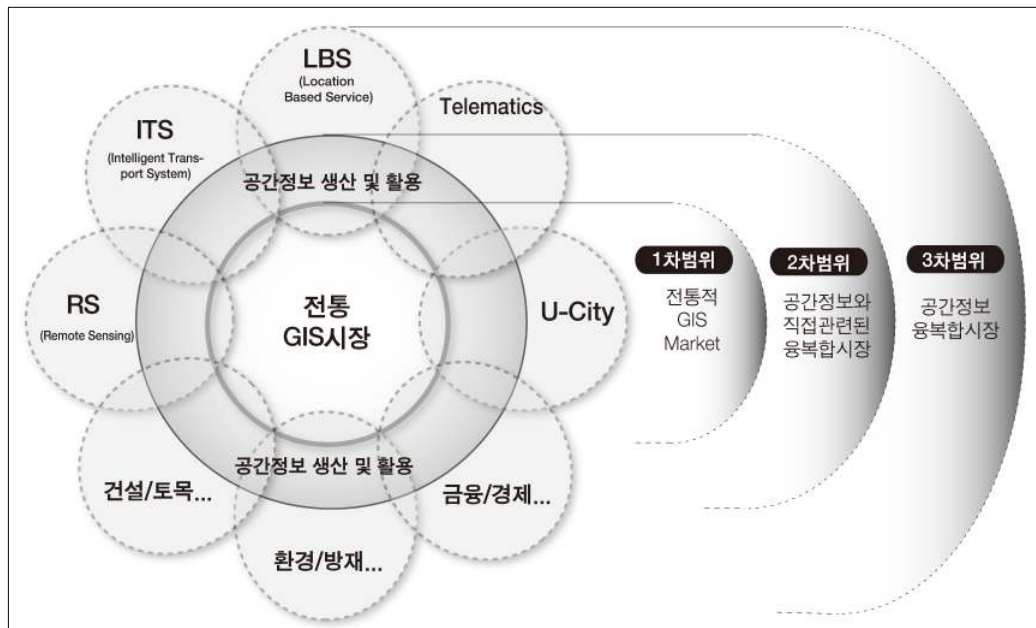
-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사이버 국토 및 가상공간 이용 확대가 예상됨
  - 국토공간의 3D화는 현실공간과 동일한 제2의 가상공간인 사이버 국토를 구현하여 국토 계획의 전 분야를 뒷받침하는 정보 인프라로 발전할 것으로 전망

- 국토정보의 구축 확대와 데이터 처리속도 개선 등 정보통신 기반이 지속적으로 향상되어 유비쿼터스 컴퓨팅 기반의 국토로 발전될 전망
-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국토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국토정보화의 급속한 진행 예상

#### □ 국토정보 신산업의 부상 및 정보보호 요구 증대

- 국토정보기술의 핵심인 GIS기술이 급격히 발전하는 가운데, 국토정보 구축 및 활용기술이 IT기술과 융합하여 새로운 산업의 등장이 예견
- GIS시장이 국토정보와 관련이 있는 기술과 융합하여 LBS(Location Based Service), ITS(Intelligent Transport System), u-City, g-CRM<sup>34)</sup> 등 새로운 정보서비스 산업이 발생하고 활성화될 전망

<그림 III-14> 기술융합시대의 국토정보시장 범위



- 공공과 민간 정보시스템에 대하여 DDoS<sup>35)</sup>와 같은 악성 해킹(hacking) 공격이 급증함에 따라 시스템 보호를 위한 근본적 대책에 대한 요구가 증가
- 사회 정보망과 정부의 전자정부 사업의 성과가 사이버 테러에 훼손될 우려

34) Geographic Customer Relationship Management는 GIS와 CRM의 통합, 즉 지리정보시스템과 고객관계관리시스템을 통합한 정보서비스의 한 영역임.

35) DDoS(Distributed Denial of Service)는 복수의 네트워크에 분산되어있는 대량의 컴퓨터가 일제히 특정 서버에 패킷(packet)을 송출해서 통신회선에 과부하를 유발하여 기능을 정지 시키는 공격. 2009년 7월 3차레에 걸친 공격으로 한국과 미국의 주요 정부, 금융 및 포털사이트에 장애를 일으켜 정부와 기업, 개인이 많은 피해를 입은바 있음.

### 3. 추진과제

#### (1) 지속가능하고 경제성장을 지원하는 녹색교통체계 구축

##### □ 녹색교통 중심의 교통 인프라 구축

- 에너지 다소비형 도로·자동차 중심교통체계에서 철도·해운·그린카·사람 중심 ‘저탄소 녹색교통’ 체계로 전환
  - 고속교통망을 KTX 등 철도 중심으로 재편하여 전체 SOC 투자 중 철도비율을 지속 확대
  - 철도·연안해운 위주의 녹색물류체계를 구축하여 녹색교통의 수송분담률 확대
  - 그린카 등 첨단 교통기술을 개발하여 녹색성장 동력으로 육성
- 기존 도로 운영 효율화·첨단화 및 혼잡구간 개선에 중점
  - 첨단 IT기술과 신교통기술을 결합하여 기존 도로교통시설의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스마트 교통시스템을 구현하고, 병목지점 개선·외곽순환고속도로 구축 등 도심내 혼잡도로 개선
- 시설 확충 위주의 양적 팽창에서 교통수단간 연계 강화(Intermodalism) 및 기존시설의 운영 효율화에 중점
  - 육·해·공 교통SOC가 상호연관성을 갖도록 종합투자계획을 수립하고, 부문별 사업계획 통합 조정
  - 네트워크 효율성 제고를 위한 복합환승센터 개발, 인입철도 등에 투자 확대

##### □ 철도 네트워크 확충

- 광역경제권간 통행패턴에 부합하여 국토를 최단으로 연결하는 ‘X’자형과 초광역 개발권을 연결하는 ‘口’자형의 고속철도망 구축
- 기능과 연계도시 규모에 부합하는 철도노선의 위계화 추진
  - 통행거리별 경쟁력을 고려하여 고속철도, 간선철도, 지선철도, 광역철도간 적절한 역할 분담이 가능하도록 철도네트워크를 구축
- 초고속열차 개발(최고 430km/h급), 평면 승·하차, 환승체계 등 운영 개선을 통해 이동시간 추가 단축

- KTX 철도망으로 연계된 국토공간의 허브 기능을 강화하여 대륙과 해양을 연결하는 글로벌 국토 기반을 정비

<그림 III-15>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 □ 거점도시권내 광역·급행 교통망 정비

- KTX 연결효과의 주변지역 확산을 위해 거점도시권 30분대 광역·급행교통망 정비
  - － 간선급행버스(BRT)를 수도권 전역 및 전국 대도시권으로 확대하여, KTX와 연계를 강화하고, KTX역, 전철역, 터미널 등에 상업·문화·업무 등이 결합된 복합환승센터 개발
- 수도권내 접근성 제고를 위해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의 도입을 추진
- 공사 중인 도시광역철도 사업의 적기완공을 지원하고, 기존선은 급행열차 위주로 운영방식 개선

## □ 선택과 집중을 통한 효율적 도로망 정비

- 사회적 여건변화를 반영한 7×9 국가도로망의 네트워크 연계성·이동성을 보완
  - － 5+2 광역경제권과 국책사업 등 장래 공간구조 개편의 지원이 가능한 녹색성장형 도로망 정비
  - － 대도시권 교통문제 완화를 위한 순환도로망 확충과 광역경제권 거점도시를 연결하는 수평적 네트워크형 도로망 구축
- 고속도로, 국도 등 도로사업 계획간 상호연계 강화
  - － 도로 목표지수 개선을 위해 기존의 국도사업목표(2020년 4차선 확장 60%)에서 접근성·환경성 중심으로 도로 목표지수 개선
  - － 고속도로, 국도, 국가지원지방도, 혼잡도로 사업계획 등의 노선간 중첩여부, 개통시기, 연계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통합계획 수립
- 일반도로망은 국토간선축 기능 향상과 지역간 균등한 간선도로 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설의 개량 및 확충, 도시부 혼잡 해소 및 도로 네트워킹 강화에 중점
  - － 기존 도로 선형 개량, 교차로 개선 등 도로시설 개량 및 안전성 향상 비중 확대
  - － 광역교통난 완화를 위해 대도시권 혼잡도로 및 광역도로 구간에 대한 투자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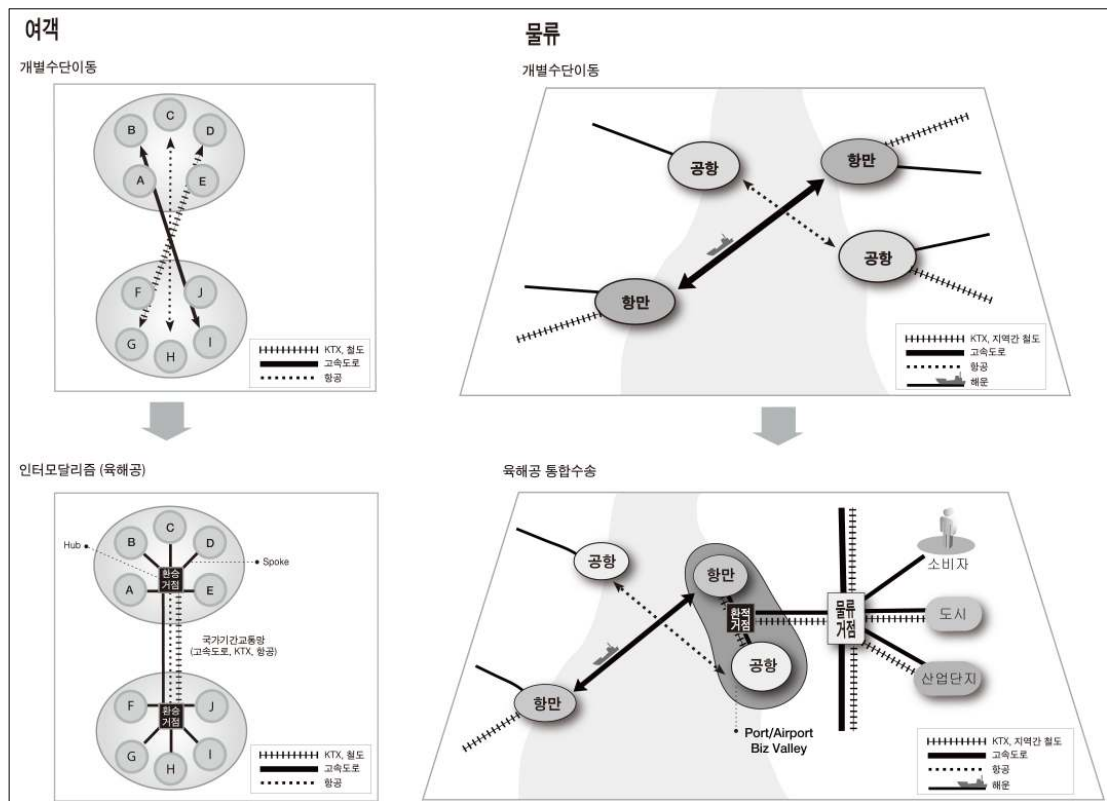
<그림 Ⅲ-16> 간선도로망 구축계획



## □ 육·해·공 통합 연계교통체계 구현 : Intermodalism 교통체계 구축

- 국가기간교통망계획과 부문별(도로, 철도, 공항 등) 투자계획 간의 연계성 강화
  - 육상, 해상, 항공 교통정책과 도로, 철도, 공항, 항만 등 교통시설의 확충이 상호연관성을 갖도록 부문별계획을 통합·조정하여 Intermodalism<sup>36)</sup> 구현을 위한 제도 정비
  - 개별 교통수단별 고비용 저효율 교통체계에서 육·해·공 연계로 저비용 고효율 교통체계 구현
  - 복합환승센터, 복합물류기지 확충 등 환승거점시설을 정비
  - 환승거점간 이동성 제고를 위하여 고속 철도망을 확충하고, 환승거점과 출발·목적지간 접근성 향상을 위해 간선철도·도로망 정비

<그림 Ⅲ-17> 연계교통을 통한 Intermodalism 구현



- 항만, 산업단지 등 주요 거점 연계교통망 확충의 시급성, 전체 네트워크의 효율성, 지역경제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단계별 연계교통망 개선 추진
  - 연계교통시설 개선은 연계교통 영향권내 교통망을 패키지화하여 전체 수요를 감안, 시간적·공간적으로 동시에 추진·조정

36) 도로, 철도 등 개별수단 차원의 단편적 교통문제 해결 방식에서 탈피하여 전체 수단(All the modes)차원에서 교통시설 개발·운영, 연계수송, 환적·환승 등이 비용 절감적으로 연계된 통합 교통체계.

- 공항과 항만간 연계성 및 5대 물류거점과 기업의 물류거점시설 간의 연계성을 강화
  - － 항만·산업단지를 연결하는 철도인입선 건설사업 및 통합물류관리체계 구축사업 추진
- 고속철도역의 접근성 강화를 위한 대중교통 연계체계를 강화하고, 광역경제권 중심 도시 주변에 IT 기술을 접목한 복합환승센터를 설치
  - － 복합환승센터 개발 등 교통수단간 유기적인 연계·환승체계 및 철도역세권의 복합·고밀도 개발 필요
  - － 교통수단간 연계형태, 환승규모 등을 감안하여 유형별로 환승센터를 지정·관리
- KTX 역세권의 지역별 비즈니스 차별화 개발, 역세권 고밀개발, 대중교통 중심으로 특성화하여 개발하는 등 연계교통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안 마련
  - － 국가 성장동력으로 공항과 배후도시 지원기능이 연계된 Air-City를 개발하여 글로벌 전진 기지로 조성하고, 다양한 산업 유치로 시너지 효과 창출
- 여객 및 화물교통수요와 수송수단별 특성을 균형있게 고려한 통합연계형(Intermodalism) 수송체계 구축
  - － 접근성과 편의성 측면에 우월한 도로는 중단거리, 장거리 대량수송에 효율적인 철도의 여객 및 화물 수송분담률을 점차 제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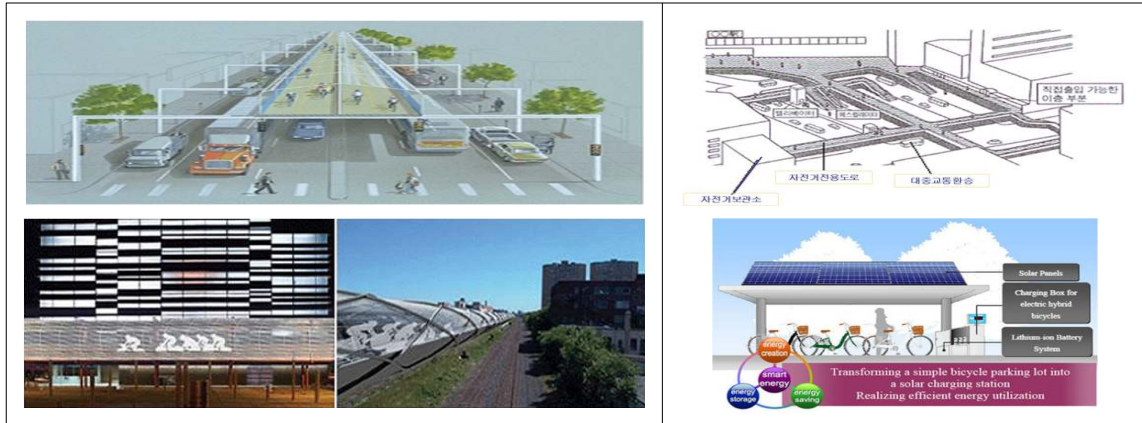
## (2) 국민 생활편익 증대를 위한 친환경 교통정책 추진

### □ 보행자와 자전거 중심의 생활 녹색교통 정비

- 녹색교통이 정착될 수 있도록 보행자 전용구역 활성화 정책 추진
  - － 보행자 전용구역 활성화를 위한 도로법, 도로교통법 등 관련 법률 및 제도적 개선 필요
    - ※ 보행우선구역 시범사업의 지속적 추진(매년 5개소)
  - － ‘보행자의 날’(11월 11일)행사 확대 및 보행자 중심의 교통문화 홍보
  - － 지구단위계획, 도시설계 등 도시계획 측면에서 교통계획의 TOD(Transit Oriented Development)와 연계한 보행자 전용구역 도입 검토
- 대중교통과 자전거의 연계성 제고
  - － 대중교통에 자전거 동반승차를 위한 탑재장치를 단계적으로 설치하여 장거리 이용자의 자전거 이용을 유도하는 지원체제 확립

- 환승시설 및 대형건물에 자전거 주차시설·샤워시설 등 편의시설을 확충하여 자전거 이용자의 환승이용을 제고하고, 자전거 교통에 대한 홍보를 활성화

<그림 Ⅲ-18> 대중교통과 자전거 연계성 제고 개념도



◦ 안전한 자전거 도로망 확충

- 안전한 자전거 도로 건설 기준을 마련하여 생활밀착형 자전거 활성화 정책 추진
- 철도역 및 버스 정류소를 연계한 자전거 도로망 구축

◦ 4대강 정비사업과 연계하여 전국일주자전거도로망 계획 수립

- 4대강 유역의 자전거도로 이용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주요 도시 및 취락지가 발달한 4대강 지천 및 섬진강 등을 자전거 도로로 네트워크화 하여 대중교통 이용과 연계

□ 탄소배출 저감형 교통수단 개발 및 관리 추진

◦ 기존 교통수단을 CO<sub>2</sub> 저배출형 교통수단(하이브리드카, 전기자동차, CNG버스, 경전철, 수소연료차 등)으로 점진적 대체

- 공공기관 공용차량의 경우 저공해 차량 의무구매 할당제를 도입하고, 일반 구매자에게도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방안 필요

◦ 그린카 개발 및 보급 확대

- 자동차 배터리 등 핵심기술 개발 및 충전시설 확충, 우수 기술·부품의 표준화 지원 및 차량 안전기준 보완 등 추진
- 저속 전기자동차의 도로주행 허용 등을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국립공원 등 생태우수 지역에 전기차 등 친환경자동차를 보급하고 특성화된 전기차 보급 모델 개발



◦ 첨단 녹색교통수단 개발

- 430km/h급 차세대 고속열차를 개발하여 국내는 물론 해외시장 진출
- 도시형 자기부상열차(110km/h급)를 개발하여 인천국제공항에 시범노선 구축(2012년)
- 버스와 철도의 장점을 결합한 바이모달 트램 개발(2012년)

<그림 Ⅲ-19> 첨단 녹색교통수단 개발



- 지자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녹색교통 대책지역 지정, 권역별 자동차 통행 총량제 실시 및 대중교통 중심의 도시개발 등 추진
  - 탄소배출이 많은 도심지역 등을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하여 탄소배출 감소를 위한 맞춤형 녹색교통 대책 추진
- 그린카 핵심기술 개발 및 우수 기술·부품의 표준화 지원 및 실용화를 위한 기반 구축과 제도 개선 추진
- 경제운전 보급 및 활성화를 위한 체험교육 및 홍보 강화

## □ 기존 시설 이용 효율화를 위한 녹색성장형 도로망 및 ITS 시설 확충

- 기반시설의 유지·정비·관리 단계에서 녹색성장을 유도하는 전략 수립
  - 기존 폐도 부지 등을 활용하여 신재생에너지 시설을 설치하고 저탄소 친환경 포장공법을 도입하는 등 녹색성장형 도로정비 추진
- 첨단교통체계(ITS)를 통해 기존 교통시설의 활용을 극대화하고, 첨단도로와 자동차를 IT기술로 결합하여 도로용량을 대폭 확대
  - 전국 도로 ITS 구축비율을 2008년 8%, 2012년 14%, 2020년 25% 수준까지 제고

- 첨단교통체계(ITS) 구축과 스마트 하이웨이 건설(2018년 ~ 2030년)로 교통혼잡구간의 회피 및 교통안전성 제고 등 CO<sub>2</sub> 배출 최소화
  - 기존의 고속도로에 ITS 정보체계를 보강한 스마트 하이웨이 건설로 도로의 안전성과 주행성을 제고하고 하이패스 이용률 증대로 고속도로 혼잡개선 및 CO<sub>2</sub> 배출 저감
  - 버스 정보시스템(BIS: Bus Information System) 구축으로 대중교통수단의 이동성을 제고하고 이용자에 정보 제공 확대

<그림 III-20> 스마트 하이웨이 개념도



## □ 대도시권 대중교통 활성화

- 지역간, 지역내 주요 환승지점에 교통류의 특성을 고려한 복합환승센터를 설치하여 유출입 교통량을 대중교통으로 처리

<그림 III-21> 복합환승센터 유형



지역간 통행 : 철도 중심

지역내 통행 : 버스 중심

- 대중교통중심 지역개발(TOR: Transit-Oriented Regions) 추진
  - TOD 개념을 지역차원의 공간으로 확장하여, 대중교통간 연계환승이 가능한 복합환승센터 중심의 도시권 공간구조 형성
- 토지이용계획과 연계한 대중교통지향형개발(TOD)을 통해 고밀도의 대중교통 중심 공간에서 수단간 환승 및 지선형 대중교통으로 주요 지점과 연계
  - 일반철도, 지하철, 버스, 경전철 등 대중교통수단을 KTX역과 연결하기 위해 KTX 중심의 대중교통지향형 환승시설 설치
  - 대도심 중심부와 도심 근교, 신도시 등을 대상으로 광역급행전철 구축 추진
- 간선급행버스(BRT)<sup>37)</sup> 중심의 대중교통체계 구축을 통해 승용차 보다 빠르고 편리한 이용자 중심의 버스 서비스 제공
  - 광역급행버스를 수도권 전역 및 지방 대도시권으로 확대하여 노선연장을 2009년 97.9km에서 2020년 470.2km까지 확대
  - 고속도로 휴게소에 버스 환승시스템을 확대 구축하여 운행 거리 및 비용 절감
- 지역간 대중교통수단(철도, 고속시외버스, 항공, 해운 등)과 지역내 이동수단( 시내버스, 지하철 등) 간의 이용정보를 통합·연계하여 전국의 대중교통정보 제공
  - 원하는 시점에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스마트폰, 내비게이션, IPTV, 포털사이트 등 정보 제공매체 다양화
  - 실시간 버스도착정보 등 버스정보시스템(BIS)의 연계 및 제공 추진
- KTX, 지하철역 등 교통시설에 설치된 교통약자 편의시설정보 제공으로 교통약자의 대중교통이용 편의 도모
- 교통수요관리 정책의 사회적 수용성 제고를 위한 홍보 및 다양한 수요관리 기법 도입
  - 대중교통 활성화 필요성과 사회적 불이익에 대한 대국민 교육 및 홍보 프로그램 개발
  - 대중교통 이용 편리성 제고 및 대중교통정보 제공으로 승용차 수요 전환을 유도
  - 램프 미터링, 도심주차 상한제 등 교통수요 관리정책 시행

37) BRT : Bus Rapid Transit.



### (3)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글로벌 물류체계의 구축

#### □ 공항의 글로벌 물류기반시설 확충

- 국제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항공시장 자유화(Open Sky Policy) 확대
  - EU와의 항공 자유화 추진 및 주요 교역 상대국과 항공회담을 통한 항공자유화 또는 공급력 확대 추진
  - 한-ASEAN 간 항공협정 체결을 통해 거대 항공시장 형성에 능동적 대응 및 자유화 미합의 ASEAN 회원국과도 항공사 안전수준 등을 고려하여 노선 확대·개별 자유화 추진
  - 한-중 항공협력회의, 한-중 항공회담을 통해 한-중 항공자유화 추진 가속화
- 글로벌 항공강국 실현을 위하여 인천국제공항의 허브경쟁력을 지속적으로 강화
  - 항공수요의 증가 및 동북아 허브공항 경쟁에 능동적인 대응을 위해 제2여객터미널 신축, 계류장 및 화물터미널 확장, 접근교통시설(도로·철도 등) 확충 등 2017년까지 3단계 사업 완료를 추진하되, 최종 완료시기는 항공수요 증가추세를 보아 탄력적으로 조정
- 김포공항의 국제선 수요 증가에 따라 유희시설을 활용한 근거리 국제선 승객의 편의 증진을 위한 시설 확충
  - 동경, 오사카, 북경, 상해, 홍콩 등 동북아 주요 도시와의 셔틀 서비스 개선
  - 선제적인 Open Sky Policy 추진으로 지역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지원
- 기존 지방공항의 경우 공항별 항공수요 규모와 기능에 부합하는 맞춤형 활성화 전략 수립
  - 김해국제공항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광역경제권 전략과 연계하여 발전
  - 동남권 신공항은 입지평가 결과에 따라 사업 추진
  - 서남권의 항공 기반 강화를 위하여 광주공항의 기능을 무안공항으로 통합 추진
  - 제주공항은 시설활용 극대화를 통해 항공수요 증가에 대응하고 장기적으로 기존공항 시설 확장·개량 또는 신공항 건설을 검토 등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과 연계발전 추진
  - 청주공항은 중부권거점공항으로서 LCC<sup>38)</sup> 국제선을 적극 유치
- 기후변화, 글로벌 경쟁체계 및 육상교통체계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환경친화적인 공항 개발
  - 태양광, 풍력 등의 대체 에너지의 비중을 확대하고, 공항주변 자전거도로 구축, 공항 소음 대책 활성화 등 녹색공항 사업 추진
  - 관광, 레저, 에어택시 활동 증대 등 교통수단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

38) LCC : Low Cost Carrier. 저비용 항공사.

- 글로벌 전진기지 조성 및 항공수요 창출을 위한 공항 및 다기능 복합도시(Air-City) 개발
  - 공항과 배후도시 지원기능이 연계된 Air-City를 개발하여 공항 지원기능 강화, 신규 항공수요 창출 및 국가 신성장동력 창출
  - 공항 주변에 관광·레저, 국제업무·컨벤션, 쇼핑 등 다기능을 갖는 국제업무지구를 세계적 위락단지 및 테마파크로 조성

## □ 항만의 글로벌 물류기반시설 확충

- 광역경제권별 거점항만을 특화 육성하고, 물류기반시설 대형화 및 첨단화
  - 항만의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선박 대형화에 따른 항만 물류인프라 및 장비의 규모를 대형화하고 운영시스템을 최적화하여 미래형 첨단항만시스템 구축
- 부산항 신항, 광양항 등 주요 물류거점 항만에 대한 집중투자로 고부가가치 환적화물을 유치하고 물류산업을 선도하는 동북아 거점 항만으로 육성
  - 부산항 신항, 광양항을 대형컨테이너 중추항만으로 개발

<표 III-12> 광역경제권별 거점항만 및 주요 기능

권역	항만의 주요기능	주요 거점항만
수도권	대중국 교역기지, 복합물류거점	인천, 평택당진
충청권	에너지, 자원, 배후산업 기능 지원	대산, 보령
호남권	동북아 물류허브, 배후산업 지원	광양, 군산(새만금), 목포
동남권	동북아 물류허브, 에너지, 산업 지원	부산, 울산, 마산
대경권	대경권 국가기간산업, 관광 지원	포항, 울릉(연안항)
강원권	관광기능, 대러시아 무역기지	속초, 동해, 묵호
제주권	관광기능, 제주지역 소비재 화물	제주, 서귀포

자료 : 국토해양부, 2010. 「2010년 항만정책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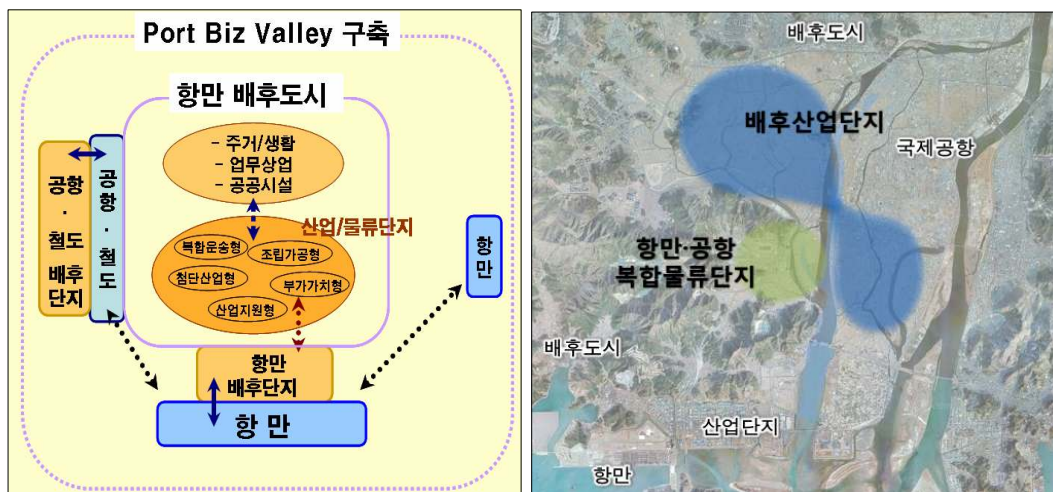
- 동북아 포트 얼라이언스(Port Alliance)구축을 통한 피더네트워크 강화
  - 초고속화물선(위그선)을 투입한 환동해권 피더네트워크(Feeder Network) 구축 추진
  - 중국 및 일본 중소항만과의 네트워크(Port Alliance) 강화를 통한 틈새 화물수요를 국내 항만과 연계하는 환적 시스템 구축
- 지리적 이점을 활용하여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동북아 오일허브를 구축하여 물동량 창출

- 국민소득, 여가시간 증가로 인한 해양관광활동의 다양화와 기반시설에 대한 요구 증대에 대응하기 위해 마리나, 크루즈 등 해양레저·관광 인프라 확충
  - 해양레저 활성화 및 공공마리나 개발을 위해 국가주도의 마리나 개발을 추진하고 연안역 U자형 크루즈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인프라 확충
- 노후·유희항만을 배후도시지역과 연계하여 친환경·고부가가치 항만으로 재생
  - 시민의 여가공간 제공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해양·항만복합도시로 재개발하여 항만 도시의 신성장동력 확보
- 해운 부문의 탄소배출 규제에 대응한 녹색기술 및 법·제도 기반 구축
  - IMO 선박 온실가스 감축규제에 따라 해양환경관리법, 관련 기술지침 등 관련규정을 정비하여 국제선대의 친환경 운항 기반 조성
  - 녹색선박 인증시스템 등 녹색 신기술을 개발하여 국제 표준화를 추진하고, 신조선 및 현존선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관련 기술개발 추진

#### □ 포트 비즈니스 밸리(Port Biz Valley) 구축 및 물류거점간 연계 강화

- 공·항만배후단지의 복합개발을 통한 물류클러스터 조성으로 항만산업의 확산효과를 극대화하여 대외 경쟁력 확보
  - 공·항만과 배후단지간 연계를 통한 물류인프라 조기 확보와 신속한 서비스 지원을 통한 고부가가치 물류서비스 제공

<그림 III-22> 포트 비즈니스 밸리 개념 및 구축 사례(안)



- 패리다임 전환으로 부가가치 물류클러스터 조성에 의한 물류산업의 발전과제 도출
  - 국제수준의 물류인프라 구축, 특화된 물류클러스터 서비스 개발, 고객지향적 물류정책 추진, 물류전문인력 및 물류전문업체 육성, 제도 정비 및 재원 마련 등 과제 도출
- 주요 운송거점 및 물류시설간 연계 강화
  - 주요 물류시설 및 단지간 연계, 계획 조정 기능을 강화하고 육로수송 화물 유치를 위한 전용부두, 창고 건설을 지원
  - 복합물류터미널, 지역별 물류단지, 개별 단위물류시설(일반물류터미널, 개별 창고 등) 간의 정보공유체계 구축으로 물류시설간 연계를 활성화
- 산업단지내 제조기업간 물류 공동화 추진 및 지원을 통해 물류시설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물류전문기업 입주 유도를 통해 물류기능 강화
- 공영도매시장 시설 현대화 지원 및 산지유통센터의 지속적 확충을 통해 농수산물 유통체계 합리화 추진
- 철도와 화물자동차의 복합일관수송 확대로 문전수송(Door to Door)이 가능한 연계 서비스 구축
  - 수송능력 84% 증대, 운임은 25% 인하 가능한 컨테이너 2단 적재열차(DST) 운행 추진
- 권역별 내륙물류기지, 항만철도운송시설 등에 인접한 철도 CY(Container Yard)를 단계적으로 연계·통합함으로써 운영 효율성을 제고하고 제도적 기반을 확립
  - 물류결절(Logistics Nodes) 거점화·최적화로 전체 물류네트워크 효율성 증대
  - 권역별 물류거점 중복 지정을 지양하고 관련 유사계획의 연계를 의무화
  - 법령 및 계획 개정을 통한 물류거점시설 연계·통합운영의 제도적 기반 확립

## □ 육상·해상·항공 국가물류 정보망 활성화 추진

-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 구축
  - 육상·해상·항공 등의 물류정보 공동 활용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기업의 원활한 물류활동을 지원하고, 육·해·공 실시간 화물추적 정보를 제공하여 물류경쟁력을 제고
  - 민·관의 단위물류정보망을 연계하는 물류정보허브(종합물류정보망)를 구축하고, 국가물류 통합DB 구축을 통해 기업과 정부의 의사결정 지원

◦ RFID<sup>39)</sup>기반 물류거점정보시스템 구축

- 물류거점에 차량·화물의 반출입 자동인식, 위치추적, 항만의 GCTS(Global Container Tracking System)와 연계·통합 추진
- 물류거점 운영의 효율화를 위해 전국의 주요 물류거점에 RFID 기반 관련 시설물을 설치하고, 이를 관리하는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화주·운송상 등에 물류정보 제공

◦ 국가물류 종합정보서비스 구축의 일환으로 항공물류정보시스템(AIRCIS: Air Cargo Information System)을 개발

- 항공화물 흐름의 실시간 추적 및 여러 항공사의 항공화물 예약·조회, 운송장 관리 등 물류처리 기능과 함께 모든 항공물류정보를 통합 제공

## □ 미래형 첨단 물류체계 구축

◦ 저탄소 녹색성장-GREEN Port 구축

- 저탄소 항만물류체계, 에너지 자립형 항만을 구축하고, 고효율 철도운송장, 철도인입선 확충 및 연안 해송 축진을 위한 배후수송체계 구축
- 항만공간에 폐기물 재활용, 재처리, 최종처리를 집적화하고 효율을 높이는 친환경 자원 순환체계(Recycle Port) 구축

◦ 안전성 확보 및 공해물질 저감을 위한 대체운송수단 활용 제고

- 대기오염, 해양오염 등을 방지할 수 있는 파이프라인 수송망 체계의 확대 유도 및 지원
- 장거리 중량물 또는 유해물질, 폐기물 등 위험물 수송관리시스템 적용을 위한 제도 마련

◦ 물류 신기술의 도입 및 확산을 위한 지원 강화

- 물류 관련 연구개발사업 지원제도 마련을 통해 물류 기술개발 지원센터 설치와 물류 신기술 도입 성공사례를 홍보
- 중소물류기업용 물류기술 개발 및 확보를 위해 물류기술 도입을 지원하고 기술지도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

39) RFID(Radio-Frequency IDentification) 기술이란 전파를 이용해 먼 거리에서 정보를 인식하는 기술을 말하는 것으로 첨단물류시스템 신기술개발에 적용되고 있음.

#### (4) 선진 국토정보인프라 구축

##### □ 국토정보체계 조기 구축

- 국토정보체계<sup>40)</sup>의 기반으로써 국토정보인프라(KSDI)<sup>41)</sup> 요소별 정책 추진
  - 기본공간정보의 구축, 표준에 관한 정책, 국토정보의 유통, 협력체계(Partnership) 구축에 관한 국토정보인프라(KSDI)정책 수립
  -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의 구축을 통해 국토정책 및 계획 수립을 위한 원스톱(One-Stop) 정보제공 기반 마련
- 국가사업과 국토정보체계의 협력적 사업 추진
  - u-Korea 전략, IT839 전략, 전자정부사업·시·군·구 행정정보화사업 등 국가정보화 사업과 협력 및 역할 분담
  - 저탄소 녹색성장사업, New Deal 사업, 신성장동력사업, 신재생에너지, 국정과제 등 정부의 주요 정책사업과의 연계 및 협력 추진

##### □ 과학적 계획 수립 지원과 지능형 국토정보 구축

- 계획 및 정책 수립을 위한 공간의사결정지원체계 강화
  - 국토정보인프라를 기반으로 KOPSS<sup>42)</sup>와 같은 공간의사결정 지원체계의 활용 및 고도화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계획 및 정책 수립 지원
  - 도시계획정보체계(UPIS)와 같은 공간계획업무지원체계와 공간의사결정지원체계의 연계를 통해 국토정보체계 활용에 따른 시너지 창출
- 현황 모니터링과 지속가능한 국토관리 지원
  - 효율적 국토관리 지원을 위해 분야별 특성을 반영한 공간정보를 적시에 제공할 수 있는 모니터링 시스템의 구축
  - 시계열적 공간 분포 및 패턴 변화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과학적이고 합리적이며, 지속 가능한 국토 관리를 지원

40) 국토정보체계는 하나의 정보체계가 아니라 국토와 관련한 주제별, 분야별 정보시스템을 통칭하는 표현으로, 중앙과 지방정부에는 약 460개의 개별 국토정보시스템이 운용 중임.

41) 국토정보인프라(KSDI: Korean Spatial Data Infrastructure)는 국토정보체계와 같은 국토정보화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핵심요소를 선정하여 국가가 직접 구축 및 관리를 하는 사회간접자본임.

42) KOPSS : KOrrea Planning Support System, 국토공간의사결정지원체계.

◦ 지능형 국토공간정보 구축

- u-국토정보기술, 센서네트워크 등 IT기술과 융합한 지능형 국토정보 구축
- 지능형 국토정보 구축을 통한 실시간 공간의사결정 지원체계 및 모니터링 체계 구축

## □ 국토정보 신산업 발굴과 글로벌화

◦ 신성장동력으로서 국토정보 신산업 창출

- 국토정보산업 규모는 산업간 융복합을 통해 성장세를 대폭 확대할 수 있으며, 신성장동력으로서 관련 산업 발전의 견인차 역할 수행
- ITS, LBS, RS, 측량 등 국토정보와 직접 연관분야를 뛰어넘어 금융, 마케팅, 건설, 토목, 환경, 방재, u-City, g-CRM 등 광범위한 융복합 비즈니스 모델의 개발과 산업영역 확장

◦ 국토정보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

- 선진 국토정보기술과 정보기술 강국의 이미지를 활용하여 제3세계국가 및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기술 수출을 통한 자원외교의 교두보 확보
- 글로벌 시장 진출 전략 수립을 통해 국토정보산업의 시장 확대와 산업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활용하고, 시장 의존도를 민간으로 옮겨가기 위한 정부차원의 지원정책 개발

## □ 사이버 테러 대응방안과 국토정보 보호

◦ 기존 국토정보체계에 대한 사이버 테러 대응방안 마련과 신규로 구축되는 국토정보 체계에 대한 사전 대응방안 의무화 추진

- 기존 국토정보체계의 경우 기술적·정책적 수단을 동원하여 사이버 테러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하고, 신규로 구축되는 국토정보체계 설계단계에서부터 시스템 보호장치를 설치하여 외부공격에 대비한 구조적 대응체계 마련
- 사이버 테러 발생시 즉각 조치 및 복구계획을 수립하여 업무 마비와 대민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신속대응체계 마련

## 제5장 세계로 열린 신성장 해양국토 기반 구축

### 1. 현황과 문제점

#### □ 넓은 바다를 보유한 반면 해양공간 및 자원의 활용이 미흡

- 우리나라 관할해역은 국토면적의 4.5배인 443,000km<sup>2</sup>(EEZ 포함)이며, 해양정책이 미치는 연안육지부 면적<sup>43)</sup>은 3,220km<sup>2</sup>임
  - 도서 수는 3,358개소(유인도 482개소, 무인도서 2,876개소)이며 미등록 무인도서는 지적공부 등록을 하고 있음
- 연안지역 거주 인구는 약 1274만 명으로 전국인구의 27.0%를 차지
  - 전국 산업단지(농공단지 포함) 609개소, 12억 3759만 m<sup>2</sup> 중 연안지역에는 217개(약 36%), 8억 7572만 m<sup>2</sup>(71%)가 입지
  - 어업 생산량은 1980년 241만 M/T, 생산액은 8430억 원에서 2007년 각각 328만 M/T, 5조 7520억 원으로 증가

#### □ 지속가능한 해양환경 관리체제의 미정착

- 지속가능한 해양국토 형성을 위한 보호구역 지정이 확대되는 추세
  - 1990년대 중반부터 보호구역 지정이 크게 증가하여, 2007년에는 국토면적의 10.7%인 425개소 10,667km<sup>2</sup>가 연안·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
- 전국 363개 연안환경 측정 결과 전반적으로 수질 개선 필요
  - I등급 해역은 150개소(목표수질 224개소), II등급 해역은 133개소(목표수질 156개소), III등급 해역은 6개소(목표수질 42개소)
  - COD 기준 전국연안 수질은 II등급 수질을 유지하며, 2002년 1.28mg/L에서 2007년 1.10mg/L로 약간 감소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음
- 도시지역 강우 유출수, 축산폐수 등 비점오염원에 대한 대응방안이 미흡하여 오염원의 효과적인 관리가 곤란
  - 연안지역의 인공저수지, 육상양식장 배출수, 오염원 유입에 대한 관리기준이 미비하여 해양 오염물질에 대한 조사와 분석을 위한 기반 구축이 미흡

43) 해안선에서 500m 범위 내의 영역.



## 2. 여건변화 전망

### □ 해양공간에 대한 관심 증대

- 세계 인구 증가에 따라 육지공간이 한계에 이르고 있어 해양이 새로운 공간자원으로 각광받게 될 것으로 예상
  - － 해양도시, 해중공원, 해양기지 등 인류의 활동무대가 크게 확대될 전망
- 소득 및 여가시간의 증대 등으로 인해 해양관광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
  - － 해양생태관광, 해중관광, 도서관광, 해양 레저 및 스포츠 등 다양한 형태의 관광수요 등장으로 해양관광이 보다 활성화 될 전망

### □ 해양영토 및 해양 과학기술에 대한 국가간 경쟁 심화

- UN 해양법 협약 발효(1994년) 및 비준국가 증가에 따라 주요 어장 및 자원 관련 분쟁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
  - － 연안국의 해양관할권이 영해(기선에서 12해리)에서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EEZ)까지 확대되어 관련 분쟁이 증가<sup>44)</sup>
- 해양 과학기술 개발 및 산업화 부문 등에서 국가간 경쟁 심화 예상
  - － 해양에너지(조력, 조류, 파력, 온도차 발전 등)·생명산업 등에 관한 관심이 보다 증대될 전망

### □ 해양환경 부문의 국제협력환경 변화 가속화

- 해양환경 관련 규율 범위의 확대 및 국내정책에 대한 영향 증가
  - － 전지구적 차원의 해양환경 보전 및 생태계 관리가 점차 확대됨에 따라 국가적·지역적 차원의 구체적인 이행계획 수립 및 관련 법·제도 개선 요구 상승
- 한반도 인접국가 및 동아시아 지역해 중심에서 아프리카, 중동, 태평양 도서국, 남미 지역 등으로 해양환경 협력사업 확대 필요성 증대 전망
  - － 해양환경 산업의 진출기회가 높고, 해양정책 및 기술 보급이 용이한 지역과 협력사업 및 지원사업 추진이 증가할 전망

44) 152개 연안국이 모두 EEZ를 선포하면 해양의 36%, 주요 어장의 90%, 석유매장량의 90%가 연안국에 귀속될 것으로 예상.

### 3. 추진과제

#### (1) 해양자원 확보를 위한 활동영역의 확장

##### □ 실질적 활동영역의 확대

- 북극해 항로 개발에 적극 참여하여 활동영역 확장 및 탐사역량을 강화하고 효율적 해양교통물류 네트워크 구축
  - 지구온난화로 20~30년 후 북극해 운항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북극해 항로 개발을 통해 유럽과 연결되는 새로운 항로를 개척
- 자족형 해상 인공도시인 아쿠아폴리스를 시범적으로 건설하여 활동영역 확장

##### □ 영해기점 무인도서의 특별 관리

- 영해기점 무인도서의 점검 및 훼손 방지체계를 구축하고 영해기점이 소재한 무인 도서와 주변 해역의 자연환경·생태계 실태조사 및 DB 구축으로 체계적 관리 기반 마련
- 주요 영해기점 무인도서 등에 조위관측소를 설치하고 관리여건 변화에 따른 영해기점 재설정 추진

##### □ 해저광물·에너지자원 상용화 촉진 및 남극대륙·북극해 과학조사 투자 확대

- 주변 및 태평양 해역에 할당받은 해저광구 개발 및 상용화 조기 추진
  - 우리나라 주변해역에 매장되어 있는 해저광물, 에너지자원 개발을 통해 자원 수입 대체 및 에너지원 다각화에 기여
  - 국제해저기구가 우리나라에 개발권을 부여한 해저망간단괴의 광구 개발과 상용화 추진<sup>45)</sup>
- 남극대륙 및 북극해에 대한 해양외교력 제고를 위한 과학조사 및 국제협력 강화
  - 남극대륙과 북극해 등에 대한 종합적인 극지산업 국가전략을 수립하고 태평양 권역 국가와 해양자원 공동개발 추진

45) 1994년에 세계에서 7번째로 UN 산하 국제해저기구(ISA)로부터 하와이 동쪽 2,000km, 해저 5km지점에 15만 km<sup>2</sup>의 광구를 할당받음. 2020년 이후 상업생산을 목표로 개발 중임.

## (2) 해양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 □ 해양산업클러스터(Maritime Cluster) 및 네트워크 구축

- ‘항만, 물류, 조선, 관광, 과학기술, 수산, 에너지, 환경’ 등의 해양산업에 대해 생산성, 성장잠재력을 토대로 해양산업클러스터 지정 및 육성
  - 세계박람회 개최를 계기로 여수가 해양과학기술과 산업이 조화된 친환경 해양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해양관련 첨단연구시설 및 기관을 지속적으로 유치
  - 해양산업클러스터간 시너지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동일산업간, 클러스터간 네트워킹을 통해 경쟁과 협력체제 구축
-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시범지역(Pilot Site) 선정
  - 시범지역 선정으로 초기 모델을 개발하고, 성과에 기초하여 규모와 지역을 점차 확대
  - 중앙부처 주도형, 지방·민자 주도형, 전통 해양산업, 新해양산업 등 네 가지 범주를 이용하여 클러스터별 독창성과 차별성 확보

<표 III-13> 해양산업클러스터 개발 유형

구 분	중앙부처 주도	지방정부·민자주도
전통 해양산업	항만, 물류 중심	조선, 수산 중심
新해양산업	R&D, 에너지, 자원, 환경 중심	관광 중심

### □ 관광자원 특성화 및 해양관광의 지속가능성 확보

- 해안권별 특성에 맞는 관광거점 육성 및 연안리모델링 추진<sup>46)</sup>
  - 체류형, 일시방문형, 위락형, 여가형, 휴양형, 체험형 등 다양한 형태의 관광 수요 충족을 위해 관광거점을 육성
  - 낙후지역 소득원 확보와 고품격 관광자원 개발을 위해 생태관광, 무인도서 관광을 확대하되, 생태수용력에 기초하여 방문객수와 활동범위 제한
  - 관광수요 및 해양환경을 고려하여 마리나항, 크루즈 전용부두 및 터미널 건설 등을 추진

46) 2005년 우리나라 4대 해양산업(조선, 수산, 해운, 관광) 규모는 90조 원으로 이 중 관광은 35%, 해운은 46.7%, 수산은 6.7%, 조선은 11.7%를 차지함(해양수산부, 2006. 「미래 국가해양전략 보고서」). 미국의 해양관광 규모는 전체 해양산업의 60.0%이며, 해운 27.1%, 수산 8.2%, 조선 4.7% 순임(US Ocean Commission, 2004. *Ocean Blueprint*).

- 해양관광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관광자원 보전대책 추진
  - 해수욕장 모래 유실 방지, 해안지역의 정체성을 살린 경관 디자인 적용
  - 해안 자연경관 훼손방지를 위해 시설물 입지시 경관 평가 및 규제 강화, 해안도로 건설 제한, 자전거 진입로 확보 등 추진

## □ 해양환경·에너지 산업을 녹색사회 구현을 위한 기반산업으로 육성

- 연안지역 구도심의 생태적 재개발을 추진하고, 해안권별 과학연구단지 조성 등을 통해 환경, 에너지, 자원개발, 생명공학의 전진기지로 활용
- 기후변화, 화석에너지 고갈에 대비하여 해양 신재생에너지 개발 추진
  - 풍력, 태양광, 조류, 파력, 해수 온도차 등을 활용한 청정에너지원 개발
  - 도서지역 에너지 공급 안정성 확보를 위해 외해에 해양 신재생에너지 복합플랜트 건설<sup>47)</sup>
- 연안 지역의 만성적 물 부족 현상 해소를 위해 해수 담수화 시설 설치
  - 일시적·국부적 물 부족 현상을 해결하고 우리나라 담수기술 수출 경쟁력 확보에 기여

## (3) 생태계 기반 통합적 해양자원·공간 관리

### □ 연안 수계·유역 통합관리체제 확대

- ‘해양환경수용력을 고려한 육지부 개발’ 체제를 점진적으로 확대
  - 연안육지부의 개발, 해양 개발 추진시 해역의 용도와 장래 관리목표에 근거하여 해양 환경 수용력을 산정하고 이 수용력 범위 내에서 육지부 개발의 규모와 밀도 부여
  - 특별관리해역, 환경보전해역의 육지부 개발이나 핵심보전지구의 연안유역 개발시 적용
-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섬진강 유역에서 시행하고 있는 해양유입 쓰레기 책임 관리제를 중점 추진하고, 하천 및 하구 유역의 부유쓰레기를 신속 수거·처리

47) 유럽연합은 해양산업 중 해저통신(97%)과 재생에너지(98%) 부문이 2005~2009기간 2배 이상 성장할 것으로 전망(EU, 2007. *Blue Book for Maritime Policy*).

## □ 해역별·오염원별 관리체계 강화

- 연안오염총량관리제 조기 정착과 해양쓰레기 해양 유입 사전 예방 및 투기해역 관리 강화 추진
- 기후변화, 4대강 살리기 사업 등 하구 외부환경의 변화에 대응하여 하구역의 환경 및 생태계의 건강성을 유지하기 위해 하구역 관리 종합시스템 개발
  - ※ 담수 및 퇴적물 유입량, 퇴적물 기인 영양염(예: 규소) 등의 변화로 인해 하구역 환경과 생태계 구조 및 기능 등의 변화 예상

## □ 연안해역 용도제 시행 및 무인도서 체계적 관리

- 연안관리법 개정으로 도입된 연안해역 용도제의 조기 정착 추진
  - 연안해역의 특성, 입지, 활용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연안해역을 4개의 용도해역(이용, 특수, 보전, 관리 연안해역)으로 구분하여 관리
  - 해역 관할권의 실질적 행사와 향후 해양자원 개발 및 환경 보전을 위한 종합적 대책에 기여할 수 있도록 연안해역 용도제를 EEZ로 확대
- 보전과 개발의 조화를 통한 해양영토의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하여 무인도서 종합 관리계획 본격 시행
  - 무인도서 관리제도 정비 및 실태 조사를 조기에 완료하고 무인도서별 동영상 등 관련자료 대국민 정보 제공을 위해 종합정보체계를 구축하는 등 관리 기반 마련
  - 무인도서의 관리유형별 체계적 관리, 보전도서의 훼손 예방과 함께 이용·개발도서의 가치가 최대한 활용되도록 지원
- 독도에 관한 교육 및 홍보와 함께 지속가능한 이용 방안 마련
  - 독도에 관한 대내외적 인식 제고를 위해 독도 교육·홍보 사업을 강화하고, 주변 해역의 보전 및 활용을 통한 독도의 경제적 가치 제고

## □ 해양보호구역 확대 및 연안지역의 관리 강화

- 자연해안과 서식지의 가치를 유지하고 해양산업 기반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 및 시행
  - 연안관리권역별 특성과 연안지역의 용도, 장래가치를 고려하여 관리목표를 정하고 인공 해안화 억제, 인공해안의 자연해안 복원, 갯벌 복원사업 등을 추진
  - 현재 국토 면적의 10.5% 수준인 연안·해양보호구역을 2020년까지 13%로 확대 지정

- 연안재해 취약성 평가와 적응비용 산정으로 지역별 방재 우선순위 결정
  - 주요 지역별로 재해취약성과 적응(피해)비용을 산정하고 이를 국가대책의 지역별 재난 방재 우선순위, 공간계획 등에 반영
- 연안재해 방지를 위한 정비사업, 해안 보전사업 추진시 서식지와 자연지형의 기여 정도를 우선 고려하여 연안개발정책 결정에 활용
  - 연안 개발사업 평가시 환경영향뿐만 아니라 재해 방지역량 가능성 감소를 함께 고려
- 갯벌 및 자연형 해안 복원사업 시행으로 재해영향 사전 감소
  - 지역주민의 의견, 복원에 따른 잠재적 가치 상승, 법적 권한이 단순하게 설정되어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시행

## □ 생태계 기반 공간 및 자원 개발체제 확립

- 해상인공구조물의 환경영향 및 사후관리 정밀평가
  - 메카플로트, 아쿠아폴리스 및 부유식 인공구조물(조선소, 마리나 리조트, 항만) 건설, 인공섬 개발에 대해 환경영향<sup>48)</sup>과 사후관리 방안을 정밀 평가한 후 시행
- 해양 메탄수화물 개발, 해사 채취, 광물자원 개발시 장기적 환경영향 고려
  - 메탄수화물은 개발 과정에서 메탄가스 유출, 해사채취 및 광물자원 개발시 서식지 변형 및 훼손 등의 문제 예방

## (4) 다차원 해양거버넌스 구축

### □ 해양·수산정책의 파트너십 강화

- 여러 부처에 분산된 해양·수산정책의 통합적 추진을 위하여 '해양정책위원회'를 설치하여 부처간 정책 파트너십 강화
  - 이원화된 항만물류·환경연안관리·해양과학기술분야와 수산분야의 정책적 협력 제고
- 계획 수립 및 시행과정에 이해관계자 참여 제도화 및 '과학과 정책결정과정의 통합 운영체제' 구축

48) 인공섬, 해상부유시설은 해류의 속도와 방향에 영향을 줄뿐만 아니라, 오염물질 확산 저해로 인한 해양 오염, 태양광 차단에 따른 일차생산 등 생태계 영향, 고정형 인공구조물 설치시 서식지 훼손 등의 문제 발생.

## □ 해양국토 e-Governance 실현

- 해양국토 조사체계 통합성 및 전문성 제고
  - － 해양 생물자원, 환경자료와 자원 조사 등 해양국토 조사활동 및 자료간 연계를 통해 통합성 확보
- 기후변화 대응과 해양영토 주권의 상징성 확보를 위해 외해 관측기지 확대
  - － 운영 중인 이어도 해양과학기지, 가거도(2009년), 백령도(2012년) 등 해양관측기지 외 3개 해면 외곽지역에 관측기지 추가 설치
- 연안실태조사, 해양생태계조사, 해안조사, 무인도서 실태조사, 갯벌조사, 해양환경조사, 수산업 계통조사, 수산관측, 항만해운현황 조사 등을 체계적으로 시행
  - － 5년 단위 연안통합관리계획 수립을 위해 전국 실태조사 수행, 연안오염총량관리 시행의 과학적 검토 제도화 등 추진
- 해양국토 관리 정보시스템의 사용자 범위 확대를 위한 실용정보시스템 구축
  - － 현재 운영 중인 국가해양환경통합정보시스템(MEIS)<sup>49)</sup>, 연안관리정보시스템(CMIS)<sup>50)</sup>의 이용자 확대 및 국민의 일상생활에 유용한 정보 시스템 구축

## □ 국제사회 위상 제고와 국제협력 강화

- 국제사회 해양환경 보전의무 부담 증가에 따른 협약 수용 기반 확보
  - － 국제협약의 국내 수용을 위한 기술적·재정적·사회적·제도적 기반 확보
- 기후변화 및 해양환경 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적 협력체제에 적극 참여
  - － 국제기구 지역해 관리프로그램인 북서태평양보전실천계획(NOWPAP), 동아시아해역 환경관리기구(PEMSEA), 황해광역생태계(YSLME), 동아시아 지역해 해역조정기구(COBSEA) 활동 등 지역해 차원 해양환경 보전 협력 강화
  - － 유엔 세계해양환경평가 정규과정(UN Regular Process), 육상활동으로부터 해양환경 보호를 위한 범지구적 실천계획(Global Programme of Action for the Protection of the Marine Environment from Land-based Activities), APEC 해양분야 협력 등 전지구적 차원의 해양환경 국제협력 지속 추진

49) MEIS : Marine Environmental Information Service Center.

50) CMIS : Coastal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

## 제6장 초국경적 국토경영 기반 구축

### 1. 현황과 문제점

#### □ 남북 분단 지속으로 국제 육상교통망 연계 곤란

- 지정학적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대륙과의 육상교통로 연결을 위한 체계적인 전략과 협력 기반이 미흡
  - 아시안 하이웨이 연결, TSR, TMGR 등과 TKR의 연계, 러시아 사할린 천연가스 및 전력 도입 등을 위한 북한과의 협력 및 주변 국가와의 공조체계 구축 미흡

#### □ 남북 경제협력을 위한 안정적인 교류 여건 및 기반 미성숙

- 정치·군사적 여건변화에 따른 사업 중단 위험성과 같은 대북 진출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지원제도 등 제도적 장치가 미흡한 상태
- 접경지역의 평화 증진 및 군사적 긴장관계 완화를 위한 비무장지대 및 접경지역의 교류·협력 사업 추진을 위한 여건 미성숙
  - 비무장지대 및 접경지역의 미개간 토지 개발과 남북 공유하천의 공동이용 등을 위한 실태조사 등 미흡

#### □ 한반도의 지정학적 이점을 활용한 글로벌 교통거점 개발 미흡

- 유라시아-태평양을 잇는 관문(Gateway)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지정학적 위치와 국제교통망 여건을 구비하고 있으나, 이를 활용한 글로벌 교통거점 개발은 미흡
  - 대내외 항공 인프라 및 연계망 구축이 미흡하며, 중국 및 일본 등에 비해 대외교역을 위한 항만 정비가 미흡
  - 한반도와 아프리카, 남미 등을 연계하기 위한 중간 항공 기착지 개발 및 항로 개척 미흡



## 2. 여건변화 전망

### □ 동북아 지역의 성장 및 교류·협력 증대 전망

- 동북아 지역이 EU, NAFTA와 함께 세계 3대 경제권을 형성할 전망
  - 2007년 주요 경제권 규모는 유럽권(EU) 12조 3000억 달러, 북미권 13조 4000억 달러, 한·중·일 10조 9000억 달러로 동북아 지역이 세계 3대 경제권으로 성장
  - 세계 경제의 추진동력으로 동북아의 역할이 증대함에 따라 EU, NAFTA와 같은 동북아 역내 협력 추진체계 형성 필요성이 증대될 전망
- 유라시아-태평양 시대에 대비하여 항만 및 공항 정비에 대한 요구가 증가할 전망
  - 향후 동북아 국가간 항공 자유화뿐만 아니라 아시아, 아프리카, 남미 등지에 대외교통거점 조성 요구가 증가할 전망

### □ 국격 향상으로 인한 실질적 유라시아-태평양 시대 개막

- 2010년 G20 정상회의 개최, OECD 개발원조위원회 가입 등으로 국격 및 국가 위상이 제고되고 우리나라가 글로벌 균형성장의 주역으로 등장
  - 우리나라를 비롯한 G20 국가가 G7을 대체하는 새로운 세계경제 협의체로 부상할 전망
  - 2009년 UAE에 원자력 발전시설을 수출함으로써 경제적 효과와 한국형 원자력 발전의 경쟁력을 대외적으로 인정받는 효과를 유발
  - 2010년 OECD 개발원조위원회 가입과 함께 선진공여국으로 지위가 격상됨에 따라 국가 위상이 제고되고 글로벌 균형성장에 대한 의무도 증가

### □ 여건변화에 따라 남북간 교류·협력 증대 기회 상존

- 단기적으로 북한 핵문제로 인한 남북간 긴장관계가 예상되나 교류·협력은 지속될 전망
  - 미국-북한간 상호신뢰 구축 및 6자 회담의 발전적 진전시 주변 강대국들의 지원 및 협조 가능
  - 북한의 개방정책 추진시 남북한 교류·협력의 확대 가능

### 3. 추진과제

#### (1) 남북한 교류협력 확대에 대비한 기반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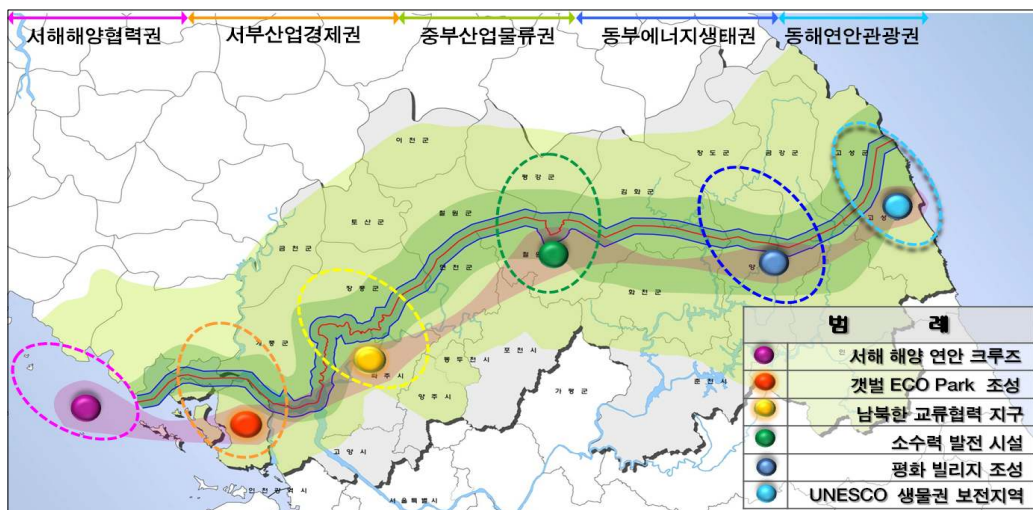
##### □ 남북한 교류협력의 단계적 추진

- 남북한 교류협력을 위한 기반 구축 및 관련 사업들은 남북관계의 진전과 국내외 정치·경제적 여건 등을 감안하여 단계적으로 추진
- 기반조성기, 교류확대기, 교류정착기 등 3단계로 접근하되, 우선은 접경벨트를 중심으로 남북 교류협력 가시화에 대비한 기반을 구축하는데 주력
- 이외에 남북한 접경지역 공동관리, 평화지대 구축, 북한자원 공동개발 및 인프라 지원 등은 향후 남북간 긴장 완화와 협력 분위기 조성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검토

##### □ 접경벨트 발전종합계획 수립

- 접경지역의 체계적 관리 및 남북한 평화적인 교류협력을 위하여 남북교류·접경벨트의 종합적인 발전계획 수립
  - 남북관계 진전추이에 따라 접경벨트에 남북한 교류협력지구를 조성하여 향후 남북교류 협력의 전진기지화 및 접경지역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방안 강구
  - DMZ 인근의 안보·생태환경 체험관광을 위해 접경지역내 핵심 거점지역 중심의 평화누리길을 조성하고 인접 시·군간 연계를 위한 동서녹색평화도로 조성 등으로 접경지역간 교류 활성화 추진

<그림 III-23> 남북교류·접경벨트 종합관리계획(안)



## □ 남북관계 진전에 대비한 협력과제 강구

### ◦ 접경지역의 남북 협력사업 추진 및 생태환경 보전

- 동부지역의 녹색산업(GT: Green Technology), DMZ를 활용한 중부지역의 MICE산업(Meeting, Incentive, Conference, Exhibition), 한강하구 유역의 서해지역 남북경제협력사업 등 육성방안 모색
- 남북간 환경협력 협약 체결을 통한 DMZ 생태계 공동조사, 생물권보전지역 지정, 생태공원 조성 등의 국토환경관리계획 수립 및 DMZ 생태계 및 생물종 복원 등을 추진
- 우선 DMZ 남측지역 일원을 대상으로 유네스코 자연유산 및 생물권보전지역, 자연유산 등록, 생태공원 조성 및 보호지역 지정 등을 추진하여 남북간 환경협력 기반 구축
- 해양자원 개발, 수산 증양식, 항만 운영, 해양환경 보전, 해양에너지 분야의 과학기술 협력, 한반도 연안의 지속가능발전과 생물주권 확보 등을 위한 해양보호구역 네트워크 추진

### ◦ 남북한 교류·협력 증진을 위한 접경지역 평화지대 구축

- 민간인통제선 해제지역과 기존 접경지역의 전략적 개발을 위하여 평화지대를 구축하고 미개발 토지의 계획적 관리 및 보전대책을 수립하여 남북한 교류협력 증진 도모
- 평화지대는 군사정전협정의 군사적 특성, 해양 및 수역 등의 지형적 특성, 기존산업 및 신성장산업의 경제적 특성, 교통망·생활권의 인문사회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권역별로 개발방향 모색
- 서해상 평화 정착을 위한 남북협력방안 강구 등

### ◦ 남북한 수자원 모니터링 체계 구축

- 북한 접경지역의 기존 댐 정비 및 유역 공동조사를 통해 홍수기에 남쪽 접경지역에서 발생하는 수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한 홍수 방지시스템 구축
- 남북한 비무장지대 및 접경지역의 남북한 하천유량 정보를 수집 관리하는 공동 자연재해 대책반을 구성·운영하는 방안 검토

### ◦ 북한의 전력·교통·물류시설 등 산업 인프라시설 개발을 지원하는 대신 북한의 경제성 있는 지하광물의 남북한 공동개발을 통해 저렴한 산업자원을 확보

- 북한 광물자원에 대한 남한의 민간투자를 활성화하여 희귀자원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하고 이를 운송하기 위한 철도·도로 등 사회기반시설 구축

### ◦ 북한의 낙후된 상·하수도 시설과 노후 주택 등을 정비하기 위한 건설 물자 및 기술 지원 등

## (2) 유라시아-태평양 협력 기반 강화

### □ 해양시대와 대륙시대를 함께 여는 글로벌 교통물류 관문국가 도약

- 유라시아-태평양 지역의 단일교통 및 물류시장화에 대비하여 교통물류 관문국가로 도약할 수 있도록 물류네트워크 구축
  - 1단계 협력제도화 기반 조성 : 한·중·일·러 + ASEAN 등 동북아 + ASEAN 교통장관 회의 설치 및 정례화
  - 2단계 교통물류협력 본격화 : 한반도 철도망과 TCR, TSR 연결·운영 활성화를 위한 물리적·제도적 장애요인 제거
  - 3단계 단일시장 활성화 : 통합 교통물류시장으로 완전 이행
- 동북아 및 ASEAN 주요 거점과 연계를 강화하는 한·중·일 복합수송체계(철도·해운·육상 연계) 등 국제 운송네트워크를 구축
- 아시안 하이웨이의 결손부분인 북한지역 연결 및 유럽 국제도로망 연결을 위한 당사국간 실질협력 추진

<그림 III-24> 아시안 하이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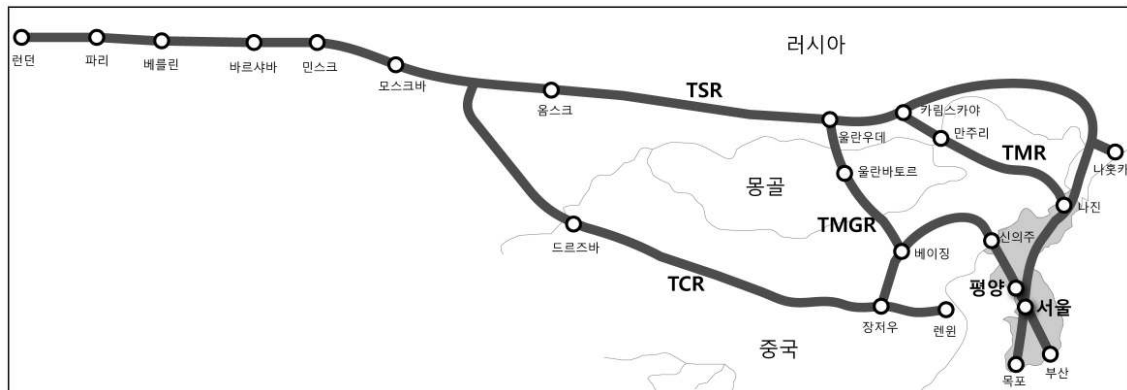


자료 : UNESCAP 홈페이지(<http://www.unescap.org>) 자료를 참조하여 일부 수정.

- 한반도를 중심으로 TCR, TSR과 연결되어 아시아·유럽 대륙으로 진출을 확대할 수 있도록 국제철도의 수송 기반 구축

- 한반도가 유라시아 철도망의 기·중점 역할을 수행하는 한편, 유라시아와 태평양을 연결하는 복합운송 물류거점으로 발전 추진
- 평라선(간리~나진), 경의선(개성~신의주) 등 노후화된 북한 철도의 현대화 및 시설·운영기준·용어 통일 등 연결사업 추진
- 남·북·러·중 철도 협력 강화, 국제철도협력기구(OSJD) 가입 등 당사국간 실질협력 강화

<그림 III-25> 철도의 동북아 및 유라시아 확장 구상



- 항공자유화 확대 등을 통한 5대양 6대주 운항 글로벌 항공 네트워크 구축
  - 인천공항 3단계 확장 등을 추진함으로써 증가하는 수요에 대응하고 유라시아 항공허브 전략을 수행
  - 자원이 풍부한 아프리카, 중남미, 중앙아시아 국가와의 자원외교 지원 등을 위해 동 지역 국가와의 여객 및 화물 노선망의 구축 및 운항 확대를 추진
  - 중국에 이어 우리나라 제2의 교역 상대국으로 최근 한·EU FTA 합의에 따른 양측간 경제·통상분야 협력 및 인적 교류의 확대를 지원할 수 있도록 자유화를 추진
  - 전통적인 관광지역으로서 항공잠재력을 보유하고 있고 2015년까지 역내 자유화가 달성될시 북미, EU 등과 같은 거대 항공시장 형성이 전망되는 ASEAN과도 자유화 추진
- 아시아 항공시장 주도를 위한 동북아 통합항공시장 구축 추진
  - 한·중·일 통합항공시장 구축 기반 마련을 위해 한·중, 한·일 항공협력회의 및 한·중·일 항공자유화 심포지엄 등을 통해 논의 주도
  - 이와 병행, 중국, 일본과의 개별적 항공회담을 통해 한·중·일 통합항공시장 구축 기반 마련
  - 한·중·일 통합항공시장을 동북아 통합항공시장으로 확대·발전시키기 위해 기타 동북아 국가들과의 네트워크 확대

<그림 III-26> 유라시아·태평양 시대의 국제 항공네트워크 확대 노선망



## □ 초국경적 지역개발 관련 국제협력 강화

- 동북아+ASEAN 생산 분업화에 의한 글로벌 생산네트워크 정착 추진
  - 서해 경제자유구역을 IT산업 완제품 및 부품분야에서 중국의 동해안 제조업 기지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정비
  - 남해안 경제자유구역 등은 요소생산성이 우수한 ASEAN 국가와의 경쟁을 위한 부품제조업 기지로 정비
  - 동남권은 고부가가치성 부품산업 등이 발달한 일본의 부품산업 유치, 인재교류 사업 실시
  - 글로벌 기업의 헤드쿼터 기능, 연구개발, 설계, 디자인, 마케팅 등 가치사슬의 상위부분 유치와 요소생산성이 우수한 중국 및 ASEAN 등에 제조업 현지화를 추진
- 동북아+ASEAN 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소권역별 협력 추진
  - 환황해권에서는 서해안 신산업벨트와 연계하여 산업 환경을 재정비하고 중국 및 ASEAN 제조업과의 분업 협력 추진
  - 환동해권에서는 동해안 에너지·관광벨트와 연계하여 러시아 천연가스 도입을 추진하며, 남만로드 조성 등 관광기반 환경을 조성
  - 한일해협권에서는 동남권의 제조업과 큐슈지역의 협력관계를 공고히 하고, 남해안 선벨트와의 관광 협력, 광양과 부산항의 물류 협력을 추진

- 유라시아-태평양 협력거점 개발을 위한 글로벌 도시간 협력 강화
  - 중앙정부가 글로벌 도시간 연계·협력 분야 선정 및 프로그램 개발을 지원하여 초국경적 도시협력의 실질적 성과 도출
  - 도시권의 독자적 정책역량을 강화하여 개방화·지방화로 대표되는 글로벌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함으로써 도시간 국제협력수준 제고
  - 기존 도시간 국제협의체인 동아시아경제발전협의체(OEAED: the Organization of East Asia for Economic Development)가 실질적 도시간 협력 추진체제로 기능할 수 있도록 동아시아 공동 도시개발 등 협력 사업 발굴
  - 국외에 글로벌 항만 및 공항 조성·정비 등을 통해 글로벌 교통협력 거점 마련을 추진하고 도시간 연계를 강화
- G20 서울정상회의 개발의제 실천을 통한 글로벌 연성국토<sup>51)</sup> 개척
  - 저개발 국가가 많으면서 G20 개발의제<sup>52)</sup> 정신이 구현되는 지역인 아프리카, 아시아, 중남미 지역을 개발의제 실천 우선지역으로 선정하여 인프라 등 국토개발사업 지원 추진
  - 한국형 국토개발 지원모형을 구축하고 국제사회와 공감대를 이룰 수 있는 프로젝트에 우선 투자하여 저소득국가 개발을 지원하고 국격 향상 실현
- 한국형 도시개발 수출을 통한 글로벌 협력거점 마련
  - 고속철도, 원자력발전소, 한국형 첨단그린도시, 산업단지, 고속도로, 물 관리 기술 등의 건설 경험을 전세계에 수출하는 동시에 해외 자원개발 참여를 강화하여 에너지 및 지하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
  - 국토의 세계적 네트워크를 통해 해외로부터 새로운 기회를 포착하고 국익 창출로 연결
  - 개발도상국의 도시 수요에 부응하고 우리 신성장동력으로서 도시를 수출하기 위해 민간 협력을 통한 해외 도시개발 촉진 방안을 마련

51) 연성국토(Soft Space)란 국토의 물리적 영역에 국한된 경성국토(Hard Space)의 개념을 벗어나 국경선을 초월하여 사람들과 기업들이 국제 정치·경제·문화 등의 분야에서 글로벌하게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지구촌에서 실제로 활동하는 모든 공간과 활동무대를 의미함.

52) G20 서울정상회의 의제는 기존 G20 정상회의를 거치면서 논의가 진행 중인 ‘거시경제정책 공조’, ‘금융 규제 개혁’, ‘국제금융기구 개편’ 등 기존 의제와 ‘개발’, ‘글로벌 금융안전망’ 등 우리나라가 새로 제시한 이슈로 구성됨. 이 중 ‘개발’ 의제는 개발도상국의 빈곤 및 개발격차 해소에 관한 것으로, ‘단순 재정 원조를 넘어 개발도상국의 능력배양(Capacity Building)을 통한 자생력 확충’을 새로운 원칙으로 제시함으로써 개발도상국의 개발 문제가 지속적으로 논의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됨.

## □ ‘유라시아개발공동체’ 구축을 위한 교통인프라 협력

- 한반도중단철도(TKR)와 대륙철도 연계사업 및 대륙간 하이웨이 구축사업을 통해 ‘유라시아개발공동체’ 형성의 토대 구축
  - TSR, TCR 등의 정비를 통한 노선 구축 및 부산-모스크바를 연결하는 아시안 하이웨이 (Asian Highway) 6번 노선 개발을 통한 유라시아 물류 기반 구축
- 중국, 러시아, 일본을 연계한 환황해·환동해 해양관광권 구축을 위한 해양크루즈를 개발하여 DMZ를 중심으로 한 내륙·해양 세계평화 관광네트워크 구축



## 제4편 집행 및 관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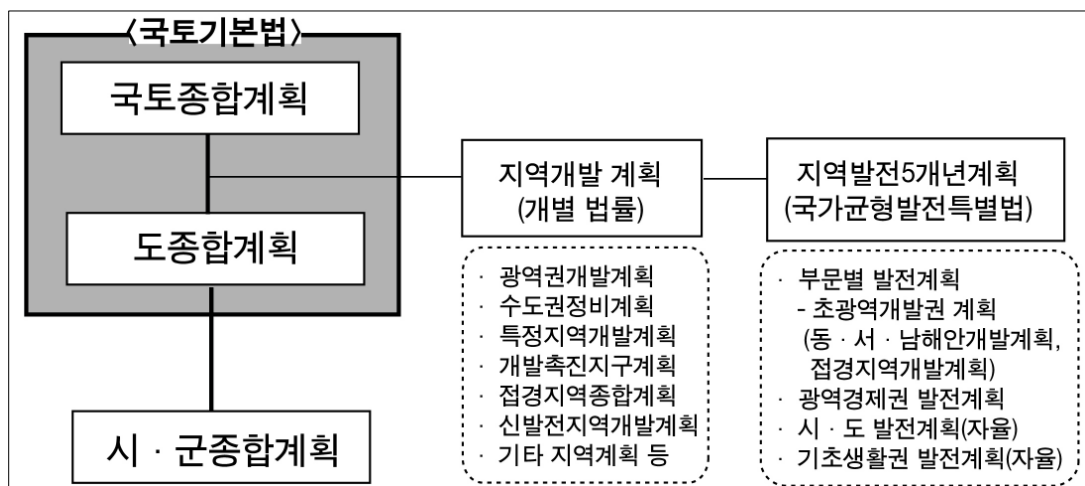


## 1. 현황과 문제점

### □ 대규모 국책사업 및 지역개발계획의 중복·과잉

- 국가가 시행하는 대규모 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국토의 수용능력 및 실수요에 대한 면밀한 검토 부족으로 중복·과잉사업 추진 문제 부각
  - 신도시, 산업단지, 혁신·기업도시, 경제자유구역, 택지개발 등 대규모 개발사업이 동시다발적으로 추진되고 있어 지역간 상호경쟁 및 과다 공급, 환경 훼손 등의 우려가 제기
- 부처별로 개별법에 따라 유사·중복된 지역개발계획을 수립하여 효율성이 저하되고, 계획간 상호연계가 미흡하고 정합성도 저하된 상태
  - 현재 12개 부처·청이 49개 법률에 의거, 110여종의 지역개발계획을 소관(기능)별로 수립·시행 중이나 계획간 조정 체계 구축 미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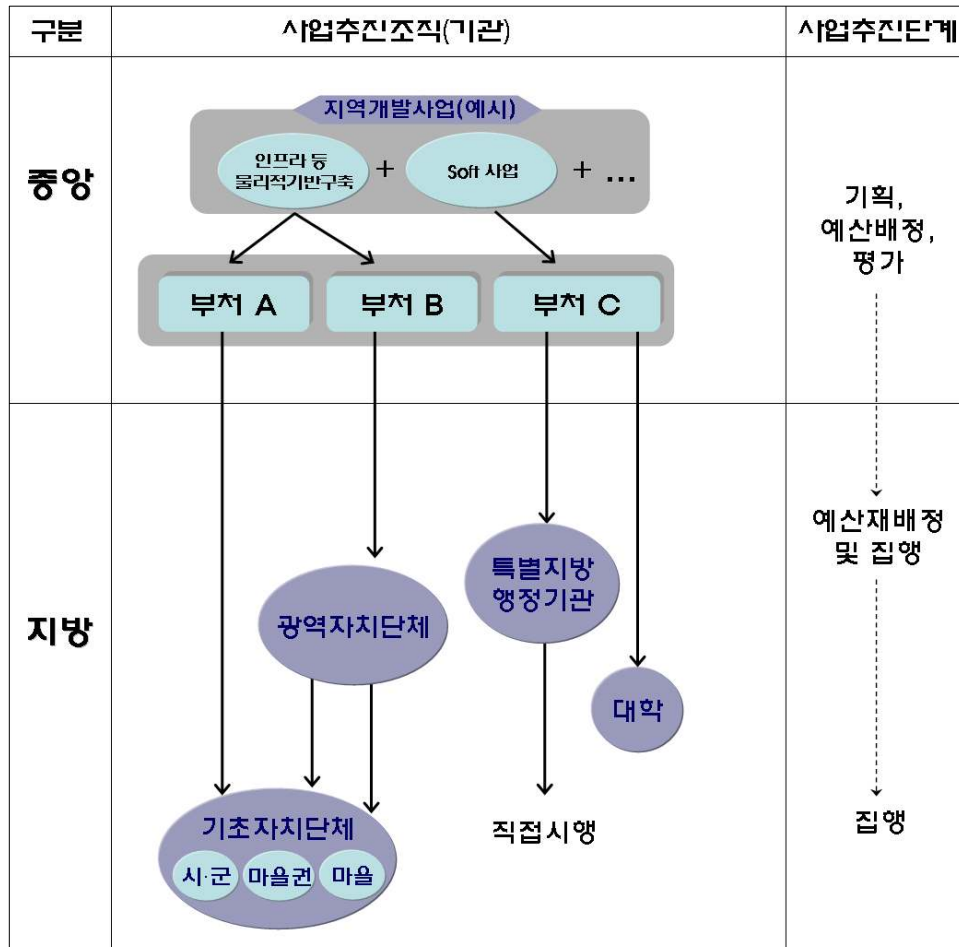
<그림 IV-1> 현행 국토계획 및 지역발전계획 체계



### □ 중앙정부 주도적 사업 추진체계가 연계·협력효과 창출 한계

- 현행 지역개발사업 추진체계가 중앙정부 주도의 하향식·중층적 구조를 취하고 있어 사업간 연계나 지역단위의 통합적 효과 창출 한계
  - 부처별로 주관사업을 직접 혹은 위탁하여 수행하는 수직적인 구조를 보유할 뿐만 아니라, 회계간 진출입이 곤란하여 사업간 연계 및 협력효과 도모 한계
  - 최근 단일 행정구역을 탈피한 광역경제권 개발전략 추진을 위한 연계·협력사업 발굴 및 예산 지원조치 등을 취하고는 있으나, 전반적인 예산 운용 및 사업추진체계 변화를 전제로 하므로 향후 지속적인 제도 개선 추진 필요

<그림 IV-2> 지역개발사업의 하향식·중층적 추진구조 개념도



- 중앙정부 지역실행조직을 지역에 개별적으로 설치하여 중앙정부의 지역업무를 직접 실행함에 따라 기능 중복 및 지역의 특성적 수요반영 곤란
  - 특별지방행정기관은 중앙정부의 지역개발사업 집행·관리업무를 주로 수행함에 따라 광역자치단체 업무와 중복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여 조직 통·폐합에 대한 지적이 제기
  - 특별지방행정기관 정비에 있어서 중앙정부 기능의 지역화(regionalization)와 지역단위의 통합적인 중앙정부 업무수행이 가능하도록 지속적인 정비 필요
- 지역개발사업 추진조직의 다기화와 분절적 운영으로 사업간 연계성 미흡 및 유사·중복사업 발생 등으로 비효율성 초래 지적
  - 사업간 및 지역단위 연계성 및 통합효과를 도모하고자 최근 일부 지역개발사업을 대상으로 사업군 및 포괄적 예산제도를 도입·운영 확대 노력
  - 현재 부분적으로 제도개편이 이루어지고는 있으나, 가시적인 성과를 기대하기 위해서는 추진체계, 예산 운영체계 등에 있어서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

## □ 지역개발사업 예산 운용의 자율성 저조

- 우리나라의 세출 분권비율은 40.6%(OECD 평균 33.5%)로 높은 편이나, 지방재정 규모나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성을 갖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재정 여건은 충분히 개선되지 않는 실정
  - 1995~2008년간 국가재정 규모는 2.88배 증가한데 비해 지방재정 규모는 2.68배 증가하여 국가재정과 지방재정의 비중 구조는 악화
  - 지자체 세출 측면의 자율성을 나타내는 자체사업 비중은 2007년 기준 40.7%에 불과하여 오히려 지자체의 재정적인 자율성이 저하
  - 지방의 자주적 재원으로 재정분권 정도를 나타내는 지방세 수입은 1995~2008년 기간 동안 2.84배 증가한데 비해 국세는 3.28배가 증가해 조세 수입 측면에서 재정 분권화가 저조
- 최근 지방소비세, 지방소득세를 도입하여 지방의 자주적인 재원을 확충하고, 광역·지역특별회계에 포괄보조금 제도를 도입하여 지자체의 예산 운용 자율성을 확대
  - 지방소비세 도입으로 지속적인 하락추세인 지방의 재정자립도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며, 지방세중 소득·소비과세 비중이 확대되어 지방 재정구조 개선 기대
  - 지방소득세는 2010년부터 소득할 주민세를 전환하여 한시적으로 운영 예정으로, 자치단체의 실질적인 과세자주권을 보장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예상
  - 부처별로 유사·중복된 기초생활권 사업의 효율적인 예산 지원과 지자체의 예산 자율편성권을 확대하기 위해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에 포괄보조금 제도를 도입
- 국토 및 지역개발 투자재원 운용에 있어서 중앙정부 및 광역·기초자치단체간 역할 분담이 명확치 않아 예산 운용에 있어서 비효율성 초래 소지는 여전
  - 국토 및 지역개발 투자재원 운용에 있어서 연계 및 사전 조정기능을 강화하여 사업효과를 극대화하고, 정부계층 간의 역할분담 명확화를 위해 제도 개선 필요

## □ 국토 개발을 위한 다양한 투자재원 부족

- 부족한 인프라 투자재원의 조달 수단이 대부분 민간투자에 의존하는 구조로 형성되어 다양한 재원조달 방식 미흡
  - 재정사업의 경우 예산 여건에 따라 공기지연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민간투자는 시장환경에 영향을 받음으로서 안정적인 재원조달 곤란
  - 민간투자의 확대는 장기적으로 재정부담을 초래하므로 적정관리 방안 마련 필요

<표 IV-1> 민간투자에 따른 재정부담 규모 전망

(단위 : 조원)

연 도	BTO 사업규모 (A)	재정 유발율 (B)	BTO 재정부담 (C=A x B)	BTL 재정부담 (D)	재정부담 (E=C+D)	예산 순계의 2% (F)	재정 여력 (G=F-E)
2008년	5.9	0.81	4.8	0.1	4.9	5.8	0.9
2009년	6.8	0.68	4.6	0.2	4.8	6.1	1.3
2010년	7.1	0.68	4.8	0.8	5.6	6.5	0.9
2011년	7.4	0.67	5.0	1.3	6.	6.9	0.6
2012년	7.9	0.60	4.7	2	6.7	7.3	0.6
2013년	8.2	0.52	4.3	3	7.3	7.8	0.5
2014년	8.8	0.51	4.5	3.75	8.3	8.2	0.0
2015년	9.5	0.57	5.4	4.3	9.7	8.7	-1.0
2016년	9.9	0.62	6.1	5	11.1	9.3	-1.8
합 계	71.4	-	44.2	20.5	64.7	66.7	2.0

자료 : 기획예산처, 2007. 「2007~2011년 국가재정운용계획-민간투자 분야 공개토론회 자료」.

## □ 국토 기반시설 투자재원의 안정성 미흡

- 복지재정 지출의 증가 추세 등으로 인프라재정 비중은 지속적으로 하락
  - 국가재정운용계획의 SOC 지출 비중은 2004년 13.8%에서 2012년 8.0%로 크게 낮아졌고, 장기적으로 이러한 추세는 지속될 전망
- 그 동안 안정적인 인프라 재원 조달에 큰 역할을 담당했던 교통시설특별회계가 폐지될 예정으로 재원 조달의 안정성은 크게 약화될 전망
  - 교통에너지환경세의 과세시한 만료(2012년 12월 31일)에 따라 교통시설특별회계가 폐지되는 경우 SOC 예산도 일반회계를 통해 다른 예산과의 경쟁을 통하여 예산을 배정할 계획

## 2. 여건변화 전망

### □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대응하여 광역화·연성화 요구 증대

- 경제의 글로벌화에 따라 지역과 지역이 직접 경쟁하는 장소경쟁체제로 전환하는 한편, 생활·생산 공간의 광역화 및 연성화 증대
- 지방의 창의성을 살리고 지역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중앙정부 기능의 지역화와 지방 분권화에 대한 요구 증대
  - － 세계 각국들은 중앙정부 기능의 효율적인 수행체계(Delivery System) 구축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광역화와 지방 분권화 동시 추진
- 행정구역 단위의 소규모 분산투자에서 광역화와 네트워크화를 통해 규모의 경제, 집적의 경제 추구
  - － 정부는 전국을 5+2 광역경제권 단위로 육성하는 ‘광역경제권 육성전략’을 통해 광역적 지역 단위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노력

### □ 지역 통합성 증진을 위해 예산·추진체계 등의 효율화 요구 증대

- OECD 국가들에서는 지역을 분절화된 사회기능과 복잡한 사회·경제문제의 해결을 위한 통합기제로 인식하는 경향 증대
  - － 지역개발사업 추진에 있어서 부문별 접근방식에서 지역기반의 통합적 접근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및 시범사업 추진 강화
  - － 지역개발사업의 효율적·효과적 추진을 위해 조직·추진체계 및 예산 운영 측면에서 지역개발사업 추진과정의 파트너십과 통합 지원 프로그램을 강화하는 추세

### □ 지역개발 추진주체간 협력적 거버넌스와 참여 중시

- 분권화에 대한 요구가 증대하면서 중앙-지방정부간 협력관계 구축의 필요성이 증대
  - － EU와 같은 초국가적 조직 및 민간부문 등과의 협력과 파트너십을 중시하는 다원적 거버넌스(MLG: Multi-Level Governance)<sup>53)</sup>에 대한 논의와 정책화 노력이 증대
  - － 지역개발 추진체계의 효율화 요구 및 중앙정부의 역할 변화, 이해당사자의 참여 중시 등으로 협력적·다원적 거버넌스 운용 증대

53)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지방정부 상호간, 정부와 지역사회 등 복수의 정치적 계층이 관련된 관계유형을 총칭.

- 국토 및 지역개발사업 추진을 둘러싼 갈등이 심화됨에 따라,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사회적 합의 형성 및 사회 통합 증진에 대한 요구 증대
  - 광역행정의 수요 증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갈등 해결을 위해 사업초기 단계부터 이해관계자들을 참여시키는 협력적 거버넌스 운용 증대
  - 경제성장 과정에서 발생하는 계층간·지역간 격차의 완화를 위해 사회적 통합에 대한 요구가 증대

<표 IV-2> 민선 이후 지자체 및 중앙-지방간 분쟁 발생 추이

연도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계
건수	10	27	16	15	22	18	9	21	11	7	19	14	10	216

자료 : 국가균형발전위원회. 2008.



### 3. 추진과제

#### □ 국토 개발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개발시스템의 개편

- 저성장시대에 대비하여 엄격한 사업성 평가에 기초한 지역개발사업 추진
  - 국고 지원사업에 대해 성과제도와 연계한 지역별 예산지원 시스템 도입으로 지역개발사업 남발 방지방안 마련
  - 타 지역에서 추진되는 사업과 유사·중복되는 사업 추진시 엄격한 사전 검증장치 마련, 선택과 집중을 통한 사업성 제고시 인센티브 부여 등 사업성에 기초한 사업 추진 촉진
  - 수요를 초과하는 과도한 개발사업 추진 방지를 위해 대규모 개발사업 검증시스템을 구축하고 사업 추진방식을 민간주도 체제로 전환
- 광역경제권의 글로벌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반시설 투자에 선택과 집중
  - 광역경제권, 초광역개발권 등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는 광역적 기반시설 투자에 집중
- ‘중앙배분·중앙의존적’ 방식에서 ‘지역·민간주도’ 방식으로 전환
  - 중앙부처는 국가적 해결이 필요한 사업에 집중하고, 지역개발사업은 지역에서 발굴하여 주도적으로 입안·추진
- 지역간 경쟁 및 사업성 검증을 거친 사업에 대해 중앙-지자체간 협약을 체결하여 예산 지원·규제 특례·제도 개선 등 맞춤형·포괄적 지원을 하는 제도 도입
- 민간 투자자가 신속하게 적기에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저비용·고효율의 지역 개발체제 구축
  - 사업계획의 수립 및 인허가 통합서비스 체제 마련, 사업부지 확보와 조성·공급 관련 규제 대폭 완화, 자금조달 지원을 위한 지역개발 금융제도 확충
- 유사·중복된 국토·지역계획 및 개발사업을 정비하여 계획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국토공간과 관련된 계획 간의 정합성을 확보
  - 유사·중복된 국토·지역계획의 통폐합과 함께 지구·지역이 공간적으로 중첩되거나 사업내용이 유사한 지역개발사업 통폐합을 추진
  - 정책적·지침적 성격을 갖는 국토 관련 중장기 계획 수립시 국토기본법상 국토관리 기본이념에 부합하는지를 사전에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국토계획 평가제도를 도입하고 사후 모니터링도 강화

- 유지관리 투자 증대를 통해 기존 시설의 기능 및 내구성을 강화하여 신규 투자재원을 절약
  - 신기술(IT, BT, NT등)을 이용한 기반시설의 모니터링, 수질 개선, 신소재를 활용한 내구성 증대 등 유지관리 단계의 투자 확대
- 사후관리 평가시스템의 확립을 통한 투자효율의 극대화
  - 사후관리시스템을 확립하여 정책효과의 검증뿐만 아니라 공급과정에서의 비용검토시스템을 도입하고, 이를 다시 계획단계로 환류하여 투자효율을 제고

## □ 중앙정부 기능의 지역화 및 분권화와 지역간 다원적·협력적 지역발전 지원

- 지방의 자율적·창의적 역량 기반 구축을 위해 중앙-지방의 역할 명확화
  - 중앙정부 부처간, 중앙-지방간, 지방정부 수준의 추진조직 정비와 연계·협력 강화를 위한 추진체계 정비
- 중앙정부 권한 및 기능의 지방 이양, 그리고 정책공간의 광역화에 따른 효과성·효율성 증진을 위해 통합적 지역개발 추진체계 구축
  - 중앙정부 기능의 지역화 촉진을 위해 중앙정부 지역실행조직의 개편 및 지역단위 협력체계 강화
  - 규모의 경제, 네트워크 경제성 구현을 위한 광역경제권 육성전략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지역개발 추진체계 지속 정비
- 지자체간 다원적·협력적 지역발전 거버넌스 촉진
- 광역경제권 단위에서 규모의 경제성 및 네트워크 경제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지역간 연계 및 협력 촉진사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확대

## □ 지역개발 예산의 자율성 확대 및 성과주의 강화

- 지역개발 재정 운용의 자율성 증대로 실질적인 지방분권 촉진을 위해 포괄적 지방 재정시스템으로 개편 검토
- 예산 투입실적이 아니라 성과목표 달성에 입각하여 지역별 사업 전체에 대한 총괄평가 제도를 도입하는 등 계획의 환류 기능 강화

## □ 사회적 합의 형성 기반 강화로 국토 관리 통합성 제고

- 국토계획 집행과정의 투명성, 사회적 형평성,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제고하여 갈등과 분쟁의 사전 예방에 중점
  - 갈등과 분쟁이 예상되는 정책 결정과정에 당사자들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
  - 집행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은 당사자 간의 자율적인 해결을 기본으로 하되, 갈등 조정 및 사회통합 촉진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강구
- 국민의 개발과 보전에 대한 균형있는 시각 함양, 지역이기주의 극복, 영토의식 고취 등을 위해 국토교육 활성화 추진
  - 국토기본법을 개정하여 국토교육기본계획 수립, 국토교육센터 지정 및 예산 지원 등 국토 교육 활성화를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 강화

## □ 정부재정 조달방식의 다양화

-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채 발행제도를 개선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인프라 재정력 제고
  - 지방채는 상하수도, 교통시설, 공공체육시설 등 수익성이 확보될 수 있는 시설을 대상으로 하되, 지방채 운영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지방채 총량규모를 설정
  - 기금 등 정부재정자금과 시장공모를 통하여 지방채 인수를 확대하고 공모채 인수에 대한 세제상 혜택을 강화
  - 이를 위해 미국의 지방채은행이나 일본의 지방금융금고와 같은 지방채 인수 전담 금융기관의 설립 검토
- 외국자본의 국토개발사업 참여 확대
  - 외국법인의 민자사업 참여 활성화를 위한 홍보를 강화하여 사회간접자본시설 투자에도 외국자본 적극 유치
  - 외국법인과 국내법인의 민자사업 공동참여를 활성화하고, 특히 관광시설, 산업단지 등을 포함한 국토개발사업 전반에 참여 유도
- 토지은행(Land Bank)의 활용
  - SOC, 산업용지 등 공공개발용지를 원활하고 저렴하게 공급하기 위하여 예산제약의 범위 내에서 공공용지 비축의 지속적 확대

## □ 재원분담 원칙의 명확화

- 중앙과 지방간 재원분담 원칙 명확화를 통한 재원분담 체계를 구축
  - 재원분담 방식에 대한 법적 뒷받침 및 근거가 미약하여 중앙과 지자체간 갈등이 발생하거나 및 사업이 지연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재원분담체계 구축
  - 각 시설별 편익의 발생 범위를 기준으로 중앙과 지방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궁극적으로 SOC 시설의 공급자가 아닌 최종 비용부담자를 기준으로 수익자와 부담자를 연계
- 지방정부간 비용분담 문제는 비용과 편익 또는 피해의 부담주체가 괴리되지 않도록 다양한 원칙을 적용한 분담모형 강구
  - 비용분담 원칙은 오염자부담원칙, 수익자부담원칙, 사용자부담원칙, 능력에 따른 부담원칙, 기여도 또는 피해도에 따른 분담의 원칙, 공동부담의 원칙 등 다양함
  - 이해당사자 간의 자발적 협상을 유도하기 위한 조정기능을 강화하고, 중장기적으로 다양한 유형에 따라 다양한 원칙들을 결합한 분담모형을 설정
- 공공요금의 수익자 부담을 강화하여 투자재원을 확보하고, 가격을 통한 수요 조절 기능을 수행하며 자원 배분의 왜곡을 시정
  - 공공요금정책은 거시적인 물가차원 외에도 국토개발 투자정책 차원에서 검토하는 방향으로 추진
- 지나치게 다양한 기존의 수수료 및 사용료 체계를 단순화시키고, 원가분석을 통해 공공요금 수준을 재조정

## 제5편 권역별 발전방향

---

제1장 수도권

제2장 충청권

제3장 호남권

제4장 대경권

제5장 동남권

제6장 강원권

제7장 제주권



## 제1장 수도권

### 가. 권역의 비전 및 기본목표

#### 1) 비 전

**수도권을 동아시아 중심대도시권으로 육성**

#### 2) 기본목표

- 글로벌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식경제체제 형성
- 동아시아 관문역할을 위한 국제 교통·물류 인프라 구축
- 녹색성장 선행모델과 문화관광 브랜드 구축을 통한 삶의 질 확보
- 자율적인 광역성장관리체제 구축 및 권역간 연계협력 강화

### 나. 권역의 발전방향

#### ① 동아시아경제 선도를 위한 전략거점 및 지식산업클러스터 육성

- 서울 및 인천경제자유구역에 국제업무거점을 형성하고 경인축을 국제업무축으로 육성
- 인천시 및 경기도 서해안 일대는 인천공항, 인천항 및 평택·당진항을 이용하여 물류산업을 육성하고 용의·무의·시화지역은 관광레저산업을 집중 육성
- 환발해만 지역에 대응하여 인천·황해경제자유구역 및 시화·화성지역을 포함하는 경기만 일대를 대중국 전략기지로 특성화 발전
- 문화콘텐츠, 디자인, 소프트웨어산업 등 지식기반서비스산업과 로봇·바이오, U-헬스, IT기반융합, 고령친화, 신재생에너지 등 지식기반제조업의 거점으로 육성

- 지자체, 대학, 기업 등이 협력하는 광역적 클러스터 추진주체를 조직하고 클러스터 촉진사업(인력 지원, 기술개발 지원, 마케팅 지원 등)을 적극 추진

## ② 국제 물류인프라 구축 및 교통인프라 기능 확충

- 인천항과 평택·당진항을 대외교역의 거점항만으로 육성하고, 김포공항의 동북아 일일 비즈니스셔틀공항 기능 강화
- 국가물류체계의 개선을 위해 수도권에 입지한 물류거점과 지방의 물류거점을 연결하는 물류간선네트워크 구축
- 경인 아라뱃길 건설 등을 통해 수도권 물류 효율성 확보
- 편리하고 지속가능한 교통수단을 통한 수도권내 주요 거점간 원활한 이동 및 연계 강화를 위해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의 도입 추진
- 경의선(용산~문산), 분당선(오리~수원), 신분당선(강남~정자), 수서~용문간 복선전철 등 광역철도망을 지속적으로 확충
- BRT, 경전철 등 신교통수단의 도입과 대중교통수단의 다양화를 도모하며 수도권 전체를 대상으로 자전거 이용 기반 구축 및 활성화 유도
- 서울 통과교통량의 저감을 위해 광역우회교통망을 확충하고, 버스 및 지하철 연계 교통을 강화하여 대중교통 지향형 도시개발(TOD) 체계 구축

## ③ 다핵공간구조 형성과 낙후지역 지원

- 수도권내 중부·서부·북부·남부별 지역생활거점을 중심으로 자족도시권역을 형성하여 다핵공간구조를 실현하고 주변 도시들과의 연계성 강화
- 광역철도망과 주요 교통중심지 간의 연계성을 강화하여 네트워크형 공간구조 형성을 유도하고, 수도권내 다른 도시와 기능 및 역할 분담 강화
- 역세권 주변을 재정비하고 광역교통체계와의 연계를 강화하여 에너지 절약형 공간구조로 전환 유도



- 낙후된 수도권내 접경지역의 개발 및 경제활동을 지원하고 남북통일에 대비하기 위한 간선도로망 잇기 사업 등 각종 인프라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
  - 남북경제협력 기반 조성을 위한 육상교통망을 확보하고, 경기북부고속도로 등을 통해 북부 지역의 기반시설 확보
- 수도권내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종전부지 및 대규모 미군반환 공여지 등에 대한 전략적 활용방안 강구
- 수도권 자연환경보전권역인 경기 동부지역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친환경특화 산업 및 청정산업의 입지를 수질오염총량제와 연계하여 추진
- 경기 동북부 지역 및 서해안 일대에 농어촌관광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여 농어촌 가구 소득 증대 도모
- 도서 개발, 접경지역 지원 등 분산된 수도권 낙후지역 개발정책을 종합적·체계적 지원체제로 전환

#### ④ 환경친화적 도시 정비 및 관광경쟁력 강화

- 기성시가지의 재생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도심 중추기능의 재활성화를 유도하고, 도심 수변공간을 주변지역과 연계하여 시민휴식 및 문화공간으로 조성
- 대규모 택지개발 및 간선도로망에 의한 녹지축 단절과 점·선 형태의 파편화된 고립 녹지에 대하여 녹지 연계 및 녹지축 형성 등을 통해 도시내 녹색공간 복원
- 도심을 관통하는 지상철도의 도시공간 단절 해소방안을 강구하고, 낙후된 철도 주변 지역을 재생
- 노후 항만·공업지역은 신개념 복합산업단지로 재개발하여 도심형 산업기능의 입지 유도 및 활성화
- 한강의 주요 지천을 대상으로 이수, 치수 및 주변환경 정비를 추진하고 자연하천으로 복원하여 친환경 생태체계 재생
- 해안지역을 중심으로 조력발전소 및 지열발전소 등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기반 확충으로 환경친화적 도시발전 유도

- 수도권에 존재하는 다양하고 풍부한 여가문화 및 관광자원을 특정주제별로 분류하여 여가·관광권역을 설정
- 수도권의 역사·문화전통과 지역적 특성을 활용한 고부가가치 관광산업을 육성하고, 도심의 전통문화공간을 차별화된 역사·문화관광자원화
- 수도권 지역을 대상으로 주제별 또는 지역별 관광상품을 연계하여 공동으로 해외 마케팅을 실시하고 관광산업의 고부가가치화 실현
- 경인 아라뱃길과 한강, 경기만 일대(강화~옹진~인천국제공항~영흥도~전곡항)를 수상레저축으로 개발하고 국제해양관광시설 확충
- DMZ 일원의 평화·생태·관광자원을 결합하여 평화생태관광벨트로 조성
- 수도권의 전문의료기술과 병원인프라를 적극 활용하여 의료기술을 상품화하고 의료와 웰빙 관광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하는 등 여가 및 관광자원을 상호연계

## **5 수도권의 광역행정 협조체제 구축 및 권역간 협력 강화**

- 수도권 광역경제권 발전계획 추진, 수도권의 대규모 개발사업 및 광역서비스의 원활한 공급을 위한 광역적 행정협조체제를 구축
  - 광역지자체간 합의된 사업을 자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적절한 권한 이양 및 예산 배분도 함께 추진
- 광역적 차원에서 자연특성과 도시경관을 고려하여 보전할 지역은 先보전하고, 도시 개발 수요에 대한 계획적 관리 체제 강화
- 한강 하구를 포함한 경기만 연안으로 흘러드는 각종 오염물질로 인한 환경 악화 방지를 위하여 광역적 행정협력체제 구축
- 각 부문간 통합적·광역적인 환경관리체계 구축과 자연물순환체계 보전, 오염물질 발생원 관리 강화 등 안전하고 깨끗한 수자원 관리체계 확립
- 팔당호로 유입되는 지역 하수에 대한 효율적 대처를 위해 하수도정비계획의 승인 및 공공하수도 설치권한을 가진 중앙정부와 광역지자체 간의 적절한 분담체계 구축

- 수도권 통계자료 구축 및 조사·분석과 광역행정협조체제 지원을 전담할 수 있는 수도권 전담 광역계획기구 설립
- 수도권의 성장잠재력 및 비수도권의 발전기회 확대를 위해 수도권-충청남도, 수도권-충청북도, 수도권-강원도의 공동개발사업 추진
  - 공동개발사업으로 산업단지 조성, 관광지 개발, 공항 공동이용 등을 추진

## 제2장 충청권

### 가. 권역의 비전 및 기본목표

#### 1) 비 전

**동북아 첨단과학기술·산업의 허브, 녹색국토 창조지대**

#### 2) 기본목표

- 국가발전을 선도하는 첨단과학 R&D 산업의 중심
- 신성장동력산업을 주도하는 첨단산업의 거점
- 자연과 문화와 미래가 만나는 국제관광 허브
- 인간과 자연이 상생하는 녹색성장의 중심

### 나. 권역의 발전방향

#### ① 충청권내 지역발전거점 도시네트워크 구축과 연계 강화

- 대도시권 구축과 충청권내 특성화된 지역발전 거점도시 육성
  - 대전-세종-청주 대도시권, 아산만 연담도시권 등이 광역경제권의 성장거점 역할을 하도록 연계를 강화하고, 타 도시권과 초고속 광역교통망 구비
  - 행정·교육의 중심도시, 혁신도시, 기업도시, 관광·문화도시, 도청 이전도시 등 권역내 지역발전 거점도시의 특성적·계획적 개발 추진
  - KTX 역세권(대전, 오송, 천안·아산, 공주)을 지역성장 네트워크의 핵심거점으로 육성
  - 지역발전 거점도시의 에너지순환시스템 구축 등 인간과 자연이 상생하는 녹색성장의 중심지대로 육성
- 지역발전 거점도시와 주변도시간 광역도시권을 형성하고 광역거점시설 및 주변지역간 광역 네트워크 강화와 주변지역 상생발전 도모

- 낙후지역의 새로운 발전역량을 제고하여 자립적 특화발전과 향토산업의 전략적 육성으로 경쟁력 확보

## ② 충청권 광역연계 인프라 구축 및 접근성 강화

- 기후변화와 에너지 위기에 대처하는 철도 등 녹색교통체계 확충
  - 청주공항 활성화를 위해 수도권 전철을 청주공항까지 연장하고, 충청권 광역연계철도망 구축 추진
  - 여주~문경간 철도노선을 확충하고, 서해안 물류수송망 구축을 위한 서해산업선철도(인주~안흥)구축 검토
- 충청권역 지역발전 거점도시간 광역연계망 구축 및 신교통수단 도입
  - 서울~세종 고속국도, 충청내륙 고속화도로의 건설, 대전~당진간 고속국도의 대산 연장 등을 추진
  - 행정중심복합도시 및 주변 거점도시간 연계 신교통수단(BRT 등) 구축, 기존 지역발전 거점도시와 주변도시간 연계교통망 구축
- 공항·항만·물류기능 강화를 위한 기반시설 확충 및 일관복합운송시스템 구현
  - 청주 국제공항을 중부권 거점공항으로 육성하고 항공정비업 활성화를 위한 항공복합단지 조성을 통해 항공 관련 산업 육성
  - 평택·당진항의 항만시설을 확충하여 대중국 거점항으로 개발하고 대산항을 석유화학 클러스터 지원항만 및 자동차 물류 전용항만으로 육성

## ③ 新성장동력산업의 육성과 녹색성장 기반 구축

- 미래형 첨단산업 중심지 도약을 위해 선도산업과 전략산업 중점 육성
  - 선도산업(의약바이오, New IT) 및 전략산업을 신성장동력산업으로 집중 육성
  - 오송 첨단의료복합단지를 대덕연구개발특구 등과 연계하여 글로벌 바이오 의료산업의 허브로 육성하고, 산업간 융복합(디스플레이 메가클러스터, 태양광산업, 국방과학산업, 신소재산업)을 선도
  - 경제자유구역을 중심으로 산업클러스터 기반(자동차, IT, 철강, 석유화학, 항공산업)을 확충

- IT·BT·GT 융합산업의 광역적 혁신거점 창출과 클러스터 경쟁력 강화
  - New IT 부품소재 및 차세대소자 제조장비의 경쟁력 강화, 디스플레이 측정의 세계표준화 선도 등 IT 경쟁력 강화와 클러스터 기반 확장
  - 첨단바이오 거점 및 거점연계형 충청권 초광역바이오클러스터, BIT 융합기술 기반 U-health 산업클러스터, 농수축산 바이오 R&D 클러스터 조성
  - 신재생에너지산업 육성을 위한 저탄소 녹색성장 기반 구축

#### 4] 충청권 녹색국토 창조 및 역사·문화·관광자원 연계 개발

- 기후변화 및 에너지 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충청권내 에너지 절약적 도시 조성을 위한 도시계획을 수립하여 저탄소 에너지절약형 신도시로 개발
- 수자원 확보, 수질 개선, 홍수 및 범람 방지 등을 위한 하천 정비와 수변공간의 환경 친화적 활용 방안 모색
- 광역생태축(백두대간, 금남·금북정맥, 해안사구, 습지, 갯벌 등) 보전사업과 생물 다양성 증진을 위한 관리사업(야생동식물 보호구역 지정, 생물다양성 관리계약사업 등) 추진
- 각종 재해·재난에 대한 구조적(소하천 정비 등)·비구조적(재해예방지도, 침단재해 경보시스템 등) 재해대책의 통합추진과 종합재해관리시스템(소방인프라, 시도별 종합안전망) 구축
- 대도시 및 근교관광권, 서해안 국제관광권, 내륙휴양관광권, 중부내륙관광권, 백제문화 관광권 등 권역내 5대 관광권별 특성화 발전전략 추진과 광역관광루트의 공동 개발 및 경관 형성
- 지역 정체성에 바탕을 둔 역사·문화 및 관광자원의 육성
  - 역사문화루트(백제문화권, 내포문화권, 중원문화권), 충청권 건강회랑(보령, 아산, 제천, 오송, 예산, 수안보, 양성, 유성 등), 갑천첨단과학문화관광벨트, 백두대간 루트 등을 활용한 광역 관광·문화벨트 공동 개발·보전
- 충청권 그린-블루 네트워크(Green-Blue Network) 구축을 통해 인간과 자연이 상생 하는 녹색공간구조 창조

- 금강르네상스, 충주호 물길 100리 프로젝트를 하천정비사업, 도시재생사업 등과 연계하고 자전거도로 구축, 걷고 싶은 ‘마실 길’ 조성, 해안포구와 성황당을 연결하는 해안 둘레길 조성 등을 통해 슬로우 지역(Slow Region) 지향

## 5] 광역·공동개발사업의 협력적 추진체계 구축

- 충청권내 해안과 내륙의 연계를 강화하고 타광역경제권과 연계·협력사업 활성화
- 충청권내 광역·공동개발사업의 협력적 추진체계 구축
  - 광역적 공동사업 추진을 위한 충청권 지역간 기능 분담체계 및 중앙정부-충청권 협력체계 마련
  - 충남·북 북부지역을 계획적으로 관리하여 충청권 발전을 유도하고, 수도권에 대응하는 수도권 상생발전축 구축

## 제3장 호남권

### 가. 권역의 비전 및 기본목표

#### 1) 비 전

#### 동북아의 신산업, 문화, 관광, 물류 거점

#### 2) 기본목표

- 녹색기술과 융합된 미래 성장산업과 전통산업 육성
- 동북아 문화·관광 거점 육성
- 선진형 물류·교통·정보망 확충
- 인재 육성 및 지식 창출 기반 강화
- 거점도시 경쟁력 강화와 매력있는 정주환경 조성

### 나. 권역의 발전방향

#### ① 지역별 특성화를 통한 성장거점 육성 및 균형발전 촉진

##### ◦ 6대 성장거점 육성

- 광주대도시권을 호남권의 중추도시로 육성하고, 아시아문화중심, 연구개발허브, 융·복합산업 도시로 육성
- 전주 광역도시권을 중심으로 호남 북부의 거점도시 기능을 강화하고, 전통문화중심, 교육 및 과학기술, 첨단부품소재 융합도시로 육성
- 새만금권은 국제업무·산업·관광·레저용지 조성 및 새만금 신항 건설 등을 통해 대중국 게이트웨이로서 글로벌 경쟁거점으로 육성
- 목포권은 무안 및 영암·해남 기업도시를 성장거점으로 개발하고, 무안국제공항 및 다도해를 기반으로 세계적인 해양관광과 대중국 산업 및 교역 중심지역으로 육성
- 광양만권은 경제자유구역 조성 및 광양컨테이너항, 광양·여천 산업단지, 2012 여수세계박람회 개최를 기반으로 국제적인 산업 및 물류·교역 중심지역으로 육성



- 덕유산·지리산권은 기존 관광시설단지와 아름다운 섬진강과 지리산, 덕유산을 활용하여 향토 식품산업 및 국제적인 휴양형 산악관광과 문화를 융합한 녹색성장거점으로 육성

#### ◦ 4대 벨트 특성화

- 서해안 벨트 : 군산-목포를 신산업을 중심으로 관광이 보완된 신산업벨트로 육성
- 남해안 벨트 : 목포-광양을 전통문화 중심의 해양관광·녹색벨트로 육성
- 내륙 청정휴양레저벨트 : 동부의 산악수변을 휴양·레저·장수 건강기능으로 특화한 관광 벨트로 육성
- 수변생태관광벨트 : 북부의 군산(금강)~덕유산을 연계하여 수변 및 산악자원이 결합된 생태 관광벨트로 육성

#### ◦ 4대 축을 형성하여 공간구조 연계

- 광주~전주 축 : 거점도시 및 고등교육기관을 연계한 지식·첨단산업축으로 육성
- 광주~목포 축 : 신재생에너지, 광융합, 전력산업(한전)을 연계한 녹색 에너지산업축으로 육성
- 광주~광양만 축 : 기초·신소재산업과 부품산업 및 물류산업을 포함한 전통·기간산업축으로 육성
- 전주~익산~군산~새만금 축 : 조선, 자동차, 신재생에너지, 친환경부품소재, 바이오 및 식품 산업을 기반으로 한 녹색산업축으로 육성

#### ◦ 농·산·어촌의 특화개발

- 농·산·어촌의 특화자원을 활용하여 기술과 문화와 관광이 융복합된 고부가가치 특화산업으로 육성
- 특화산업을 국제적인 브랜드산업으로 육성하고, 교육, 의료 등 정주여건을 향상시켜 삶의 질 제고

## ② 미래 녹색성장 산업, 전통산업 및 문화·관광산업 육성

#### ◦ 녹색산업을 지역의 신성장 동력산업 및 융복합산업 육성

- 신·재생에너지산업과 광융합기반산업, 친환경부품소재산업, 인쇄전자산업, 차세대(복합재) 항공산업을 신성장동력산업으로 집중 육성
- 신·재생에너지, 친환경부품소재, 미래 지능형 물 관리시스템(Smart Water Grid) 등 신성장 산업과 식품, 의료 등 지연산업을 연계한 융복합 기술 개발 및 인프라 구축

#### ◦ 친환경생명복합 및 헬스케어산업 육성

- 한방산업과 해양생물산업을 연계한 친환경생명복합산업화
- 광주~전남 화순·나주, 새만금~익산~전주진안을 중심으로 건강, 미용, 친환경 생활·음식이 집적화된 헬스케어산업 육성

- 연구개발특구 지정 및 첨단산업거점 육성
  - 광주 R&D 특구를 지정개발하고, ROUTE13(광주대도시권)·전주~군산~새만금·서남해안 광양만권을 첨단산업거점으로 육성
- 농·산·어촌 지역의 향토산업 육성과 산업발전 기반 구축
  - 향토 농식품산업과 휴양서비스산업 등을 연계한 복합산업화 추진
  - 인력과 연구개발 체계화로 농어촌 산업발전 기반 구축
- 동북아 문화·해양관광 허브 및 산악휴양 복합리조트단지 육성
  - 광주 아시아문화중심도시와 전주서남해안의 전통문화를 연계하여 문화관광교류 중심지로 육성
  - 새만금지구와 서남해안 관광레저도시를 연계하여 동북아의 해양관광벨트로 조성하고, 새만금 및 여수를 중심으로 동북아 해양관광허브로 육성
  - 마리나, 크루즈항 등 고급 해양레저관광 기반 구축 및 항만 종합개발
  - 지리산덕유산권을 중심으로 건강·휴양·레저·체험·생태·교육 등이 융복합된 ‘에코테인먼트 거점’ 육성
  - 농업테마공원, 생태마을 조성, 생태관광센터 설립
- 호남광역권의 녹색산업과 문화관광 중심의 특성화 및 연계 개발
  - 다양성과 차별성을 갖춘 국제 문화관광상품(생활문화체험, 문화예술, 농촌생태체험 등) 개발
  - 의료와 뷰티, 라이프 케어가 융합된 신개념 휴양시설 확충
  - 익산백제문화권~김제농경문화권~고창고대선사문화권~전주전통문화도시~광주문화중심도시~영산강고대문화권~서남해안관광레저도시~지리산덕유산내장산 연계 개발 및 추진체계 구축
- 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체계 강화
  - 주체간 네트워크 구축, 지역정보 인프라 확충, 산·학·연 협력 기술 개발 및 인력 양성

### 3 선진형 교통, 정보, 물류망 확충

- 국내외 네트워크 중심지로의 인프라 구축
  - 군산(새만금)~포항 및 목포~부산간 동서교통망 확충
  - 새만금·서남권·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및 기업도시, 혁신도시 등 거점간 연계 강화
  - 호남고속철도 조기 완공, 광주송정역 복합환승센터 건설 및 역세권 개발을 추진하고, 광주-순천간 경전선 복선전철화 검토

- 세계와 지역을 통합·연계하는 물류·교통망 확충
  - 새만금지구와 서남해안을 연결하는 광역교통망 확충 및 항공수요 추이에 따라 군산공항 확장 검토
  - 광주권 제3순환도로 및 주변도시와 광역철도 건설, 서남해안일주도로(일반국도 77호선) 건설
  - 무안국제공항을 거점 국제공항으로 육성하고, 광양목포·군산항 및 새만금 신항 건설을 통해 동북아의 거점항만으로 육성
- 접근성 증대를 위한 첨단정보인프라 구축
  - 산업·기술·유통 활성화를 위한 지역정보 인프라 구축 및 유비쿼터스 정보통신망 구축

#### 4] 경쟁력 있는 거점도시 육성 및 매력적인 정주환경 조성

- 과학기술 및 연구개발 역량 강화와 거점 육성
  - 연구개발특구 지정 및 신성장 동력산업 발굴을 위한 산·학·연 컨소시엄 및 기반 구축
  - 광주대도시권과 전주광역도시권을 과학기술 진흥 및 교육·인재양성 거점으로 육성
  - 새만금·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을 연계한 광역적 지식창출 기능 강화
- 광주, 전주~익산~군산, 목포, 순천~여수~광양을 정주거점으로 육성하여 주변 중소도시와 연계한 광역도시권 형성
  - 광주~전주(지식·첨단산업축), 광주~목포(녹색에너지산업축), 광주~광양(전통기간산업축), 새만금~전주(녹색산업축)의 4대 축을 통해 주변 파급효과 극대화
- 서남권(목포, 무안, 신안) 육성과 함께 내륙 낙후지역에 대한 민간투자 촉진 등으로 새로운 발전 계기를 마련
- 거점도시의 도시재생과 도시디자인, 중추서비스산업 육성을 통해 도시기능 및 매력도를 향상하고, 중소도시는 환경친화적 녹색도시 건설과 정주환경 조성을 추진
- 잠재력에 기반한 도·농 연계형 녹색공동체 형성과 청정자연환경 보전·관리
- 기초생활권으로서 농·산·어촌 개발
  - 농·산·어촌 지역의 정주여건과 생산적 복지 기반 구축 및 공동체 기반 구축
  - 도서 개발 추진체계를 개선하여 도서지역 생활환경 개선 및 내륙과 연계성 강화

## ⑤ 광역적 협력과 거버넌스 구축

- 광역적 연계와 협력을 위한 추진체계 및 거버넌스 구축
  - － 호남광역권 관광진흥추진기구를 구성하여 도시·해양산악·농어촌 관광 연계사업 추진
- 광역권내 지자체간 협력사업 추진
  - － 관광, 축제, 광역시설 확충 등을 시작으로 자치단체간 공동의 이익을 창출하고, 규모의 경제를 이룰 수 있는 광역적 협력사업 발굴 및 추진

## 제4장 대경권

### 가. 권역의 비전 및 기본목표

#### 1) 비 전

#### 글로벌 지식경제 기반과 녹색성장 중심지

#### 2) 기본목표

- 첨단 융복합산업 중심 : 주력산업 첨단화, 첨단 R&D 및 신성장산업 육성
- 교육·학술 산업의 메카로 육성 : 혁신도시에 교육·학술 관련 공공기관 이전과 연계한 교육·학술 진흥 및 교육서비스 산업 육성
- 역사·문화·자연이 어우러진 문화관광 허브 : 도시문화관광 신거점 조성, 3대 문화권 생태문화관광 비즈니스화
- 친환경 네트워크형 상생발전지대 창조 : 지역발전 거점 육성 및 특성화, 세계로 열린 교통·물류망 확충, 지역간 공동협력체계 구축

### 나. 권역의 발전방향

#### ① 지역발전 거점 육성 및 지역간 복합네트워크 구축

- 대구대도시권은 글로벌 지식경제 중심지로서 대경권 중추관리기능을 담당하고, 첨단 산업 및 연구개발 기능, 기업지원서비스, 지식서비스 기능을 집적
  - － 국제적인 교육학술 클러스터 조성, 기존 산업단지 구조 고도화 및 주력산업의 지식산업화, 의료산업벨트 육성, 지역 대학별 특성화를 통한 기업 지원 R&D 및 인력 양성 등 추진
  - － 대구는 의료·교육·비즈니스서비스, 첨단산업 등 지식경제 중심, 경산·달성·칠곡은 R&D 및 제조업, 영천·군위·고령·청도는 제조업 위주
- 첨단산업도시권(구마·김천)은 IT기반 신산업밸리 구축 및 대구대도시권과 연계 강화
  - － 구미는 지식기반 IT 거점도시로 육성, 김천은 혁신도시내 이전공공기관 관련 클러스터 구축

- 동해안권(포항·경주·영덕·울진·울릉)은 과학·에너지 산업 및 관광산업 육성
  - 포항, 경주 등의 R&D 인프라 기반 강화, 금속소재 등 산업구조 다양화, 영일항만 중심의 동북아 물류거점 기능 강화, 역사문화유산의 재정비, 산림 및 해양자원 융복합형 관광 육성
- 도청신도시권은 경북의 행정중심도시로서 북부지역의 거점기능 수행
  - 도청신도시는 새로운 행정중심지로서 행정, 교육, 문화, 유통 등 고차서비스기능 수행
  - 안동은 유교문화권 중심도시, 영주는 고품격 생태관광휴양도시, 문경은 스포츠·문화·관광 도시로서 역할 정립
  - 상주, 문경 등은 수도권과 충청권을 연결하는 관문도시로서 낙동강과 백두대간을 활용한 녹색 산업·문화관광산업 육성
- 대경권 거점 조성, 중소도시 소프트 인프라 강화, 대구·경북 경제자유구역 개발, 신도청 도시 및 KTX 역세권(동대구, 신경주, 김천) 개발, K2 이전 및 적지 개발, 도시 재생 등 주요 사업 추진

## **2 글로벌 네트워크형 교통·물류 인프라 확충**

- 교통망이 취약한 경북 북부지역과 동해안지역에 대해 국가기간교통망의 조기 확충으로 국가균형발전 및 국가경쟁력 강화
  - 동서 5축(영주~울진), 동서 6축(상주~안동~영덕), 남북 6축(영천~청송~양구), 남북 7축(울산~포항~영덕~삼척) 간선도로망 건설
- 88올림픽고속도로 확장, 대구(포항)~새만금 고속도로 건설 추진으로 타 광역경제권과의 연결 교통망 확충
- 대경권의 신성장축을 형성하고 영일항만으로의 물류비용 절감 및 영일항만 활성화를 도모하는 대구~포항 간의 직결철도망 건설
- 광역경제권의 간선철도 역할 강화를 위해 경북지역의 주요 거점을 연결하고 있는 동해남부선 및 중앙선 철도의 복선화 추진
- 대경권 수출입 물동량의 원활한 처리와 환동해 경제권 형성을 위해 영일만항 및 인입철도 적기 건설

- 국토영유권 강화 및 울릉도와 내륙을 연결하는 교통망 확충 등을 위해 울릉도 소형 공항을 건설을 추진하고 울릉도 사동항의 2단계 공사를 조기에 착수

### ③ 융·복합 첨단산업 육성 및 R&D 확충

- 주력산업 첨단화 및 뿌리산업과 연계한 강소형 첨단부품소재산업의 거점화를 위한 산업벨트 조성
  - 첨단소재산업벨트 조성 : 전기·전자산업을 모바일 융합, 2차 전지중심으로 발전
  - 철강산업을 다변화하여 첨단신소재 중심의 비철금속소재, 연료전지, 메디바이오 등 육성
  - 뿌리산업·자동차부품산업벨트 조성 : 기계금속·자동차부품산업, 로봇산업 등의 융복합화를 통한 메카트로닉스 산업발전 기반 구축
  - 신섬유산업벨트 조성 : 산업용·스포츠용 기능성 섬유 개발 및 인력 양성 추진
- 그린에너지 및 IT융복합산업 중심의 신성장동력 창출
  - 태양광, 수소에너지 등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특화발전, 로봇 등 IT융복합산업의 인프라 확충 및 관련 기업 유치 및 지역의 풍부한 의료 인프라를 활용한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 추진
- 대경권 산업 발전을 선도하는 R&D 거점 및 인력 양성
  - 대구 R&D 특구 지정·육성과 신소재·IT융복합·메디바이오 등 대학 특성별 인재 양성을 위한 연구중심의 지역대학 육성 및 현장인력 양성을 위한 전문대 육성

### ④ 3대 문화권과 강·산·바다가 어우러진 녹색·문화관광공간 실현

- 4대 관광축 설정 : 대도시축, 역사·해양축, 백두대간축, 낙동강축
- 대구권은 매력적인 도시관광문화지대로 비즈니스관광 기반 조성
  - 공연문화예술, 의료, MICE, 스포츠, 패션 산업 등을 도심 재창조 및 팔공산, 신라가야 유교문화, 해인사 등과 연계하여 육성
- 낙동강·금호강의 수변 및 경관거점 지역에 친환경 수변생태공간 조성하여 문화와 생태자원을 연계한 관광자원으로 활용

- 경주·동해안권은 신라문화와 동해안·낙동정맥의 해양·생태자원을 연계하여 역사문화와 해양·산림자원에 기반한 관광휴양벨트로 육성
  - － 울릉도·독도를 해양관광거점으로 특성화
- 안동, 영주 등 경북 북부지역은 풍부한 유교문화자원과 백두대간 천혜의 생태자원을 연계하여 녹색산업의 허브로 육성
  - － 국제 유교문화 허브, 로컬푸드, 웰빙온천, 슬로시티 등 백두대간의 청정비즈니스화

## 5 광역권간 연계 협력 추진

- 영남권 모바일 융복합산업벨트, 동해안 에너지·관광벨트 및 대구·광주의 첨단산업과 문화·화합의 연계 협력 등 지역 선도산업 및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광역권간 연계 추진
- 문화·관광자원의 광역적 이용 및 연계를 통한 지역발전 도모
  - － 가야문화권, 신라문화권 등 문화관광자원의 광역적 이용 및 연계 강화
  - － 백두대간을 중심으로 하는 중부 내륙지역, 동해연안 등 지역자원의 공동 개발과 이용을 통한 지역발전 도모하고, 낙동강 살리기를 위해 대경권과 동남권 간의 상호 협력 추진



## 제5장 동남권

### 가. 권역의 비전 및 기본목표

#### 1) 비 전

**환태평양 시대의 해양·물류 및 첨단기간산업 중심지**

#### 2) 기본목표

- 동북아 국토개방 및 국제교류 중심지
- 동북아 항만·물류·경제권 중심지
- 동북아 국제무역·금융·영상·컨벤션산업 중심지
- 동북아 해양문화·과학·생태관광의 중심지
- 국가기간산업 및 첨단지식기반산업 중심지
- 환태평양 녹색에너지 성장 거점

### 나. 권역의 발전방향

#### ① 동북아 국제 비즈니스 및 금융산업의 거점 육성

- 동북아 물류 비즈니스 거점기능 강화를 위하여 신항만을 중심으로 포트 비즈니스 밸리(Port Business Valley) 육성
  - 부산항 신항을 동북아시아 최고 수준의 허브항만으로 육성하고 국제물류지원단지, 항만 비즈니스센터 건립, 배후물류단지 확충을 통해 항만물류산업의 부가가치 극대화
-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기능 강화 및 투자유치·개발 활성화, 부산·울산·창원 자유무역지역 구조 고도화 추진
- 부산을 동북아 선도 금융지로 육성
  - 해양산업을 기반으로 하는 금융 특화전략으로 해운·항만·물류·수산산업의 역량을 강화

- 주요 해외거래소와의 연계 및 24시간 거래시스템 구축으로 Global 역량 강화
- E-해양금융 허브를 통한 해양관련 전자금융의 국제화로 전자상거래의 전자결제 수요에 대응하고 지역특화 파생상품 개발의 집중 투자
- 선박금융 및 자금조달의 원활화를 도모하고 해운 관련산업 발전을 위해 선박투자회사를 통한 선박금융 활성화
- 세계 석유소비시장의 중심지로 부상하고 있는 동북아시아 지역의 석유 물류활동의 중심거점 형성을 위한 오일허브 구축

## ② 환태평양시대 유라시아 관문 역할을 위한 교통 및 항만물류 인프라 구축

- 국토 개방거점으로서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항만물류 중심기지 구축과 복합운송체계 및 교통인프라 구축
  - 유라시아의 중심 거점기능 강화와 항만물류산업의 고부가가치화
  - 동북아 국제물류·교류 기능 강화를 위한 해양·물류단지 및 배후도시 건설
- 국제교류 관문기능 강화를 위해 동남권 신공항은 입지평가 결과에 따라 사업 추진 및 연계인프라 및 복합운송체계 구축
- 교통망 확충을 통한 지역간 산업물류 및 관광자원의 연계 강화
  - 동남권 환상형 내륙순환도로 구축 및 지역 교통난 해소
  - 부산, 울산, 창원 등 KTX 역세권과 대중교통 연계 강화 및 광역전철망 구축 등을 통해 지역간 연계 활성화
  - 남해안권과 국토 중부내륙을 연결하는 국토종단 고속철도망 확충
  - KTX 역세권(부산, 울산)을 지역성장 네트워크의 핵심거점으로 육성

## ③ 동북아 신성장 전략산업벨트 및 초광역 산업클러스터 구축

- 동남권 선도산업 집중 육성을 통한 핵심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 수송기계산업(그린카, 해양플랜트), 융합부품소재산업(기계기반 융합부품소재, 수송기계 안전 편의부품소재)을 집중 육성하여 글로벌 경쟁력 강화
- 신성장동력 및 수송기계산업 육성과 고부가가치 기술개발을 촉진할 신성장 전략 산업 벨트 구축

- 주력 기간산업의 지속적인 성장 기반 확보 및 신성장동력산업 육성, 환동해 경제권 형성에 대응하기 위한 테크노 산업단지 조성
- 신성장동력산업, 녹색기술산업 등 새로운 산업의 육성을 위해 내륙과 해안거점에 도시첨단 산업단지 등을 균형있게 조성
- 국제물류산업 육성 및 고부가가치화를 위해 자유무역지역 역할 증대와 첨단산업(메카트로닉스, 생명공학, 전자산업 등) 위주로 산업구조 고도화
- 지역별 주력 전략산업의 고부가가치화·첨단화를 통해 국가 기간산업 초광역 클러스터 구축
  - 부산(항만, 조선기자재), 울산(자동차, 조선, 석유화학, 전지), 창원(기계, 해양플랜트, 로봇), 사천·진주(항공), 거제(조선) 등 지역전략산업의 초광역 산업클러스터 구축 추진

#### ④ 녹색성장 거점 및 해양·문화·관광산업 육성

- 동남권의 주력산업에 대해 저탄소 시스템을 구축하고, 신재생에너지 및 녹색기술산업 유치를 통해 에너지 클러스터를 구축
  - 산업·교통(물류)·주택 등 도시 전 분야에 저탄소 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역별 신재생에너지 산업 육성 관련 단지 조성
  - 에너지 관련 산·학·연 시설을 활용한 동남권 에너지 클러스터 구축 및 환태평양권의 풍부한 자원과 연계발전 도모
- 생태공원 조성, 상·하수도 서비스 품질 향상,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 체계적 폐기물 처리 및 자원화 추진으로 맑고 쾌적한 저탄소 녹색성장 도시 조성
  -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추진 및 시범단지 조성을 통한 저탄소 녹색도시 구현
  -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저탄소 사회시스템 구축 및 동남권 환경·에너지 종합타운 조성
  - 낙동강 종합정비를 통한 홍수·가뭄 대비 및 워터프론트 개발 추진
- 문화·관광 콘텐츠화를 통한 역사문화·생태관광거점을 육성하고, 권역내 특화 관광 루트 개발 및 네트워크 구축과 지역 특화축제 강화 및 문화·관광콘텐츠 개발·육성
  - 탐조관광, 습지관광, 섬 관광자원화 개발 및 산악생태체험 등 생태 체험형 관광자원 및 국제적 관광 네트워크 구축

- 울산·양산·밀양 내륙 산악지역과 지리산·가야산·덕유산 국립공원 산악관광벨트 구축을 위해 생태관광상품 개발 및 광역경제권간 연계협력 도모
- 지역별 기능 특화를 통한 다핵연계형 발전거점 육성
  - 부산대도시권(물류·국제비즈니스·금융), 울산대도시권(자동차·조선·에너지·화학), 진해만 환상도시권(로봇·기계·조선·해양플랜트), 내륙성장도시권(나노·의료·의생명), 사천만 환상도시권(항공우주 소재산업), 서북부성장축진권(녹색생명산업) 육성
- 크루즈 도입, 섬 관광 활성화, 해양리조트 및 마리나 개발 등을 통해 동북아시아 해양 휴양·레저관광의 국제적 거점 육성
- 영상·컨벤션 산업의 중심기능 제고
  - 부산국제영화제 육성, 영상후반 작업기지 구축 및 첨단영상·정보통신기술 부품산업 육성으로 영상·정보통신(IT) 산업클러스터 조성
  - 국제회의도시 지정 및 컨벤션 전담조직 육성으로 국제적 컨벤션산업도시로 육성

## **5 협력 거버넌스 및 제도적 기반 구축**

- 광역자치제 구성 및 광역 거버넌스 기구 설치 등을 통해 타 권역과의 협력 시스템 구축
- 광역경제권의 효율적 지원과 관리를 위한 행정시스템을 구축하여 광역산업 중심의 산업별 광역 산·학·연·관 협의체로 확대·연계
- 초국경 광역경제권(동남권-큐슈권) 클러스터를 구축하여 새로운 발전축 형성 및 동북아 핵심 경제권 도약을 통한 동북아 통합경제체제의 새로운 상생 발전모델 제시
- 동남권의 새로운 특화산업 발굴·육성과 광역교통망 구축 및 신항만 운영 합리화 사업 등 공동 추진
- 생활기반시설을 확충하여 권역내 도시와 농어촌 간의 격차를 완화하고 지역간 균형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 정비

## 제6장 강원권

### 가. 권역의 비전 및 기본목표

#### 1) 비 전

#### 대륙국가로 가는 전진기지

#### 2) 기본목표

- 글로벌 지향의 첨단 융복합산업 육성
- 복합관광산업을 통한 '아시아의 스위스'로 도약
- 기후변화에 대응한 녹색성장의 신발전 선도
- 환동해권 복합 교통물류거점 기반 구축

### 나. 권역의 발전방향

#### ① 권역 특화발전 기반 구축과 신성장거점 육성

- 동해안 에너지·관광벨트, 남북교류·접경벨트 등 초광역개발권 발전 기반 구축
- 에너지산업 클러스터 구축 및 관광핵심거점, 한반도 평화정착과 남북교류거점지대, 녹색 기반 내륙첨단산업의 허브 육성
- 수도권 배후 거점산업성장축, 환동해 관광·교역축, 녹색성장 첨단소재 산업축, 백두대간 생태축, 접경지역 한민족평화축, 남부권 고원관광휴양축 등 6대 특성화축 중심의 지역특화 발전전략 추진
- 3개 주요 거점도시 특화와 네트워크 구축
  - － 춘천권은 교육·연구 거점도시, 원주권은 의료기기산업의 메카, 강릉권은 의료관광의 거점 및 저탄소 녹색도시화 추진

- 신성장거점 육성으로 지역 발전의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
  - 강릉시 경포 일원에 녹색시범도시를 조성하고, 환동해 경제권 교역 비즈니스 거점 구축
  - 의료기기 기반시설과 연계한 의료특구도시, 동계올림픽 경기장 지원 및 원주~강릉간 복선 철도 건설과 연계하여 동계올림픽 유치를 계기로 평창을 비롯한 인근 지역을 아시아 동계 스포츠 중심도시로 집중 육성
- 특성화된 농·산·어촌 육성을 위해 친환경농업으로 10대 명품 농특산물을 육성하고, 산림의 공익적 가치 제고, 소량·다품종·고품질 중심 해양 수산업 육성
- 접경지역 지원사업의 실행력 제고를 위해 DMZ 생태관광벨트 조성 등 10개 핵심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생물권보전지역 지정 및 세계복합유산 등재, 금강산 관광지구와 연계한 관광특구 조성(설악-금강 특구) 및 남북 강원도 교류협력 지속 추진

## ② 대륙으로 가는 전진기지 복합교통·물류 기반 구축

- 동북아~유라시아를 잇는 고속·개방형 복합물류·교통체계 구축을 통하여 환동해권 글로벌 게이트웨이 기능 확충
  - 한반도중단철도(TKR) 구축과 시베리아 횡단철도(TSR)간 연계 등 환동해 연안국 경제블록 형성에 대비한 교통·수송체계 확충
  - 남북 교류 확대 및 광역두만강개발계획(GTI) 외 환동해권 발전전략 등에 대비한 환동해권 물류 기반 조성
- 광역교통망 확충 및 30분대 기간도로망 구축
  - 동서고속도로, 동해고속도로, 제2영동고속도로 건설 추진, 중앙고속도로 철원 연장 및 구리~포천간 민자고속도로 철원 연장, 강화~고성간 고속도로 검토
  - 동서고속화철도, 경춘선 복선전철, 영동선 철도 이설, 중앙선 복선전철, 동해중부선 철도, 동해북부선 철도, 원주~강릉간 복선전철 추진, 용문~홍천, 의정부~철원 국철 연장 검토
  - 지역간 교류 활성화를 위한 지방도 터널화사업 추진
- 공항·항만 등 글로벌 인프라 확충
  - 양양국제공항의 국내외 항공노선 유치를 통해 환동해 전진기지로 중점 육성
  - 동해·묵호항, 속초항, 호산항 개발 등 환동해권 대북방교역, 국제관광 거점항만으로 육성
- 안전한 친환경 도로 만들기, 생활밀착형 자전거 동선 구축, 대중교통고객 만족을 위한 버스정보시스템(BIS) 구축, 보행자 중심의 도로환경 조성 등 녹색교통망 확충

### ③ 생명·건강산업 중심의 첨단지식산업 집중 육성

- 의료융합산업의 국제적 신성장거점화 추진
  - － 국제경쟁력을 갖춘 의료융합산업의 기술 사업화 허브 구축으로 의료융합분야 차세대 세계 일류상품 확대로 신성장거점 육성
- 동북아 지역 시니어 계층의 질병군에 대한 특화의료서비스 분야를 집중 육성하여 동북아 의료관광 거점으로 육성
- 지역특성과 잠재력에 기반한 10대 산업벨트 구축
  - － 바이오벨트 구축은 의약바이오산업 벨트(춘천~홍천), 농축산바이오벨트(평창~횡성~철원), 농업바이오벨트(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 해양바이오벨트(동해안 전지역)를 형성
  - － 첨단산업 벨트는 첨단의료기기산업벨트(원주~횡성), 신소재(비철금속)벨트(강릉~포항), 플라즈마산업벨트(철원~경기북부)를 구축
  - － 기존 에너지산업벨트(삼척~경북 울진~경주) 및 신재생에너지벨트(삼척~태백~영월~정선)를 구축하고, 환동해경제권을 주도할 환동해물류산업벨트(강릉~동해~삼척)를 구축
- 지역 전략산업인 미래형 첨단 의료기기산업, 생물의약품소재 및 해양바이오 산업, 세라믹 부품소재 및 방재산업을 특성화하고 집중 육성
- 강원권 이미지와 부합하는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선점하여 청정 강원의 브랜드화를 추진하고 그린에너지 산업을 경쟁력있는 녹색성장 신산업으로 육성
  - － 동해안 수소·연료전지 신에너지산업, 강원 남부 태양광 클러스터, 풍력발전산업 육성 등 그린에너지 특화산업단지 조성
- 원주권 U-헬스 상용화단지, 강릉권 Science Park 글로벌화, 철원권 평화산업단지, 동해안권 해양심층수 산업화 거점 조성 등 특화된 산업거점 형성

### ④ 복합관광산업 및 저탄소녹색성장 발전거점 육성

- 지역가치를 창출하는 생태·문화·휴양관광벨트 조성
  - － 6대 관광소권(북한강 수변문화관광권, 태봉문화권, 북원문화관광권, 설악산문화관광권, 단오·해양문화관광권, 근대산업문화관광권)을 구분하여 문화관광권 개발 및 권역별 특성화 전략 추진
  - － 3대 생태관광축(DMZ 생태관광축, 백두대간 생태관광축, 동강유역 생태관광축) 기반 조성

- 경춘·중앙·영동고속도로축의 기존 7개 관광단지를 중심으로 관광휴양벨트와 동해안권 광역관광벨트축 등 2대 융복합 레저스포츠 관광휴양벨트 구축
- 동아시아 관광허브 거점지역 조성을 위한 국제적 관광·휴양·스포츠 인프라 구축과 특성화된 관광자원 발굴 및 육성
  - 의료관광, MICE산업 육성, 환동해와 연계한 크루즈관광 육성, 지역별 특화된 관광단지 조성, 시·군별 차별화된 스포츠·레저산업 육성 등 4계절 복합관광 전환을 통한 고부가가치화
  - 국립공원 등에 대한 국제관광 경쟁력 기반 구축과 역사성을 갖는 문화관광 인프라 구축
  - 한강을 발원지에서 하구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자연·사람의 생명문화개념으로 재조명하고 스토리텔링 로드 조성 및 백두대간 그린존 조성 추진
  - 해안~내륙~산악으로 연결하는 내륙형 종합 마리나·레포츠 신항만 건설로 러시아, 일본, 중국과 교류
- 4대강 살리기와 연계하여 이상가뭄·홍수 대비 댐 건설 및 제방 보강과 지역경제 활성화
  - 녹조 저감시설 설치로 하천생태계를 복원하고 다기능 복합공간으로 조성
- 기후변화 대응 재해관리 조기대응체제를 구축하여 화재·산불·수해 발생 위험에 대비하고 사고유형별 안전대책 추진

## 5 타 광역권간 연계·협력방안

- 수도권과의 상생발전 연계·협력을 위해 강원·경기 접도지역 관광벨트(춘천, 홍천, 가평과 철원·포천·연천 등), 접경지 상생발전을 위한 공동 산업단지 및 바이오가스 클러스터 조성
- DMZ 일원의 평화·생태·관광자원을 결합하여 평화생태관광벨트를 조성
- 동해안 에너지·관광벨트 연계·협력하기 위해 동해안권 초광역 네트워크 구축
  - 생태 네트워크 및 동해안권 경관도로 구축과 친환경에너지 벨트 조성
  - 동해안권 신소재산업 연계 및 자동차·조선 융복합소재 벨트를 조성하고, 청정 명품 농수산물 벨트 조성 및 통합브랜드 개발
- 강원권의 소재산업을 기초로 중부 내륙지역과 연계·협력
  - 충청권의 IT 부품소재 및 태양전지 셀·모듈 산업, 전북권의 친환경 기술융합산업과 태양 전지용 소재산업과의 연계 활성화



## 제7장 제주권

### 가. 권역의 비전 및 기본목표

#### 1) 비 전

**대한민국의 성장 동력, 국제자유도시**

#### 2) 기본목표

- 국제교류 · 관광 · 문화 중심의 관광휴양지역화
- 국제자유도시 전략산업 및 성장동력산업 확보 지역
- 청정환경, 세계자연유산 및 녹색성장의 모범지역

### 나. 권역의 발전방향

#### ① 권역별 특성화와 지역 공간구조 개편

- 제주시는 국제교류, R&D 및 교육중심지, 서귀포시는 관광휴양중심지로 집중 육성
  - － 지역 및 지구거점별로 교육시설, 보건의료시설, 복지시설, 문화여가시설 확충
- 제주혁신도시, 영어교육도시, 중문관광단지, 평화연구센터 등을 통한 국제교류 증진 및 국제교류 클러스터 구축을 통한 도내 균형발전 도모
- 도시지역 및 비도시지역의 정주여건 고도화 및 도시·농어촌간 연계 강화로 정주 기반 구축
  - － 지역실정에 적합한 택지개발 및 주택공급 확대, 주거 유형의 다양화를 통한 주거환경 개선
  - － 농어촌의 소득과 문화 창달을 위한 문화, 생태, 역사 등 어메니티 특화마을 조성
- 제주다운 경관 관리 및 명품 디자인도시 육성
  - － 자연경관을 보전·관리하고 제주의 고유특성을 자원화하는 경관체계 확립
  - － 기존 시가지의 재개발 및 재건축을 통한 도심기능 재생 도모

- 건축, 도로, 옥외광고, 생태하천, 그린웨이, 공공디자인 개선을 통한 명품도시화 추진
- 제주 특성에 어울리는 가로수 식재 등 도시기로의 품격 향상
- 다문화·다민족 사회를 대비한 사회복지서비스 체계 구축
- 국제자유·관광·안전도시의 기반 구축 및 도민이 안전한 재난방재시스템 운영
  - 지진, 태풍, 폭우 등 자연재해에 안전한 건축 등 설계기준 마련
  - 세계자연유산인 한라산의 산불 사전예방을 위한 화재진화시스템 구축
  - 안전체험센터 조성, 응급의료시스템 구축, 재난예방·대응 통합관리시스템 운영
- 광역교통망의 연계 강화로 네트워크형 공간구조 형성을 유도하고 도시와 주요 읍·면 간 기능과 역할 분담 강화
- 전통문화의 보전 및 산업 기반 구축
  - 탐라문화권 복원사업 추진과 스토리텔링, 영상, 영화 등 문화관광디지털 콘텐츠 구축
  - 생태·신화공원의 성공적 추진과 돌문화공원 중심의 문화·신화·역사 프로그램 개발
  - 제주의 문화·예술 프로그램 수준 향상 및 국제적 공연 프로그램 기획을 통한 국제적 공연 관광 중심지로 조성

## 2 국제자유도시 기반 육성

- 고부가가치형 관광상품 개발과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 세계자연유산 등 세계적 브랜드 활용과 제주 지질자원의 세계유네스코 지질공원 등재를 추진하고 사계절 기후 및 날씨에 영향을 받지 않는 복합리조트 개발과 MICE 산업 육성
  - 5대 핵심 수용태세(숙박, 교통, 음식, 안내, 쇼핑)의 집중적 개선으로 선진형 관광산업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글로벌 수준의 관광서비스 제공
  - 관광수요 잠재력이 높은 신흥 유망시장을 발굴하고, 각 시장의 특성에 적합한 관광상품 개발 및 홍보 마케팅을 강화하여 재방문과 FIT 관광객 유치
  - 국제자유도시의 핵심·전략프로젝트(영어교육도시, 헬스케어타운, 휴양형주거단지 등)의 성공적 추진
  - 글로벌 금융 스탠다드에 부응할 수 있는 인적자원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제주국제자유 도시와 직접 연계될 수 있는 특화된 금융산업 육성

- 국제자유도시의 원활한 교류 지원을 위한 미래형 교통·정보 인프라 확충
  - 제주국제공항의 국제선을 확대하고, 항공수요 추이에 따라 공항시설 적기 확충
  - 도내 항만과 포구에 종합항만 기능을 보완하고, 마리나 시설 및 크루즈 기반 확충 등 휴양 관광과 연계
- 한·중·일 연계 크루즈 기반 확충, 제주항 크루즈터미널 완성, 남해안선벨트와 크루즈 연계 추진

### ③ 국제자유도시 전략산업 및 신성장동력산업 육성

- 고부가가치 국제휴양관광산업 육성
  - 골프, 승마, 요트, 마리나 등 레저·스포츠관광 육성 및 인력양성 프로그램 개발 등 관광 레저교육 양성 중심지로 육성
  - 숲길, 자연휴양림, 치유의 숲 등과 연계된 치유 프로그램과 양약, 한의약, 대체의학 프로그램이 융복합된 치유관광거점 육성
  - 항공레포츠 이착륙장에 대한 안전·시설기준 마련, 세계적 골프대회 및 요트경기 유치 등 육상-해상-항공을 연결하는 레저·스포츠 관광산업 육성
- 국제 비즈니스산업 육성
  - 세계 15위권 컨벤션 개최지로 도약하기 위한 ICC 확충 및 관련 인프라 구축
  - 국내외 인센티브 관광, 기업회의 등 리조트형 MICE 산업 육성
  - 스마트그리드 등 국제 R&D 연구센터 및 국제기구 아태지역 본부 등 유치 추진
  - 특화된 금융산업 육성을 통한 국제자유도시 기반 강화
- 해양강국을 선도하는 해양산업 육성
  - 외해 양식단지 조성, 해수·해양 유용광물 자원 개발을 위한 미래형 해양자원개발 연구단지 조성, 신재생에너지(풍력, 파력 등) 개발
  - 해양과학관, 바다스튜디오, 마리나 시설의 확대를 통한 사계절 해양관광 실현
- FTA에 대비한 친환경 1차 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및 해외시장 개척
  - FTA 확대 등에 대비한 1차 산업 수출단지 조성과 1차 산업의 생산·가공·유통·판매·체험·관광 등을 융복합화한 권역별·작목별 클러스터 조성

- 웰빙시대를 대비하여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 및 친환경농업특구 지정 확대, 악취없는 쾌적한 자원순환형 친환경 녹색 축산업 단지 구축으로 지하수 보전
  - 감귤의 연중생산체제, 신품종 개발과 생산·유통·판매조직의 거점화
  - 마(馬)산업 육성 및 관련 축제 개최 등 마산업과 레저·스포츠 산업의 연계 육성
  - 농·수·축산분야 기후변화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으로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
  - 농수산물 생산 관측, 유통, 수출, 해외정보 등을 종합하는 제주농수산물종합정보센터 운영
  - 제주 농업의 선진화 및 전문 경영생산체제 구축을 위한 농어촌 공동체회사 설립 지원
  - 농산물 해상물류비(운송비)가 지원되는 지역연합마케팅 유통산업 육성
- 향토자원과 지역특성·문화가 융합된 신성장동력산업 육성
- 지하수 보호와 농업·생활용수 확보를 위한 스마트 워터(Smart Water)생산 체제와 삼다수의 세계적 프리미엄 생수 육성
  - 제주 생물자원과 청정농산물을 활용한 식품산업, 맥주산업, 기능성 화장품 소재 및 제품 개발 지원체계 구축
  -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스마트그리드 등 연구단지, 용암해수단지와 연계한 코스메틱 밸리 조성 및 수출 전진기지화
  - 종자·종묘·종축 등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육종센터 운영

#### 4 청정환경 보전 및 녹색성장도시 실현

- 세계자연유산 등 국제적 환경자산의 보전 및 가치 증진
- 세계자연유산센터 등을 이용하여 국제적 수준의 환경교육프로그램 운영과 아시아 기후변화 교육센터, UN 환경대학원 유치 등을 추진하여 세계 최고 수준의 환경교육시스템 구축
- 차별화된 세계환경수도 조성
- 생물권보전지역, 세계자연유산, 세계지질공원 등 환경자산의 브랜드 가치를 활용하여 지역 발전의 동력으로 활용
  - 환경자원총량제 시행으로 환경용량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선보전-후개발 원칙 준수
  - 202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BAU 대비 41% 달성으로 저탄소 녹색성장도시 실현
  - 자원순환형 환경관리체계 구축, 탄소 포인트제 확대 시행과 모범적인 환경거버넌스 구축

◦ 자연환경의 체계적 보전 및 관리

- 한라산-중산간-해안-바다로 이어지는 생태축과 생물종 보호시스템 구축
- 중산간 일대 및 연안벨트, 바다생태숲 조성 등 탄소흡수원 조성
- 꽃자왈 공유화 사업 추진 등 보전지역의 체계적 보전

◦ 제주형 녹색성장도시 기반 구축

- 청정에너지 및 신재생에너지 활용을 통한 탄소중립도시 실현
- LNG 발전, 가정·상업용 LNG 보급 확대를 통한 제주도 전지역 LNG 이용체계 구축
- 해상풍력단지 조성 등을 통한 에너지 자급 실현과 해저전력케이블 양방향 구축, 지능형 전력망 구축 추진
- 신교통시스템(BRT, 경전철 등) 도입, 도내 전차량 전기자동차 이용체계 구축, 사람 중심의 녹색교통 활성화(보행환경 개선, 자전거도로 확충)를 통한 친환경 교통시스템 구축

## ⑤ 모범적 자치시스템 구축

- 제주특별자치도의 법적 지위를 강화하고 이를 토대로 지역 잠재적 가치를 극대화하여 아시아 최고 수준의 국제자유도시 건설
- 도민과 기업의 경제활동을 저해하는 각종 행정규제 완화로 주민활동이 편리하고 기업하기 좋은 수요자 중심의 일괄 행정서비스 시스템 구축
- 제주국제자유도시가 추구하는 사람, 상품, 자본의 국제적 이동과 기업활동의 편의가 보장되도록 글로벌 수준으로 규제 완화



## 부 록







## 부록 1. 2020년의 국토지표

주 요 지 표	단 위	2009년	2020년
도시화율	%	90.8	95.0
수도권 인구 비중	%	49.0	47.5
1인당 도시공원 면적	m <sup>2</sup>	7.4	12.5
매출액 대비 기업 물류비	%	9.1 (2008년)	5.5
1인당 주거면적	m <sup>2</sup>	22.8 (2005년)	30.0
상수도 보급률	%	92.7	97.5

부록 2.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2006~2020)과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2011~2020)의 비교

구 분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 (2006~2020)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 (2011~2020)
기 간	2006~2020년	2011~2020년
기 조	약동하는 통합국토의 실현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글로벌 녹색국토」
인 구	·인구 증가와 고령화사회	·인구 감소 및 초고령사회 ·다문화사회 형성
지역균형 및 국가경쟁력	·지역간 균형발전에 중점 ·수도권 과밀 억제	·광역경제권 중심의 특성화발전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중점 ·수도권의 경쟁력 강화 및 계획적 성장관리
대외개방 및 국토골격	·한반도 육지 (경성국토) ·행정구역별 접근 (7+1 경제권역) ·점적 개방(3개축)에 중점	·한반도 육지와 해양, 재외기업 활동 공간을 포함 (연성국토) ·행정구역을 초월한 광역적 접근 (5+2 광역경제권) ·대외개방 벨트 및 접경벨트(4개축) ·글로벌 개방거점 육성 등 개방형 국토 형성 추진
기후변화 및 자원 확보	·기후변화를 환경 보호 및 재해 대응 측면에서 접근 ·국내 자원 관리에 중점	·기후변화 대응 및 녹색성장을 국토계획의 기조로 설정 (환경, 산업, 교통, 도시개발, 재해 등 종합적 차원에서 접근) ·해외 자원 확보 및 공동개발 추진
지역개발 산업입지	·지역혁신체계 구축을 통한 자립적 지역발전 기반 마련 ·지역분산형 개발 정책 (행정도시, 공공기관 지방이전, 혁신도시·기업도시 건설 등) ·혁신클러스터 형성	·광역경제권 형성을 통한 지역별 특화발전 및 글로벌경쟁력 강화 ·지역특성을 고려한 전략적 성장거점 육성 (대도시 및 KTX 정차도시를 중심으로 도시권 육성) ·신성장동력 육성 및 녹색성장을 위한 新산업기반 조성

구 분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 (2006 ~ 2020)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 (2011 ~ 2020)
도 시 주 택 토 지	·기초적 삶의 질 보장 ·네트워크형 도시체계 형성	·도시재생 및 품격있는 도시 조성 ·한국형 녹색컴팩트도시 조성
	·주거복지 향상 ·임대주택 공급 확대	·주거수준의 선진화 ·인구감소·고령화에 대응한 수요맞춤형 주택정책
	·계획적 토지이용 관리 강화 (선계획-후개발)	·계획적 토지이용의 제고를 위한 개발행위허가제도 운용 ·계획적 토지이용을 전제로, 수요 변화에 대응하는 유연한 토지이용 체계 구축
교 통 물 류	·7×9 간선도로망 구축	·철도 중심의 녹색교통체계 ·기존 시설의 운영 효율화
	·행정중심복합도시와 각 지역의 연결성 강화	·광역경제권 및 초광역개발권 연계 인프라 확충
수자원 방 재 정 보	·수자원의 안정적 공급 및 수질 관리 중심	·하천의 다목적 이용 및 새로운 하천문화 창출 ·수변공간의 적극적 활용
	·예방적·통합적 방재체계 구축	·기후변화에 대응한 선제적·예방적 방재 ·도시형 재난 대책 강화
유라시아- 태평양 협력	·경제자유구역, 자유무역지역 중심의 개방·협력거점 육성	·다변화된 글로벌 개방거점 육성 (새만금, 경제자유구역, 국제자유 도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첨단 의료복합단지 등) ·한국형 도시개발 수출
	·접경지역 협력사업 추진	·남북교류·접경벨트 종합관리계획 수립 ·북한자원 공동개발 및 인적·물적 자원 지원
해 양	—	·해양자원 및 해양산업 육성을 통한 글로벌 해양국토 실현
계획의 관리 및 집행	·지방분권과 갈등조정시스템 구축	·효율적인 지역개발시스템 구축 (지역개발사업 남발 방지)
	·투자재원의 다양화와 운영 효율화	·재원 조달방식 다양화 및 재정 분담 원칙 정립

대한민국정부

